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이상신·이금순·홍석훈·윤광일·구본상·Joshua D. Kertzer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연구책임자: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구본상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Joshua D. Kertzer (하버드대학교 교수)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1/5년차)

KINU 연구총서 18-07

| | |
|---------|---|
| 발행일 | 2018년 12월 28일 |
| 저자 | 이상신, 이금순, 홍석훈, 윤광일, 구본상, Joshua D. Kertzer |
| 발행인 | 김연철 |
| 발행처 | 통일연구원 |
| 편집인 | 통일정책연구실 |
| 등록 | 제2-02361호 (97.4.23) |
| 주소 |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
| 전화 |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
|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
| 기획·디자인 | (주)계문사(02-725-5216) |
|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
| I S B N | 978-89-8479-951-6 93340 |
| 가격 | 11,000원 |

©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 | |
|---|----|
| 요 약 | 11 |
| | |
| I. 서론 이상신 | 21 |
| 1. 2018년의 통일, 평화, 그리고 여론 | 23 |
| 2. 2018년 통일의식조사 | 29 |
| 3. 2018년 조사 설계와 개요 | 32 |
| 4. 2017년~2018년의 남북관계 주요 사건 일지 | 32 |
| | |
| II. 시계열 분석: 변화와 연속성 | 35 |
| 1. 통일인식 홍석훈 | 37 |
| 2. 북한인식: 변화와 연속성 홍석훈 | 58 |
| 3. 통일·대북 정책 인식 이상신 | 72 |
| | |
| III. 통일·대북인식 결정요인 분석 | 93 |
| 1. 통일인식 결정요인 분석: 통일 효용인식, 북한 이미지, 대통령에 대한 평가 구분상 | 95 |

| | |
|---|------------|
| 2. 북한인식 결정요인 분석: 국가정체성, 애국심 그리고 대북태도 윤광일 | 142 |
| 3. 북한주민 인식 결정요인 분석: 이미지, 비인간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 Joshua D. Kertzer ... | 190 |
| I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이금순 | 217 |
| 1. 연구 결과 | 219 |
| 2. 정책적 함의 | 225 |
| 참고문헌 | 229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45 |

표 차례

| | |
|---|-----|
| 〈표 II-1〉 연령별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태도 | 41 |
| 〈표 II-2〉 분단 손해 > 통일비용 | 47 |
| 〈표 II-3〉 통일문제보다 경제문제가 우선 | 50 |
| 〈표 II-4〉 통일한국의 목표 | 54 |
| 〈표 II-5〉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92 |
| 〈표 III-1〉 통일이익에 대한 인식에 따른 유형 구분 | 110 |
| 〈표 III-2〉 회귀모형 결과(종속변수: 통일의 필요성) | 118 |
| 〈표 III-3〉 회귀모형 결과(종속변수: 평화공존, 민족주의 통일) | 124 |
| 〈표 III-4〉 회귀모형 결과(종속변수: 통일세 찬성, 통일편익론) | 126 |
| 〈표 III-5〉 회귀모형 결과(종속변수: 경제우선, 당면 목표) | 130 |
| 〈표 III-6〉 회귀모형 결과(종속변수: 모든 것 감내, 나의 소망) | 133 |
| 〈표 III-7〉 주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 160 |
| 〈표 III-8〉 사회경제변수와 정치이데올로기, 탈물질주의, 기본가치 평균비교 | 162 |
| 〈표 III-9〉 연령집단별 북한 평가 | 165 |
| 〈표 III-10〉 북한에 대한 관심 | 166 |
| 〈표 III-11〉 남북한 통일 필요성 | 167 |
| 〈표 III-12〉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에 대한 동의 | 168 |

| | |
|---|-----|
| 〈표 Ⅲ-13〉 통일 시기 | 169 |
| 〈표 Ⅲ-14〉 “나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에 대한 동의 | 170 |
| 〈표 Ⅲ-15〉 한국인 애국심 분포 | 171 |
| 〈표 Ⅲ-16〉 사회경제변수와 애국심 평균 비교 | 174 |
| 〈표 Ⅲ-17〉 애국심과 북한 평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 | 178 |
| 〈표 Ⅲ-18〉 건설적 및 맹목적 애국심과 북한 평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 | 181 |
| 〈표 Ⅲ-19〉 애국심과 통일 태도에 대한 순위프로빗 모형 | 183 |
| 〈표 Ⅲ-20〉 건설적 및 맹목적 애국심과 통일 태도에 대한 순위프로빗 모형 | 186 |
| 〈표 Ⅲ-21〉 고정관념 내용의 예측변수 | 203 |
| 〈표 Ⅲ-22〉 비인간화 예측변수 | 208 |
| 〈표 Ⅲ-23〉 통일에 대한 입장 예측변수 | 212 |

그림 차례

| | |
|---|----|
| 〈그림 II-1〉 통일의 필요성 | 37 |
| 〈그림 II-2〉 연령대별 통일의 필요성 | 38 |
| 〈그림 II-3〉 남북의 평화공존 조건하에서 통일은 필요 없다 | 39 |
| 〈그림 II-4〉 연령별 통일 당위성: “반드시 하나의 국가일 필요는 없다” .. | 40 |
| 〈그림 II-5〉 ‘남북통일이 진정한 소망이다’에 대한 응답 | 41 |
| 〈그림 II-6〉 통일을 위한 세금 인상 찬성 여부 | 42 |
| 〈그림 II-7〉 한국 사회의 당면 목표로서의 통일에 대한 동의 여부 | 43 |
| 〈그림 II-8〉 통일이 자신의 삶에 주는 영향력 평가 | 44 |
| 〈그림 II-9〉 통일의 이유 | 45 |
| 〈그림 II-10〉 통일로 인한 국가 편익 | 47 |
| 〈그림 II-11〉 통일의 개인에 대한 편익 | 48 |
| 〈그림 II-12〉 통일의 북한주민에 대한 편익 | 49 |
| 〈그림 II-13〉 통일문제보다 경제문제 시급성 동의 | 51 |
| 〈그림 II-14〉 통일의 방식 | 52 |
| 〈그림 II-15〉 통일의 시기 | 53 |
| 〈그림 II-16〉 통일 이후 계층갈등에 대한 의견 | 55 |
| 〈그림 II-17〉 통일 이후 이념갈등에 대한 의견 | 56 |
| 〈그림 II-18〉 통일 후 북한 지역 이주에 대한 의견 | 57 |
| 〈그림 II-19〉 북한에 대한 관심도 | 58 |
| 〈그림 II-20〉 북한에 대한 비교 인식 | 60 |

| | |
|---|----|
| 〈그림 II-21〉 2018 북한 정보 획득 경로 | 60 |
| 〈그림 II-22〉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신뢰도 | 61 |
| 〈그림 II-23〉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 추구 의견 | 62 |
| 〈그림 II-24〉 남북신뢰에 대한 북한 불신 | 63 |
| 〈그림 II-25〉 북한 체제에 대한 항목별 인식 | 64 |
| 〈그림 II-26〉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 | 66 |
| 〈그림 II-27〉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 66 |
| 〈그림 II-28〉 북한주민들의 통일추구 | 67 |
| 〈그림 II-29〉 북한의 적화통일 의도 | 68 |
| 〈그림 II-30〉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 | 70 |
| 〈그림 II-31〉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 73 |
| 〈그림 II-32〉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하면 남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75 |
| 〈그림 II-33〉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 77 |
| 〈그림 II-34〉 스포츠나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 79 |
| 〈그림 II-35〉 대북 전단 풍선 보내기, 라디오 방송, 확성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80 |
| 〈그림 II-36〉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 81 |
| 〈그림 II-37〉 북한에 조건 없는 식량 원조를 해야 한다 | 82 |
| 〈그림 II-38〉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중지해야 한다 | 84 |
| 〈그림 II-39〉 개성공단 폐쇄는 옳은 결정이다 | 85 |

| | |
|--|-----|
| 〈그림 II -40〉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 | 85 |
| 〈그림 II -41〉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 87 |
| 〈그림 II -42〉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는 도입되어야 한다 | 88 |
| 〈그림 II -43〉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 90 |
| 〈그림 II -44〉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91 |
| 〈그림 III -1〉 통일의 필요성(시계열) | 113 |
| 〈그림 III -2〉 북한의 이미지(협력대상-적대대상) 산점도 | 114 |
| 〈그림 III -3〉 통일 효용성 인식 유형, 2014~2018 | 116 |
| 〈그림 III -4〉 연령별 통일의 필요성 인식 확률: 모형 1-(3) 적용 | 137 |
| 〈그림 III -5〉 세대별 정치이념 평가 분포 | 163 |
| 〈그림 III -6〉 남한국민의 각국 주민 이미지 | 199 |
| 〈그림 III -7〉 비인간화 점수분포 | 200 |
| 〈그림 III -8〉 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연령의 효과 | 206 |

요 약

통일연구원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의 통일의식조사 및 분석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진행되었다. 첫째, 통일, 북한, 통일·대북 정책의 변화를 측정하는 ‘핵심 문항(core items)’을 강화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둘째, 이 핵심 문항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를 확장하여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가능케 하려 노력했다. 셋째, 남북관계에 관심 있는 해외의 연구자들을 위해 데이터와 설문지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연구 1부의 시계열 분석에서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일 및 북한인식, 그리고 통일·대북 정책 선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보았다. 2부에서는 통일 및 대북인식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보다 심화된 모델과 다양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인과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부: 시계열 분석

1. 통일인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크게 반등했으며,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통일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는 낙관집단 비율이 증가하였다. 동시에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면 통일이 필요 없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통일 이후 나타나게 될 갈등 및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일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때, 통일 이후에 발생하게 될 계층 및 이념갈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더욱 깊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북한인식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핵개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과 한반도 긴장 상황은 오히려 북한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유추된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도 우리 사회의 북한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당위론적 통일론과 국가 중심(state's actor)의 제도론적 접근법은 사회, 문화 중심의 민간 차원의 남북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의 제한성을 불러왔으며, 오랜 군사적 남북 긴장감 조성은 북한 핵문제와 개인생활을 분리하여 사고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젊은 세대의 북한 무관심 증대는 미래 남북관계의 활성화와 남북통합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통일·대북 정책 인식

첫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같이 지지한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북정책과 방향성이 같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통일과 남북관계의 협력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매우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는 민족주의적 통일에 대한 열망보다 오히려 이러한 현실적인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2018년에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통일보다 평화공존이 우선”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2018년에 6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72%의 응답자들이 찬성하고 있었다.

2부: 통일·대북 정책 인식 결정요인 분석

1. 통일인식 결정요인 분석: 통일 효용인식, 북한 이미지, 대통령에 대한 평가

첫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강할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긍심이 강할수록 통일과 관련한 비용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통일을 당면 목표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고, 본인의 소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통일이 개인과 국가에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효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보았을 때,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응답자가 거의 과

반에 달했다. 통일이 개인과 국가 모두에 이익이 아니라고 여기는 응답자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통일을 위해 감내해야 할 희생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만, 평화공존에는 긍정적이었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은 늘었으나, 성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적게 인식하지만, 젊은 연령대 여성에서는 동 연령대 남성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에 대한 이미지 역시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매우 강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우선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상충적이지는 않아 협력의 대상이자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도 높았다. 통계 결과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덜 적극적이었으며, 평화공존과 통일의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통일편익론’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통일을 위한 비용 부담 등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오히려 통일의 필요성에 더 적극적이었고, 상대적으로 평화공존에는 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통일을 위한 비용 부담 등에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2. 북한인식 결정요인 분석: 국가정체성, 애국심 그리고 대북 태도

첫째, 현재 한국인들 대다수가 국민으로서,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다만, 군사력과 공정한 사회적 대우 분야에서만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인이 반수를 넘지 못했다.

둘째,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애국심과

애국심의 특정 개념(건설적, 맹목적, 상징적 애국심), 그리고 애국심 관련 개념(내셔널리즘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지표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애국심이 높아질수록 북한을 경계 또는 적대대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지원 또는 협력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적 애국심은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을 높이고 경계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하여 내셔널리즘과 맹목적 애국심은 북한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한 독립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애국심 일반과 건설적 애국심은 통일에 대한 추상적 선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맹목적 애국심은 대체로 의미 있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 관련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관련 연구와 대조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통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재 한국인의 애국심은 북한을 적어도 편견과 적대의 대상인 외집단으로 여기게 하지는 않기에 통일에 대해 긍정적 함의를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북한주민 인식 결정요인 분석: 이미지, 비인간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

정치심리학의 여러 이론체계(이미지 이론, 고정관념, 비인간화 등)를 차용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성격, 근원, 결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북한주민에 대해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중간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보였으나, 자국민인 한국인에 비해 확연히 덜 따뜻하고 무능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해 자국민과

비슷하게 유능하면서 덜 따뜻하게 인식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다.

둘째, 북한주민과 일본인에 대한 비인간화는 유사한 양상으로, 주로 인간의 고유성보다는 인간의 본성 관련 특징을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동물적 비인간화보다는 기계적 비인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젊은 한국인이 나이 든 한국인에 비해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비인간화를 하는 등 세대 간 격차가 뚜렷했다. 고정관념에서도 남성 응답자, 보수성향의 응답자, 서울 외 거주자가 유사한 패턴을 드러냈으며, 인간의 본성 관련 비인간화 정도는 서울 외 거주자와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북한주민을 덜 따뜻하게 인식하거나 그들의 인간의 본성 관련 특성을 부정하는 비인간화를 하는 한국인은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확연히 낮고 통일을 위한 개인적 희생 의지도 확연히 적었다.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18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남북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 관련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인식 관련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우리 국민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애국심과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이 높을수록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대상’보다는 ‘지원 및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애국심 고양을 통해 남북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인간의 본성 관련 특징을 부정

하는 ‘기계적 비인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 관련 정보 및 교육이 정치체제 위주가 아닌 ‘인간으로서 북한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 발전 및 협력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경제적 이익 등 구체적인 편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화하여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여성과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주제어: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북한, 통일, 양적분석, 여론조사, 시계열 분석

Abstract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Policies with Civic Engagement

Lee, Sang Sin et al.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re witnessing yet another dramatic changes initially sparked by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conducted a face-to-face interview among 1,000 South Korean adults on April 2018 analyzing a change of their perception toward unification, North Korea, and policy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Through an analysis of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an aim to contribute to the government's policy-making and the promotion of unific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INU has performed the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since the 1990s and in 2014 overhauled the structure of the survey. This year's survey allows tracking of perceptual changes over the past five years by compiling data obtained since 2014. In addition, raw data was translated into English so that researchers abroad who are interested in this research

can also take part in this research. Furthermore, Professor Joshua D. Kertzer at the Harvard University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and analyzed South Koreans' view on North Korean residents.

Overall,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initiat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2017, have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South Koreans' perception toward unification and North Korea. The number of people who agree with the necessity for unification has risen as well as the positive views on the need for engagement with North Korea. Meanwhile, the research found that South Koreans' fear of nuclear threats from North Korea has been alleviated to some extent. It also reveals that there has been a deepening gap per gender and generation over the view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t was evaluated that the younger, rather than the older, and women, rather than men, are more likely to have a negative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lso, the research suggests that the Daegu·Gyeongbuk region holds the most negative perception of unification and North Korea.

Keywords: KINU Unification Survey, North Korea, Unification, Data analysis, Survey research, Time series analysis.



I

서론

이상신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 2018년의 통일, 평화, 그리고 여론

이 연구는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대면면접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난 1년간 국민들이 북한, 통일, 대북정책, 그리고 탈북자와 북한주민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8년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그리고 이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에서 특기할만한 사건이 숨 가쁜 속도로 이어진 한 해였다. 2018년 10월 현재 남북정상이 세 번의 회동을 가졌으며, 북미정상 간의 만남 또한 6월의 1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연내에 2차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빠르게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따라 국민의 여론 또한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특히, 1월 17일 판문점에서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구성과 개최식 공동참가 등이 합의된 직후에 발생한 여론 변화는 큰 주목을 받았다.

여론조사회사인 리얼미터의 자료에 따르면,¹⁾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1월 첫째 주까지 71.6%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북 간 올림픽 단일팀 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대통령 지지율은 60.8%까지 떨어진다. 올림픽에 뒤이은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3월 셋째 주에는 69.1%까지 회복되었다.

2017년 5월 당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70%를 넘나드는 매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왔으나, 그것이 깨진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남북단일팀 합의 직후의 여론 반전이었다. 물론 그 지지율 저점이었

1) “리얼미터 주간집계: 2018년 2월 4주차,” 『리얼미터』, 2018.2.,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18/03/주간통계표2월4주.pdf>> (검색일: 2018.10.10.).

던 60.8% 또한 이전 대통령들의 지지율 추이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 1월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현상은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당선 직후부터 올림픽 단일팀 합의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을 매우 분명히 밝혔으며, 이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직후,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2018년 1월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engagement)를 통해 평화 분위기를 유도하고, 북미 간 최고지도자의 대화를 이끌어내어 북한 비핵화 이슈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평창올림픽 시기의 지지율 저하는 대북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지율 저하는 특히 20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발생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한 20대의 불만, 특히 남북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불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세대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대와 30대, 4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50대 및 60대 이상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²⁾ 그런데 1월의 지지율 저하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2) 리얼미터가 2018년 10월 초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4.6%, 부정 비율이 29.9%였다. 이를 세대별로 나누어 비교하면 20대의 긍정평가 비율이 65.2%, 30대가 80.3%, 40대가 75.5%인 반면 50대는 53.0%, 60대는 54.5%였다. “리얼미터 주중집계: 2018년 10월 1주차,” 『리얼미터』, 2018.10.,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18/10/>

지지 기반인 20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리서치에서 2018년 1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0명 중 2030세대의 82%가 남북단일팀 구성에 부정적이었다.³⁾ 올림픽 개·폐회식에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에 입장하는 문제에서도 여론이 긍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00명 중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0.5%였던 반면, 태극기와 인공기를 각각 들고 입장하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자 비율은 49.4%로 훨씬 높았다.⁴⁾

언론에서는 여자하키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이 구성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남한의 하키 선수들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공감이나 이러한 지지율 저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 중앙일간지의 칼럼에서는 20대 여성 취업준비생을 인용하며, “한국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상황이 꼭 내 처지 같다”며 ‘열심히 준비해 겨우 면접 기회를 얻었는데 낙하산 응시생과 같이 면접 보라는 꼴 아니냐’고 정부를 성토했다는 글이 실리기도 했다.⁵⁾ 북한과의 경제적·정치적 협력이 가져올 남북관계의 평화가 반드시 나 개인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젊은 세대의 불안감이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와 앞서 인용한 분석에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월의 지지도 하락이 흥미로운 이유는 무엇

주중통계표18년10월1주_최종.pdf> (검색일: 2018.10.10.).

3) “한반도기를 보는 2030의 분노,” 『주간조선』, 2018.1.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6/2018012602111.html?Dep0=twitter&d=201801260211> (검색일: 2018.2.5.).

4) “tbs 현안조사: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남북동시입장 사용 기(旗)에 대한 국민의견,” 『리얼미터』, 2018.1., [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18/01/tbs-리얼미터현안조사-보도통계표_평창올림픽-개-폐회식-남북-동시입장-사용-기\(旗\)에-대한-국민의견_최종.pdf](http://www.realmeter.net/wp-content/uploads/2018/01/tbs-리얼미터현안조사-보도통계표_평창올림픽-개-폐회식-남북-동시입장-사용-기(旗)에-대한-국민의견_최종.pdf) (검색일: 2018.10.10.).

5) “단일팀에 화가 난 2030세대에게,” 『중앙일보』, 2018.1.30.

보다도 남북관계의 정치·경제·문화·스포츠 교류 및 협력이 정책 당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진 거의 최초의 사례라는 것이다. 물론,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되는 문재인 정부의 이전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보이는 면이 있다. 또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질 때마다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하는 관계는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단일팀 논란, 그리고 이에 따른 일시적 지지율 하락에서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과의 협력이 반드시 국민들의 호응을 가져온다는 전제는 이제 버려야 한다. 평화와 협력은 공짜가 아니며,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북한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용을 어떤 식으로 분담하는가에 대해 이제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특히, 낮은 취업률과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한국의 20대들은 그들에게 지워진 부담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남북 간의 평화라는 대의에 공감할지라도, 그 대의를 위한 희생이 특정 집단에게 집중된다는 인식에 20대가 반감을 품은 결과가 1월의 지지도 하락 사태일 것이다. 즉,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특히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과 평화에 대한 설득 방식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시에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방안을 새롭게 구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명칭으로 제안된 이후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 정

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이 통일방안은 왜 통일이 필요한지 젊은 세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한계점을 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사례로 2018년 3월에 발의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들 수 있다. 이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의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킬 국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⁶⁾ 이 변화 취지에 대해서 개헌안은 “사회 변화와 다문화·다민족 시대를 맞아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 노력 의무도 그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온 ‘민족문화의 창달’ 대신, 국가가 문화의 자율성 및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출산율의 저하 및 세계화의 영향에 따라 2017년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2백2십만 명에 달한다(장기체류 1,583,099명, 단기체류 597,399명, 불법체류 251,041명).⁷⁾ 다문화주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단일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방안의 설득력이 높지 않은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문화 다양성을 포괄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당위성의 근거를 찾는 작업이 시급한 것이 이 때문이다. “누가 평화와 통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이들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문적으로는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가 국내 정치에 대한 태도와 높은 상관관련성을 갖는다는 기존의 남남갈등⁸⁾ 이론에

6)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N8H0U3D2M6Y1W4W5I9F4R0K4P8Z5> (검색일: 2018.10.10.).

7) e-나라지표, “체류 외국인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검색일: 2018.10.10.).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남한 정치에서의 갈등구조는 지금까지 지역, 이념, 계층, 세대 등의 균열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가 다른 갈등 균열 및 개인의 이념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남남갈등 이론이다.⁹⁾ 그런데,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대한 20대의 반응을 보면 이들은 이념적으로 그 윗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면서도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보수적인 면을 보인다. 즉, 특정 정책 혹은 사안에 관련되어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 20대라 하더라도, 이러한 보수적 북한관·통일관이 정치이념에서의 보수로 반드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해 타협적이고 협력을 선호하는 진보’ 그리고 ‘북한을 적대시하고 압박정책을 선호하는 보수’라는 이분법이 더 이상 적실성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서 사회경제적 이슈에서는 진보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 및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사회경제적으로 보수를 자처하면서도 대북문제에서는 협력을 선호하는 ‘보수적 햇볕론자’의 등장도 가능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2018년의 숨 가쁜 남북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민 여론 변화는,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설득하고 동원하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시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8) 주봉호, “남한사회 남남갈등의 양상과 해소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17권 3호 (2012), pp. 69~145; 권숙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제28권 1호 (2012), pp. 51~69;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2호 (2007) pp. 31~59 참조.

9)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4), p. 188; 강원택, “한국 정치의 이념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1호 (2003), p. 24.

2. 2018년 통일의식조사

통일연구원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1,000명 정도를 조사하여,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선호 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작된 통일의식조사는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된 국내 최초의 조사였다. 이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가 2007년 시작되었고, 동아시아연구원 여론조사나 한국종합사회조사 등에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현재도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통일 관련 여론조사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몇 년의 공백기를 갖기도 했으나, 2014년 이후에는 조사문항을 대폭 일신하여 기존의 다른 통일 관련 여론조사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새로운 이론과 분석을 위한 도구로 거듭나고 있다. 이 조사는 200여 개의 다양한 문항을 통해 국민 여론의 흐름을 분석한다. 이 중 핵심 문항(core items) 혹은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통일에 대한 태도 문항; ② 북한에 대한 태도 문항; ③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선호 문항. 이 핵심 문항들은 매년 큰 변화 없이 같은 질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시간에 따른 여론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핵심 문항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독립변수는 참여 연구자들의 요청 및 시의적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그 내용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또한, 여론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외생변수를 반영하기 위해 그 해 벌어진 정치적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도 개발하

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조사에서는 4월 27일의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과 2017년 5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문항 등이 들어갔다.

‘2018년 KINU 통일외식조사(이하 KINU 통일외식조사)’의 문항 설계 및 데이터 이용을 위해서 아래의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핵심 문항(core items)의 강화와 개발

통일외식조사의 목적은 (1) 한국 국민들이 통일과 북한, 그리고 통일·대북 정책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2) 왜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핵심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항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질문들은 개인에 따라서는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이 실제로는 통일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설문조사에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대부분 통일 관련 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은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통일연구원의 통일외식조사에서는 이 질문에 더해 14개의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문항을 개발하여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북한과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들 또한 기존의 어떤 통일외식조사보다도 더 다양한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의 확장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일의식조사의 목적은 단지 한국 국민들이 통일 혹은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풍부한 독립변수를 통해 이러한 태도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2018년 조사에서는 기존에 다른 연구에서 사용되고 그 적실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독립변수들을 대폭 채용함으로써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려 하였다. 2018년 조사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애국심, 민족정체성, 대인신뢰도, 권위주의, 사회지배 경향(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 다문화주의 척도, 비인간화 척도 등이며 여기에 기본적인 정치이념 및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가 포함된다.

▷ 해외 연구자들을 위한 데이터 제공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요한 관심사이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서 한국 국민들이 통일과 북한을 인식하고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는 많은 외국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 수요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는 원자료(raw data)의 미비로 외국 학자들이 한국인들의 통일인식 및 북한인식을 연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2018년 조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드북과 집계표를 영어로 번역, 관심 있는 외국 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하버드 대학교의 조슈아 커처(Joshua D. Kertzer) 교수는 조사의 문항 설계 단계부터 함께했으며, 비인간화(dehumanization) 척도 및 위기성향 척도 등은 커처 교수의 제안으로 포함된 것이다.

2018년 조사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의 통일의식조사 원자료 전

체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외 학계 및 언론 등의 한국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 2018년 조사 설계와 개요

| 구분 | 내용 |
|------|---|
| 모집단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 표집틀 | 2018년 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표집 |
| 표집방법 | 2018년 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른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추출 |
| 표본크기 | 총 1,002명 |
|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
| 조사방법 | 대면면접조사(Personal Interview: PI) |
| 조사일시 | 2018년 4월 5일~4월 25일 |
|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

4. 2017년~2018년의 남북관계 주요 사건 일지

여기서는 연합뉴스를 참고하여 2018년 조사 전후에 벌어진 남북 관계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다. 2018년 KINU 통일 의식조사를 위한 대면면접은 4월 5일과 4월 25일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이는 남북관계에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요한 사건이 가장 적었던 시기를 골랐기 때문이다. 1,000명을 대면조사하기 위해서는 통상 3주에서 4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조사기간 중 선거나 정상회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벤트가 벌어지면 그 사건 앞뒤로 국민들의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의 통

일의식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연례조사기 때문에, 되도록 이러한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는 기간을 골라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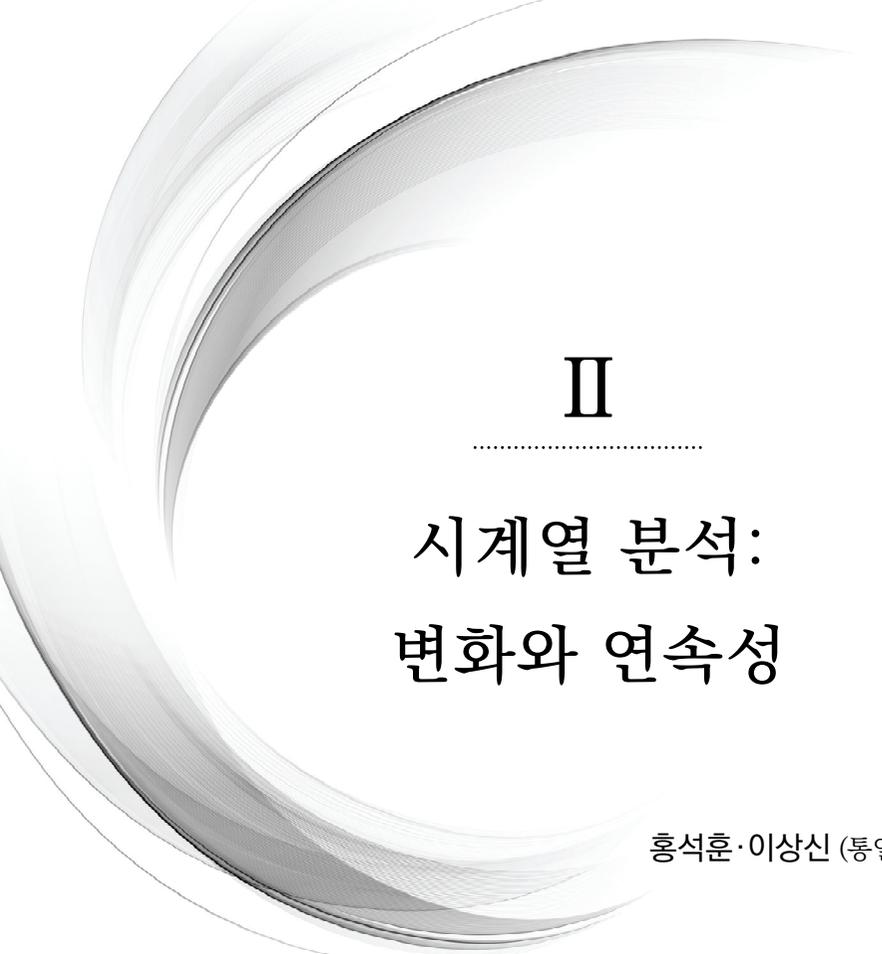
▷ 2017년

- 5.10. = 문재인 정부 출범.
- 5.14. = 북한, 평안북도 구성서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 발사.
- 5.26. =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단체 대북접촉 승인.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 최초.
- 7.6. = 문재인 대통령, 독일 퀴르버재단 연설서 ‘베를린 구상’ 발표.
- 9.3. = 북한, 제6차 핵실험.
- 9.21. = 문재인 정부, 국제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의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공여기로 결정.

▷ 2018년

- 1.1. =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용의 천명.
- 1.2. = 정부, ‘1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개최’ 북에 제의.
- 1.9. = 남북고위급회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북한 대표단 방남 합의.
- 2.9.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 파견.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동행.

- 2.10. = 북한 고위급대표단,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접견.
김정은 위원장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 의사 전달.
- 3.5. = 대북특별사절단(수석특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평양 방문. 김정은 위원장 면담.
- 3.6. = 대북특별사절단, 4월 말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개최 발표.
- 3.29. =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 4.3. =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북 예술단 평양서 합동 공연.
- **4.5.~4.25. = KINU 통일의식조사 기간**
- 4.27. =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상회담(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
- 5.24.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 5.26. =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차 정상회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
- 6.12.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
- 6.13.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I

시계열 분석: 변화와 연속성

홍석훈·이상신 (통일연구원)

1. 통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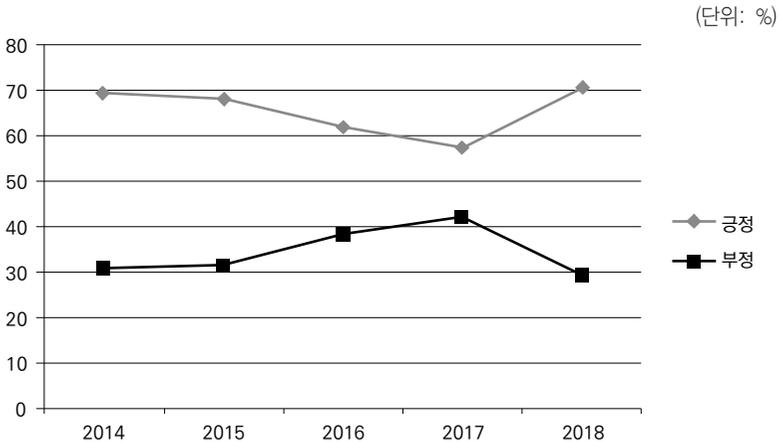
홍석훈(통일연구원)

가. 통일의지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인식 분야에서 가장 핵심요소는 통일에 대한 국민의 필요성 인식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은 2014년 이후 지속해서 조사한 변수로서 다른 통일 관련 조사에 사용되는 문항과는 다르게 중간 답변 없이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민의 통일의 필요성 찬반의 분명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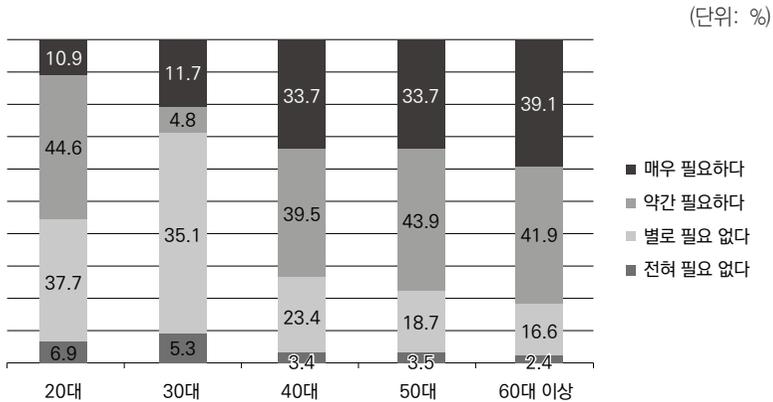
<그림 II-1> 통일의 필요성



2018년도 응답자의 모든 계층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 비율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2018년도 20대, 30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5.4%와 59.6%로 40대~60세 이상(70%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통일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작년 대비 12.0% 상승한 70.7%로 나타나면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년도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높았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가장 높은 답변을 내놓았다(진보: 73.7%; 중도: 69.3%; 보수: 69.4%). 또한 진보성향의 정당 지지 선호 응답자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보수성향 지지 응답자에 비해 높았다(정의당: 83.3%; 더불어민주당: 79.2%; 바른미래당: 77.1%; 자유한국당: 66.9%; 민주평화당: 40%).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80%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이 57.8%로 가장 낮았다.

〈그림 11-2〉 연령대별 통일의 필요성



(2) 통일에 대한 구체적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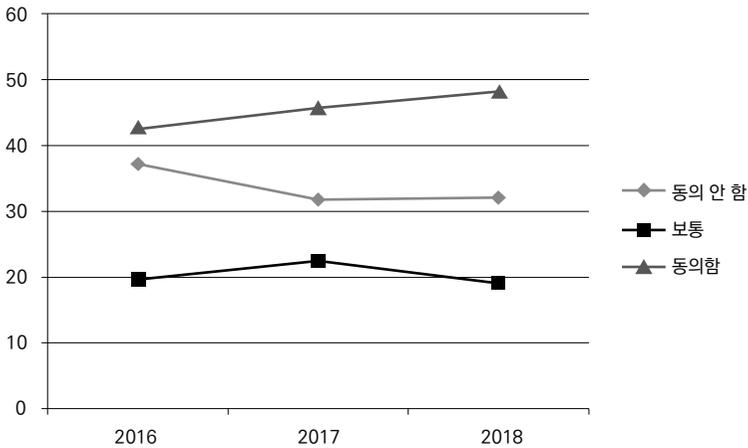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에 대해 응답자의 동의 여부를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5점: 매우 동의함)로 조사하였다.

(가)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비율은 2018년에 많이 증가하였으나, ‘평화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즉 평화가 공존된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거의 과반에 이른다.

<그림 11-3> 남북의 평화공존 조건하에서 통일은 필요 없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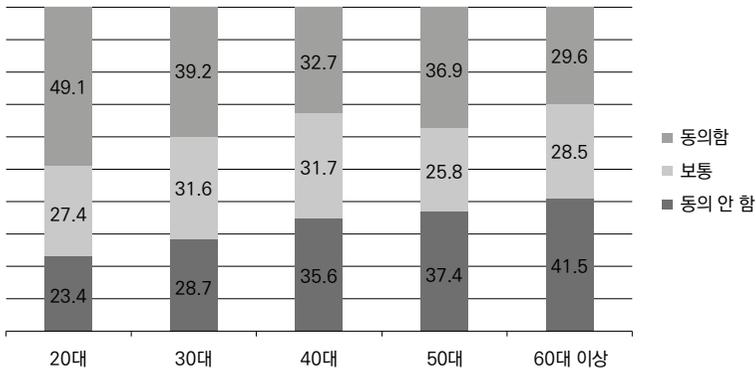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화공존할 수 있다면 꼭 통일을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응답자에서 세대 간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사항은 20대(58.3%)가 평화공존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타 연령대가 40%대에 있다는 것을 비교해 보자면, 젊은 세대는 통일에 대한 지지 성향과 평화공존에 대한 지지 성향이 공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일 필요는 없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묻는 설문이다. 2017년 이후 설문에 포함된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연령대에 따라 답변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즉 20대 응답자의 거의 절반 가량은 민족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19세와 20대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평화공존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령대별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4〉 연령별 통일 당위성: “반드시 하나의 국가일 필요는 없다”

(단위: %)



당위론적 통일론에 젊은 세대가 부정적인 이유를 설명하자면, 젊은 연령대에서 남과 북을 분리하려는 경향 또는 북한을 ‘타자화’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가설을 들 수 있다. 현재 20대 및 30대 초반의 경우 민족통일담론보다는 평화통일담론에 근거한 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차이는 젊은 연령대의 경우 북한을 대한민국과 분리하고 타

국으로 보려는 입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타자화’ 또는 ‘분리주의’ 경향은 이들로 하여금 민족통일 당위성에 동의하지 못하고,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응답을 끌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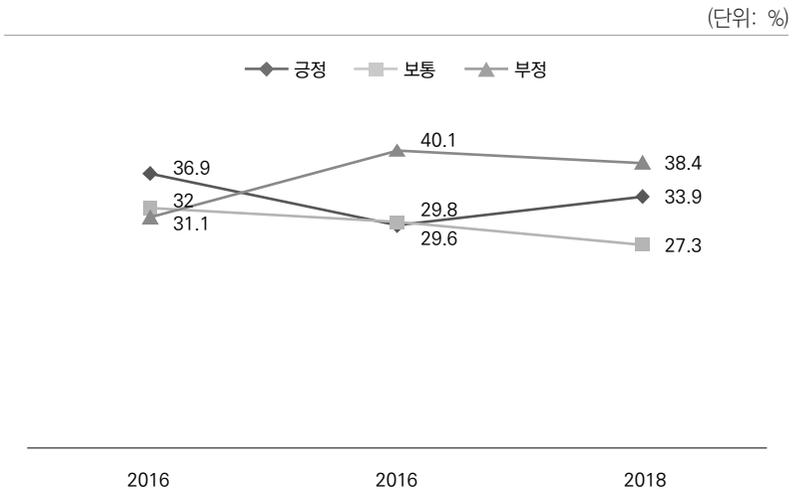
〈표 II-1〉 연령별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통일에 대한 태도

(단위: %)

| 연령 | 단일민족국가 긍정 | 보통 | 단일민족국가 부정 |
|-------------|-----------|------|-----------|
| 만 19세~만 29세 | 23.3 | 27.4 | 49.1 |
| 만 30세~만 39세 | 28.7 | 31.6 | 39.2 |
| 만 40세~만 49세 | 35.6 | 31.7 | 32.7 |
| 만 50세~만 59세 | 37.4 | 25.8 | 36.9 |
| 만 60세 이상 | 41.5 | 28.5 | 29.6 |

(다)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그림 II-5〉 ‘남북통일이 진정한 소망이다’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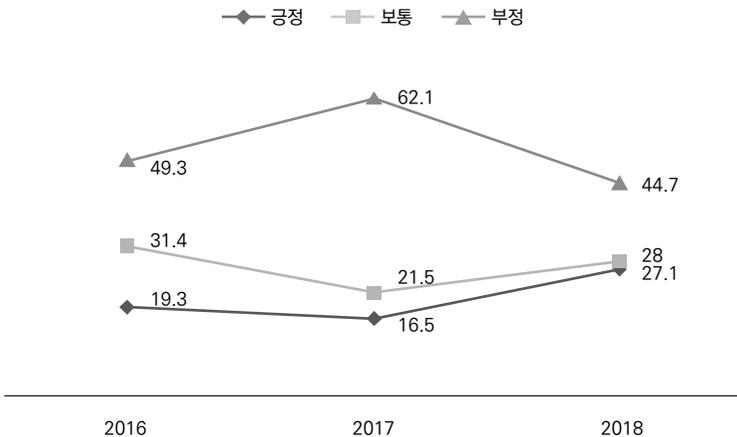


올해에도 남북통일에 대한 소망 인식에서 여전히 부정적 의견(38.4%)이 긍정적 의견(33.9%)보다 높았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긍정적 의견이 4.1% 상승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식이 2016년도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 광주·전라 지역 응답자의 49%가 통일이 진정한 소망이라고 답하였고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54.5%의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라는 개인적 소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의견보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라) 나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

〈그림 II-6〉 통일을 위한 세금 인상 찬성 여부

(단위: %)



통일을 위한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2016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018년도 긍정적 의견에 27.1%가 응답하였고, 부정적 의견은 작년 대비 17.4% 감소한 44.7%가 답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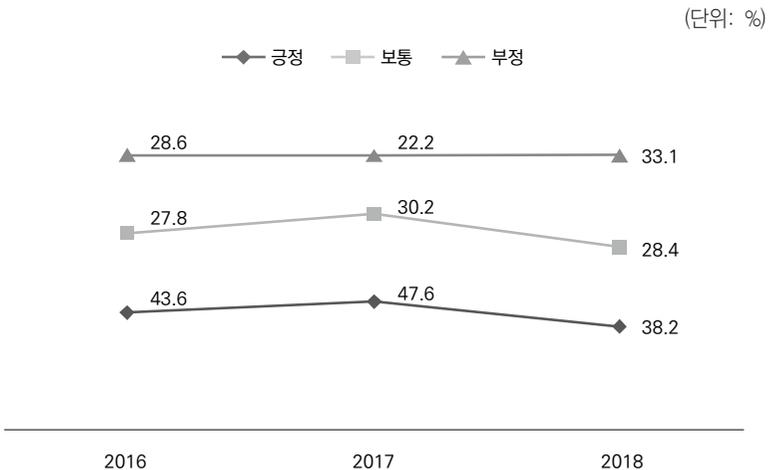
였다. 작년 대비 부정적 의견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부담감은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 30대는 타 연령층에 비해 부정적 의견이 50% 이상 집계되었는데(20대: 57.7%; 30대: 50.9%), 이러한 젊은 세대의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우려는 통일보다는 현실적 경제문제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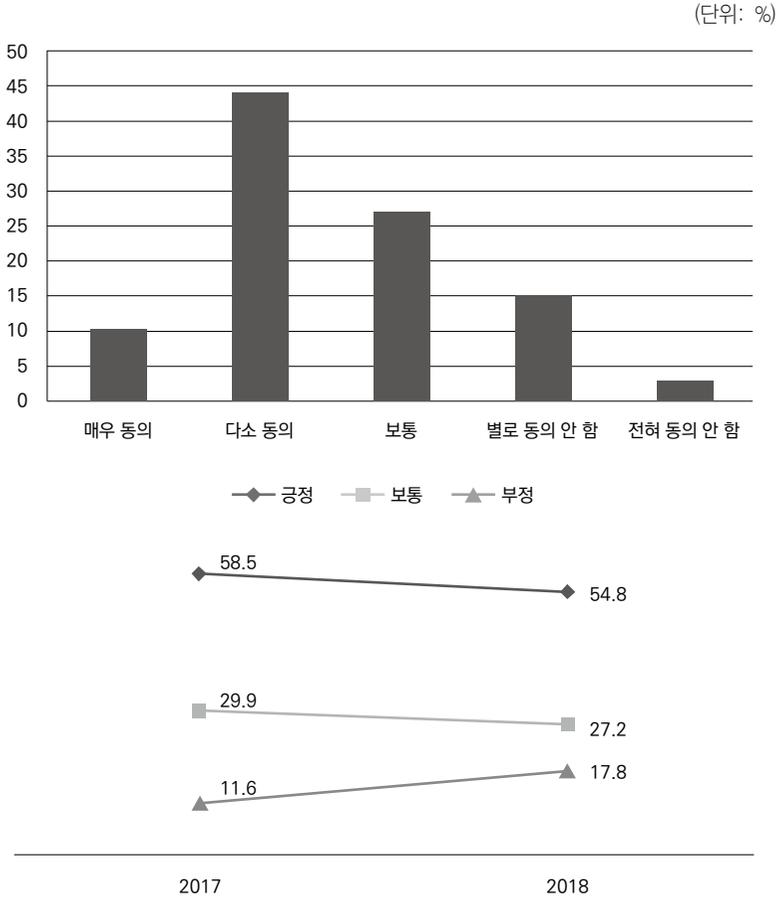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통일이 당면한 과제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38.2%(매우: 7.5% + 다소: 30.75%)로 전년 대비 10.9%가 감소하였다. 20대 찬성 응답자가 45.7%로 가장 높았고, 30대도 40.9%가 찬성하였다. 60대 이상의 동의 비율이 36.9%로 가장 낮았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40.7%였으며, 자신을 중도(50.1%)와 진보(49.2%)라고 규정한 응답자의 동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II-7〉 한국 사회의 당면 목표로서의 통일에 대한 동의 여부



(바)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내 생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림 11-8〉 통일이 자신의 삶에 주는 영향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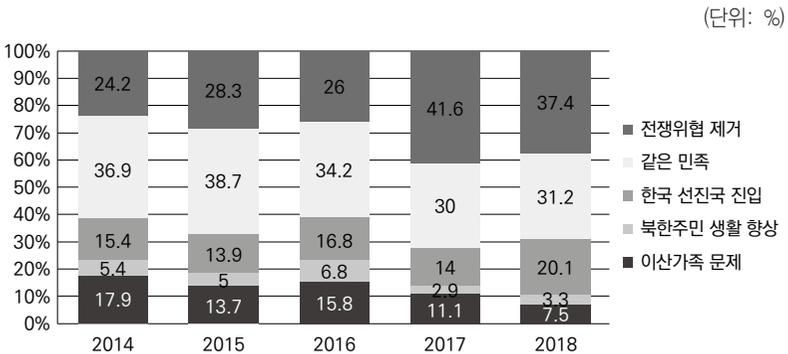
한반도 통일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4.8%가 ‘자신의 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결국 통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다. 응답자의 불과 17.8%만이 자신들의 삶과 통일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20대가 60.6%로 연령

별 가장 높은 찬성도를 보였다. 젊은 세대는 통일과 자신의 일을 연 관시키지 않는 경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NU 통일의식조 사를 분석해 보면, 결국 국민들은 통일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개 연성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전년도 대비 찬성의견에 3.7%가 줄어들었고, 부정적 의견 에 6.2%가 더 답하고 있어 통일문제가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음에 제고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그림 II-9> 통일의 이유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중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37.4%)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집계되었다. 그 다음 으로 ‘같은 민족이니까’(31.2%),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서’(20.1%),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7.5%), ‘북한주민 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3.3%) 순으로 정해졌다.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같은 민족’에서 ‘전쟁위협 제거’로 바뀌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통일의 이유가 같은 민족으로서의 당위적 통일인식이 강하였

다가 남북 간 긴장 상황이 커지고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하면서 평화정착이 우선적 이유로 등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통일의 가장 큰 이유가 전쟁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통일정책 입안과 실행에 있어 한반도 평화정착이 우선적 과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제거되고 평화정착이 실현될 수 있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나. 통일비용·편익과 경제문제

통일에 대한 인식 중에서 통일편익과 경제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 경제 불황과 미중 간 경제마찰로 인해 우리 사회의 현안 중 경제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제고와 경제문제의 시급성이 통일인식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냐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통일비용 문제와 경제적 중요성 인식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1) 분단 손해가 통일비용보다 크다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가 통일 때문에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크다’라는 질문에 51.3%가 동의하는 것으로 작년 대비 6.9% 증가한 결과로 집계되었다. 2017년, 2018년 추세를 보면 분단에 대한 손해가 통일비용보다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는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통일을 추진함으로써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통일문제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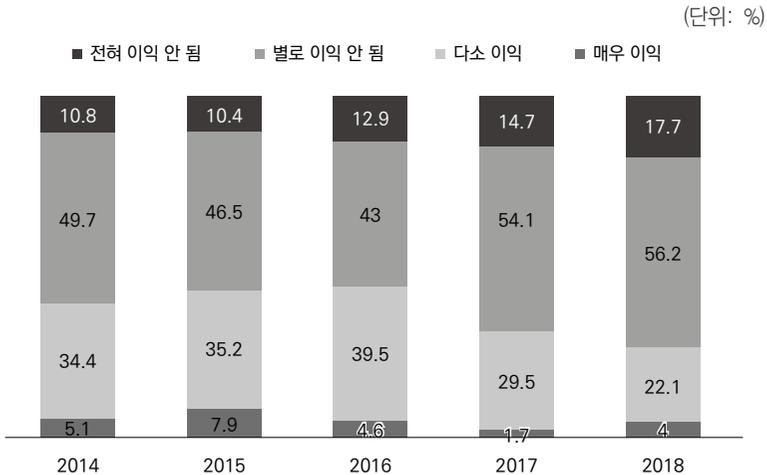
〈표 II-2〉 분단 손해〉 통일비용

| 연도 | 동의 안 함 | 보통 | 동의함 |
|------|--------|-------|-------|
| 2017 | 18.2% | 37.4% | 44.4% |
| 2018 | 16.7% | 31.8% | 51.3% |

당위적 통일론에 대해 연령별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분단 손실에 대한 경제적 민감성은 전 세대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분단 손실에 대한 경제적 우려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 대북·통일 정책 공감대 형성에 있어 분단의 경제적 비용 해소가 핵심 사안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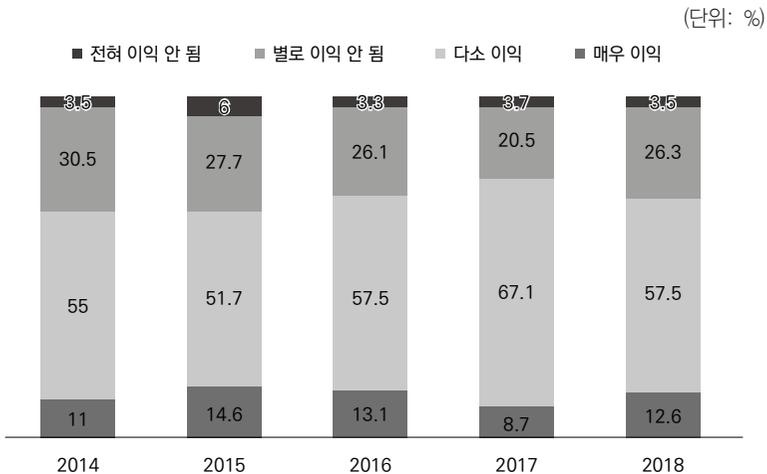
(2) 통일의 편익

〈그림 II-10〉 통일로 인한 국가 편익



2018년도 통일이 국가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73.9%로 전년(68.8%) 대비 5.1% 상승한 수치를 나타낸다. 이번 조사에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은 26%에 머물렀고, 전년 대비 5.2% 감소한 집계 결과이다. 국가적 통일편익에 연령별 조사에서 20대가 69.1%로 가장 낮은 찬성율을 보였으며 40대(78.5%), 50대(79.3%) 응답자들이 높은 동의를 보여 주었다. 통일이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통일편익의 기대감은 전 연령, 전 지역, 이념성향에 관계 없이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그림 II-11〉 통일의 개인에 대한 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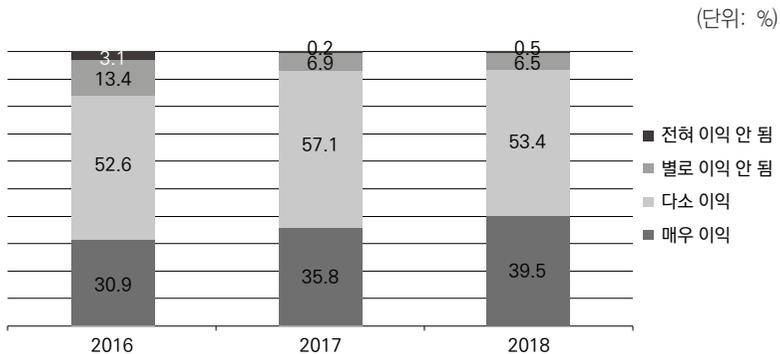
통일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것이라는 답변과 달리 ‘통일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에 29.8%만 긍정적 의견을 주었고, 70.1%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다만, 2017년부터 긍정적 의견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전년 대비

5.6% 상승) 통일이 개인적 편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통일이 자신과 멀리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개인 중심의 통일 논의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의 편익을 개인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질문에서도 20대가 가장 낮은 25.7%만이 통일이 개인적 편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고 있어, 향후 젊은 세대의 통일공감대 이해와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젊은 층에게 통일편익론에 근거한 통일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금보다는 장기적 시각(long time horizon)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개인별로 통일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서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재 삶에 매몰된 많은 젊은이들은 매우 근시안적일 뿐 아니라 단기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 할인인자(discount factor)가 매우 낮고 통일 편익계산 자체도 적어진다.

〈그림 II-12〉 통일의 북한주민에 대한 편익



국민들은 북한주민에게 통일이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통일이 북한주민에게 이익을 줄 것이라는 답변에 92.9%가 긍정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2016년 이후 북한주민에게 통일편익이 클 것이라는 대답은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통일이 남한보다는 북한에게 유리하고,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편익에 대한 국가적, 개인적, 북한주민 간 우리 국민의 인식 차이는 자칫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통일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이익과 통일이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은 장기적 대북·통일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통일편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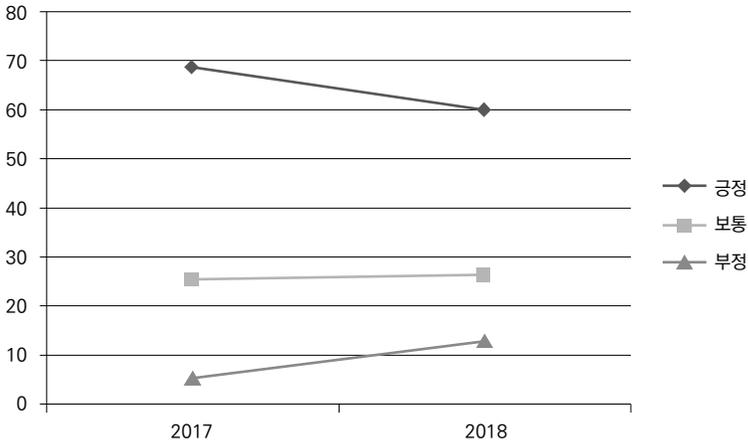
(3)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

〈표 II-3〉 통일문제보다 경제문제가 우선

| 연도 | 동의 안 함 | 보통 | 동의함 |
|------|--------|-------|-------|
| 2017 | 5.7% | 25.3% | 69% |
| 2018 | 12.8% | 26.4% | 60.5% |

〈그림 II-13〉 통일문제보다 경제문제 시급성 동의

(단위: %)



경제문제가 통일문제보다 시급한 사안임을 묻는 질문에 60.5%가 동의하였다. 이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통일문제가 시급한 사안이 아님을 드러내는 답변 결과였다. 국민들의 공감대는 경제문제가 통일문제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경제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년 대비 비록 8.5% 하락된 수치이지만, 경제문제의 시급성에 여전히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는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현안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되었다. 20대가 68.6%로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이념적 성향과 큰 상관없이(진보성향: 60.3%; 중도성향: 60.7%; 보수성향: 60.4%) 우리 국민은 경제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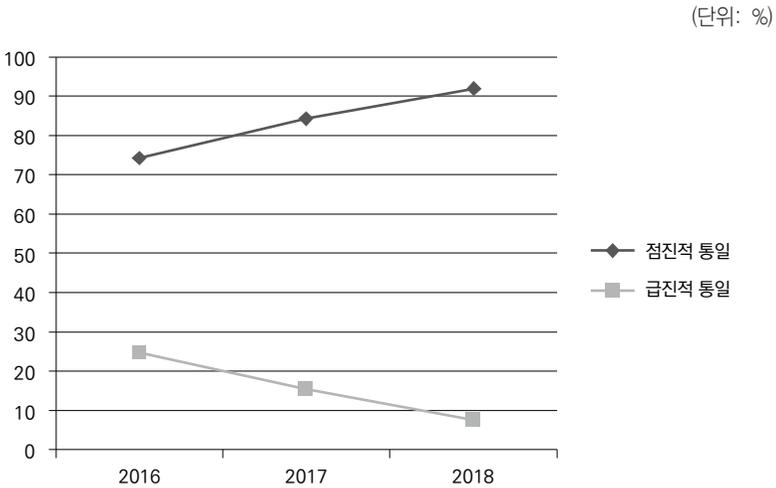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통일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향후 응답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문제와 경제문제를 연관시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제기

된다. 남북관계 진전으로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통일문제의 중요성 공감대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다. 통일국가의 비전과 통일 후

(1) 통일의 방식과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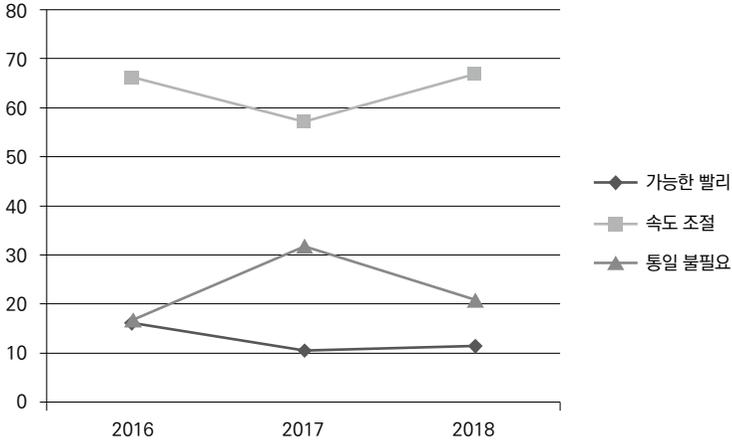
〈그림 II-14〉 통일의 방식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통일방식은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이 92.3%(전년도: 84.5%)로 집계되었으며, 돌발 상황에 의한 급진적 통일은 2017년 대비 8.1% 감소한 7.4%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급진적 통일보다는 점진적 통일방안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협상을 통해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5〉 통일의 시기

(단위: %)



통일 시기에 대한 응답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가 67.2%로 가장 높았으며, ‘가능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11.8%,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은 21.1%로 집계되었다. ‘속도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2017년(57.3%)보다 9.9% 상승한 수치이다. 연령별 조사에서 특이점은 여전히 20대가 통일 불필요에 32.6%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의 36.3%가 통일에 부정적 응답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점진적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통일한국의 우선 목표

〈표 II-4〉 통일한국의 목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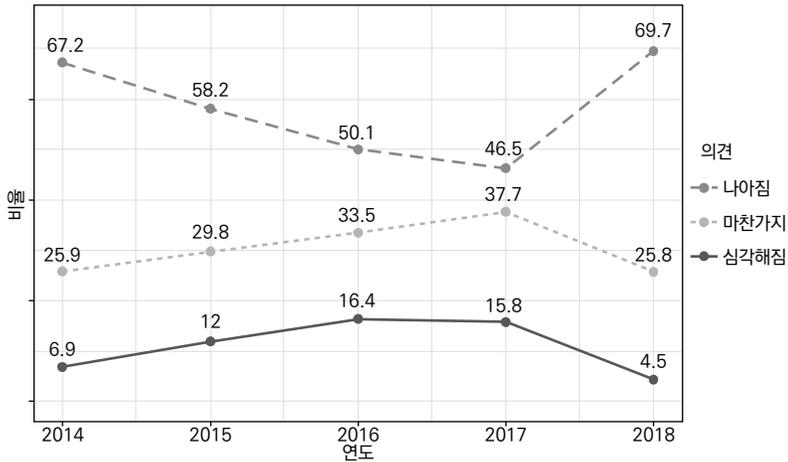
| 연도 | 경제 성장 | 사회 안정 | 안보 | 국민 화합 | 복지 | 균형 발전 | 민주주의 발전 | 과거 청산 |
|------|-------|-------|------|-------|------|-------|---------|-------|
| 2014 | 38.2 | 15 | 19.2 | 7.8 | 5.3 | 11.7 | 2.1 | 0.7 |
| 2015 | 36.1 | 13.6 | 20.2 | 8.3 | 6.8 | 10.8 | 2.3 | 1.9 |
| 2016 | 33.4 | 17.7 | 18.5 | 7.8 | 13.7 | 5.5 | 2.6 | 0.8 |
| 2017 | 36.4 | 22.3 | 15.4 | 12.8 | 4.8 | 4.1 | 2.4 | 1.8 |
| 2018 | 41.9 | 19.9 | 15.3 | 12.2 | 2.6 | 4.8 | 2.4 | 1.0 |

2018년 조사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한국의 우선 목표는 2014년 조사 이래 경제성장에 있었다. 1순위인 ‘경제성장’은 41.9%로 전년 대비 5.5% 상승한 수치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는 ‘사회안정’(19.9%), ‘안보’(15.3%), ‘국민화합’(12.2%), ‘균형발전’(4.8%)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들이 통일한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주안점으로 경제성장을 선택한 것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3) 통일 이후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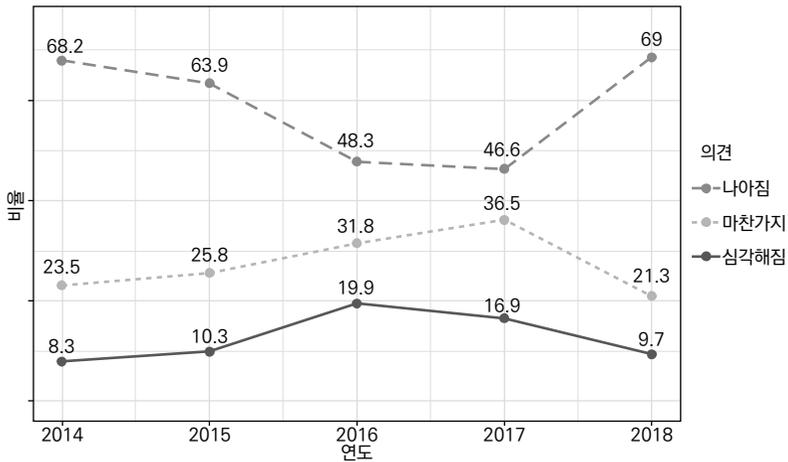
통일 이후 계층갈등을 묻는 질문에 69.7%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대답은 4%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가 늘어난 반면, 통일 이후 계층갈등에 대한 우려는 2018년에 오히려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II-16〉 통일 이후 계층갈등에 대한 의견



또한, 통일 이후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 역시 2018년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통일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통일 이후 이념적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대답에 69%가 동의하였다. 이는 통일 이후에 나타날 정치·문화 갈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이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면, 응답자들은 통일 이후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도 않고 따라서 크게 우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림 II-17〉 통일 이후 이념갈등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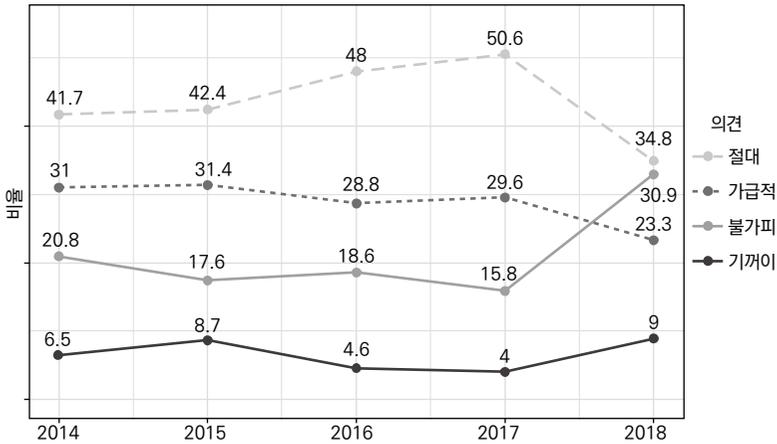


(4) 통일 후 북한 지역 이주에 대한 의견

통일에 대한 기대 섞인 우려가 잘 나타나는 문항이 있다. ‘귀하는 만약 통일이 될 경우 직장 또는 결혼 등의 이유로 북한 지역으로 이주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긍정과 부정으로 이분화시킬 경우 2014년 이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본래 척도에 따라 파악해 보면, 2018년에 ‘절대 이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북한 지역으로의 이주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태도가 더욱 분명해진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도 이러한 응답 비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II-18〉 통일 후 북한 지역 이주에 대한 의견



라. 2018년 통일인식의 특징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크게 반등했으며,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도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통일이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는 낙관집단 비율이 증가하였다. 동시에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면 통일이 필요 없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통일 이후 나타나게 될 갈등 및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일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때, 통일 이후에 발생하게 될 계층 및 이념갈등과 같은 여러 문제를 더욱 깊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늘어난 기대 섞인 우려는 통일방식에 대한 의견에서 점진적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이 압도적 응답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서의 차이는 연령변수와 거주지역 변

수에서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젊은 연령대(특히 20대)와 대구·경북 지역에서 통일과 관련된 이슈에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왔다. 다만, 젊은 연령대의 부정적 의견은 그 강도가 약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부정적 의견은 그 강도가 매우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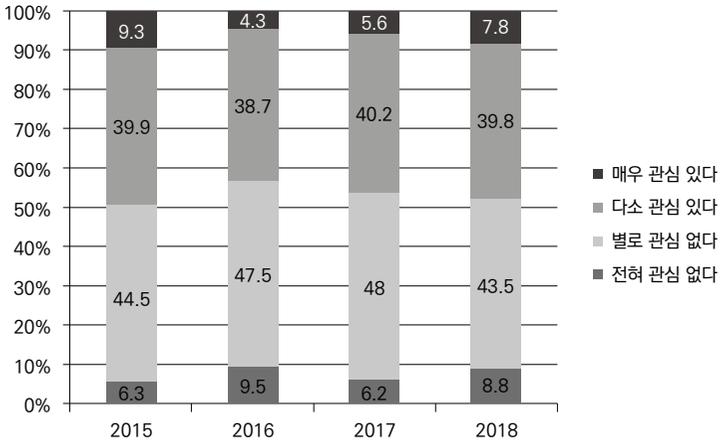
2. 북한인식: 변화와 연속성

홍석훈(통일연구원)

가. 북한에 대한 태도

(1) 북한에 대한 관심

〈그림 II-19〉 북한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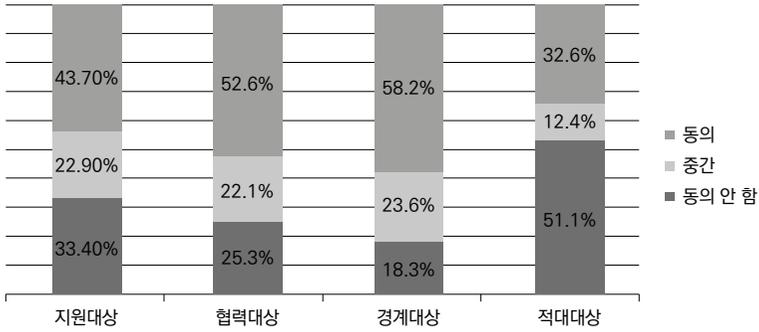
우리 국민의 북한인식 특징으로 북한에 대한 무관심과 경계인식이 강하나, 경계대상에서 협력대상으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질문에(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다’가 52.3%로 집계되어 여전히 국민의 북한 무관심이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은 지난 2015년 49.2%, 2016년 43%, 2017년 45.8%, 2018년 47.6%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 전망 등으로 작년에 비해 1.8% 증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북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에게 북한문제가 절대적인 관심대상은 아니며, 북한 핵위협이 커짐에도 상대적인 관심도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2) 북한에 대한 이미지 비교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이미지에 대해 11점 척도(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 매우 동의한다)로 조사하였다. 우리 국민은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58.2%로 제일 높았고, 적대대상에 동의하는 경우가 32.6%로 가장 낮았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양상이 2017년 36.3%에서 올해 58.2%로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경계대상으로 보는 견해도 작년 75.5%에서 올해 58.2%로 하향곡선을 긋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으로 국민들의 경계인식이 협력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생각하면서도 협력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순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비교 분석에서 적대대상으로 보는 의견이 제일 낮으며 중간적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인식도 2014년 35.6%, 2015년 36.4%, 2016년 39.3%, 2018년 32.6%까지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북한의 지속된 핵·미사일 위협에도 적대의식은 크게 발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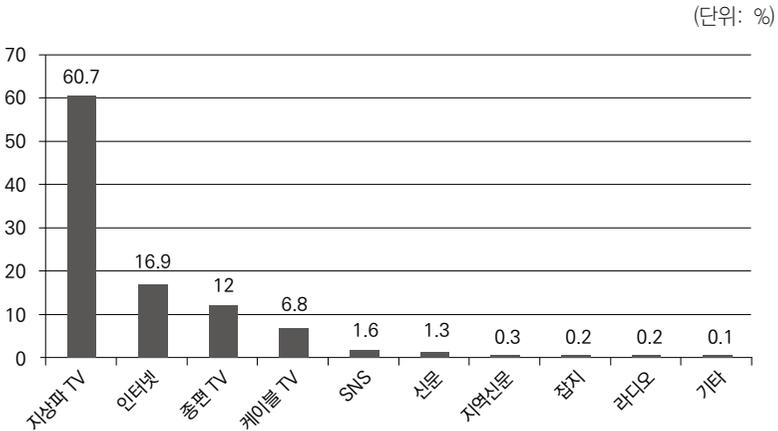
〈그림 II-20〉 북한에 대한 비교 인식



(3) 북한 정보 획득 경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지상파 TV’가 60.7%(전년도 57.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터넷’(16.9%, 전년도 18.3%), ‘중편 TV’(12%, 전년도 16.7%), ‘케이블 TV’(6.8%, 전년도 4.7%)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지상파 TV’는 2.8% 상승한 반면, ‘인터넷’은 1.4% 하락한 수치로 집계 되었다.

〈그림 II-21〉 2018 북한 정보 획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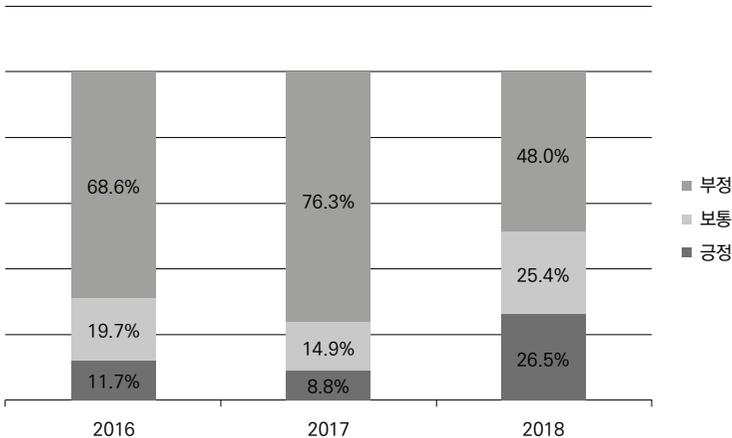
2018년 조사에서 연령층이 높을수록 지상파 TV를 통해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20대는 지상파 TV(38.3%)와 인터넷(38.3%) 경로로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지상파 TV를 통해 북한을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정확한 북한 이해와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중파 채널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정보 유입 경향이 크다는 것은 인터넷 상의 정보 유통과 공감대 형성도 장기적 플랜 수립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나.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1)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 북한

〈그림 II-22〉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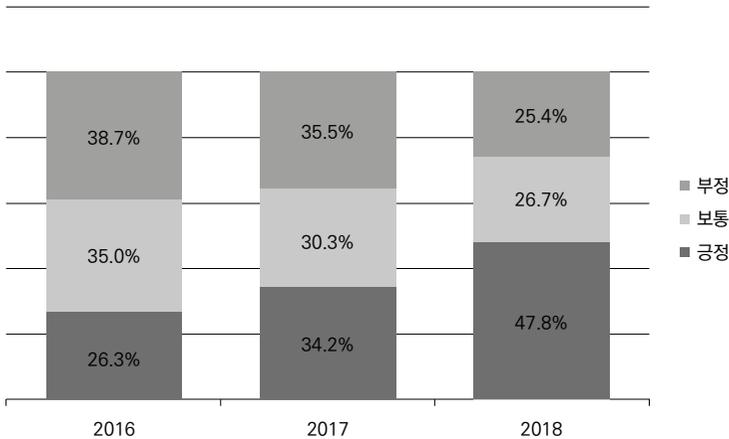


‘현재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대화와 타협 가능한 국가라

고 인정하는지를 국민에게 물어본 것이다. 2018년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전년도에 비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고 있었다. 이는 지난 조사에 비해 남북의 대화·타협에는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여전히 북한을 대화와 타협 가능 대상자로서 인식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2018년 48.8%). 그렇지만 긍정적 대답도 전년도 8.8%에서 올해 26.5%로 급상승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대화·타협대상으로 그 이미지가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타협대상 인식 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고, 4·27 판문점 정상회담 등이 성사되는 상황이어서 올해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인식에 긍정적 대답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 추구

〈그림 II-23〉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 추구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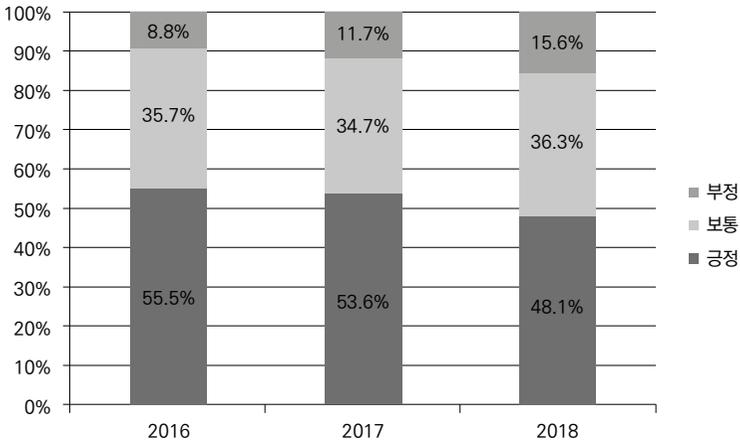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당위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으로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 2018년도 47.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답변도 26.7%에 달한다.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동의는 2016년 26.3%, 2017년 34.2%, 2018년 47.8%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은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신뢰에 대한 북한 불신

〈그림 II-24〉 남북신뢰에 대한 북한 불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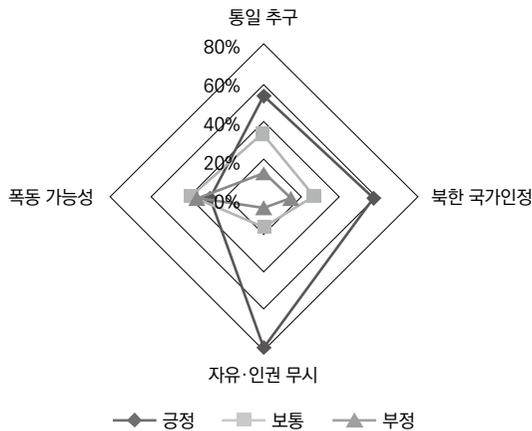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은 대부분 북한 때문이다’라는 질문에 긍정적 의견이 강하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불신인식이 강하나(2016년: 55.5%; 2017년: 53.6%; 2018년: 48.1%), 그 강도가 매년 약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에 대한 신뢰인식도 차츰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북한의 국가성 인정과 정권 이미지

먼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질문에 국민들은 동의하는 대답이 우세하였다. 북한 체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면서도 정치체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들은 대체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긍정: 58%; 보통: 26.9%), 북한주민들도 통일을 원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긍정: 53.8%; 보통: 33.1%) 나타났으나, 북한 사회의 자유와 인권 부분에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긍정: 79%) 집계되었다.

〈그림 II-25〉 북한 체제에 대한 항목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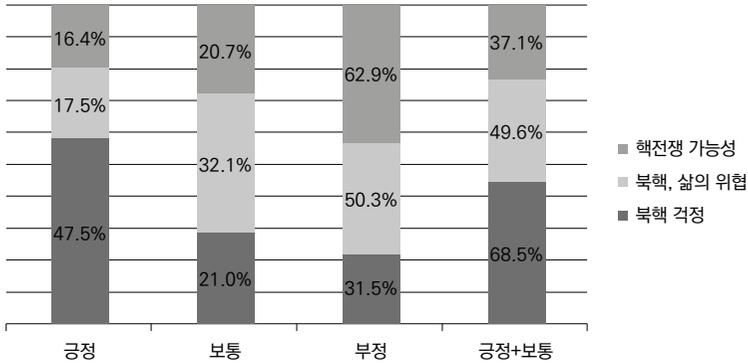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면서도 북한 사회 내부의 큰 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체제 안정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사회 내부의 소요가 발생할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2016년 49.6% → 2017년 42.5% → 2018년 27.8%로 감소하고 있어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김정은 체제가 비교적 안정적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북한 사회를 비민주적인 사회로 인식하면서도 북한 사회 내부의 소요 발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개인문제와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핵위협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개인의 삶에는 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으며, 북한 핵으로 인한 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북한 핵위협에 대해 대체적으로 우려(긍정: 47.5%)하고 있으나 핵위협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은 17.5%(‘영향 있다’에 긍정)만이 가지고 있으며, ‘북핵으로 인한 전쟁 가능성 있음’에도 16.4%가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핵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으나 자신의 일상생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오랜 북핵 개발과 도발이 오히려 무관심을 유발했을 개연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도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북한 핵위협·북핵의 개인 삶에 대한 위협·핵전쟁 가능성에 관한 국민 우려 인식은 2016년 처음 집계한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는 특징이 인지

되었다. 결국, 북한 핵문제가 첨예화됨에도 국민들은 개인의 삶과 분리하여 북핵문제를 이해하려는 경향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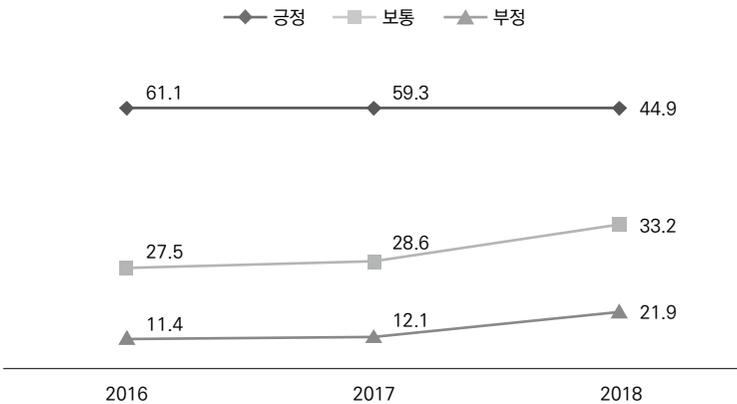
〈그림 II-26〉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국민 인식



(6) 테러지원국으로서의 북한인식

〈그림 II-27〉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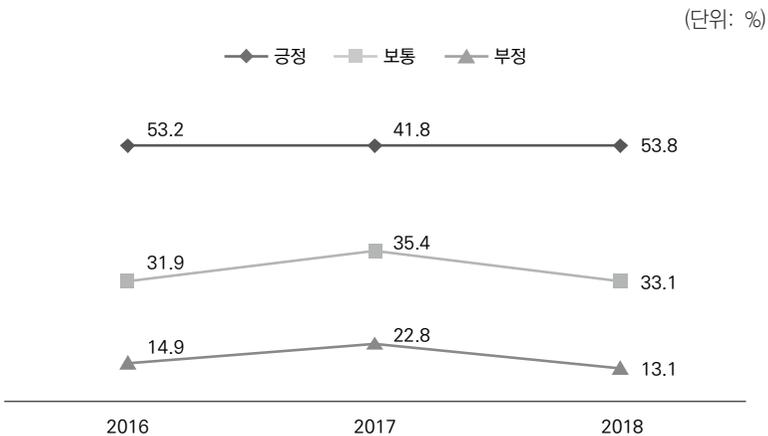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질문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서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년도 대비 14.4% 감소한 44.9%로 집계되었으며, 테러지원국 지정을 부정하는 응답자는 9.8% 상승한 21.9% 결과가 나왔다.

2016년 조사 이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은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이유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은 61.1%의 찬성을 보였지만, 차츰 테러지원국 지정 의견이 감소 추세에 있다.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약소하나마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올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북한 정권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우리 국민의 북한 테러지원국 이미지는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북한의 통일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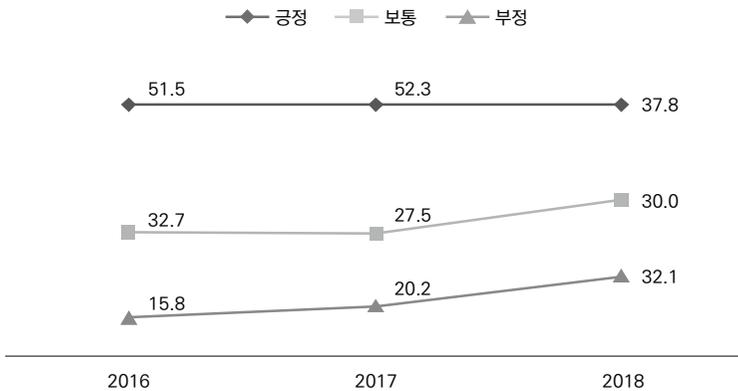
〈그림 II-28〉 북한주민들의 통일추구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는 질문에 53.8%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이는 전년도보다 12% 상승한 수치이며,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북한도 통일을 원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I-29〉 북한의 적화통일 의도

(단위: %)



‘북한은 적화통일을 원하고 있다’는 질문에 우리 국민은 37.8%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북한의 적화통일 의도에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전년도보다 14.5% 하락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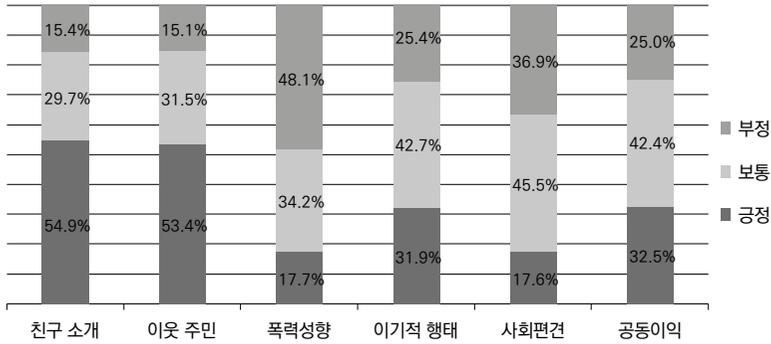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리 국민들은 북한도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북한의 적화통일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북한의 통일외지에 대한 긍정적 의견 확대와 적화통일의 우려가 낮아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이러한 적화통일의 우려가 낮아질 개연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라. 탈북민에 대한 국민 인식

탈북민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친근한 이미지이나 남한주민과의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한 이기적 요구와 사회편견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먼저, 탈북민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한 이미지 발현은 탈북민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유입되면서 공동이익이 도출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친구에게 소개하거나 이웃 주민으로 환영한다는 의견에 84.6%(긍정: 54.9%; 보통: 29.7%), 84.9%(긍정:53.4%; 보통: 31.5%)가 긍정 또는 인정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에게 소개해주겠다는 질문에 2017년 6.9%에서 올해 15.4%가 부정적 대답을 내놓았고, 이웃 주민으로 유입되는 데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응답자도 작년 8%에서 올해 15.1%로 늘어난 추세를 보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공동이익에 부정적이라는 인식도 작년 13.1%에서 올해 25%로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탈북민이 남한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는 응답에 74.6%(긍정: 31.9%; 보통: 42.7%)로 집계되었으며 탈북민에 대한 편견에 대한 지적도 63.1%(긍정: 17.6%; 보통: 45.5%)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 사회의 경제 상황이나 빈부격차의 발생으로 인해 북한주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탈북민의 이기심 우려나 사회적 편견 인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II-30〉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



마. 2018년 북한인식 변화의 요인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하자면, 우리 국민의 북한인식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남북관계 단절로 인한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개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과 한반도 긴장 상황은 오히려 북한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유추된다. 한반도문제를 국내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한반도문제를 연계함으로써 주변국 외교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코리아 패싱’을 유발한 결과를 가져왔다. 통일문제의 정치화는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북한과의 교류와 소통 부재는 북한문제가 우리 사회의 관심 이슈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도 우리 사회의 북한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교육과정에 있어 북한 교육과 한반도 통일론이 간과됨으로 인해 남북 간 사회 이해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당위론적 통일론과 국가중심(state’s actor)의 제도론적 접근법은 사회, 문화 중심의 민간 차원의 남북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의 제한성

을 불러왔으며, 오랜 군사적 남북 긴장감 조성은 북한 핵문제와 개인 생활을 분리하여 사고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젊은 세대의 북한 무관심 증대는 미래 남북관계의 활성화와 남북통합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북한 국가전략의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북한인식의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2018년을 맞아 정상국가(전략국가)·경제발전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대북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정서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대북정책을 채택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 정상 간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가시화하고 있어 북한 체제와 대남·대의 외교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올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변화의 한 요소로 들 수 있다. 즉 경계·협력 인식이 혼재되어 있으나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경제협력을 추구하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3. 통일·대북 정책 인식

이상신(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매년 통일 및 대북정책 선호도에 대한 선호를 같은 문항으로 조사하여 그 추이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몇몇 문항을 추가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조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태도와 함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는 통일의식조사의 세 가지 주요 핵심 항목(core items)의 하나이다. 통일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정책연구기관이며, 기관의 존립 목적이 궁극적으로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세 가지 핵심항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인식과 북한인식 또한 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독립 변수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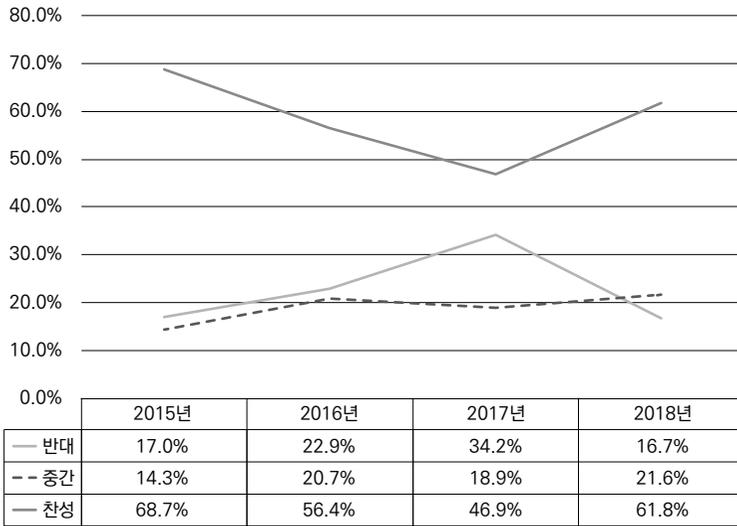
이 장에서는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14개의 항목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각 문항들이 4점 척도¹⁰⁾로 조사되었고 그 이후에는 11점 척도¹¹⁾를 사용한 차이가 있다. 해마다 변화하는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를 보기 위해 척도가 다른 변수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015년 조사부터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10) 1=매우 찬성, 2=다소 찬성, 3=다소 반대, 4=매우 반대

11) 0=매우 반대, 5=중간, 10=매우 찬성

11점 척도를 사용한 것은 회귀분석 등 좀 더 심도 있는 통계적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알기 쉬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0~4점을 ‘반대’, 5점을 ‘중간’, 6~10점을 ‘찬성’으로 묶어 11점 척도를 셋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그림 II-31〉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뒤이은 5·24조치,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2017년 이전의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치적·군사적 긴장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대부분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필요하며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015년에는 아마도 통일대박론 등의 영향으로 북한과의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찬성하는 비율이 이미 68.7%에 달했음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남북 경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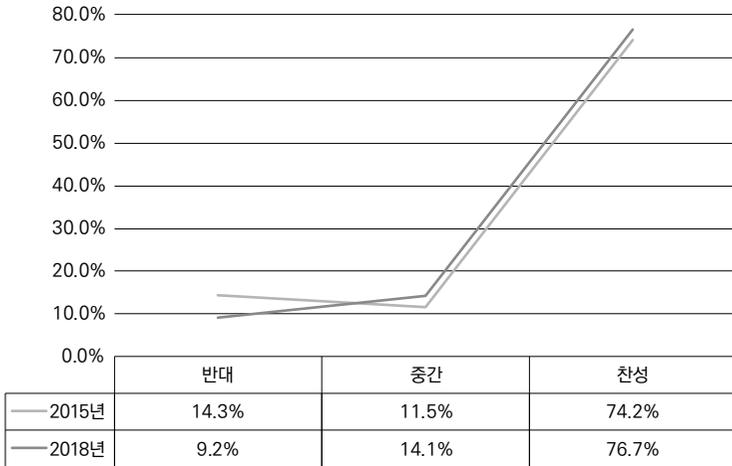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 개성공단 폐쇄 등의 영향으로 급속히 냉각되었다. 2016년에는 12.3%p 하락한 56.4%의 응답자만이 남북 경제 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2017년에는 또다시 9.5%p 하락하여 찬성 응답자가 46.9%에 그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2017년 조사가 2017년 4월 달에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하였기 때문에, 2017년 자료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태도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은 2018년 조사가 처음이라고 봐야 한다. 2018년 조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4월 27일에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던 시기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 남북 경제 교류에 대한 긍정 비율이 61.8%까지 올라간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여정책에 대한 평가이자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과의 전쟁위협이 고조되고 있던 2016년 및 2017년에도 절반 가까운 비율이 교류협력을 찬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2018년 조사에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반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같이 지지한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북정책과 방향성이 같았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2015년과 2016년 조사 결과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긴장 및 대결보다는 경제협력을 원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높으며, 이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이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함의는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국민들이 무비판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지지한다고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와 북한의 위협 정도, 그리고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이념과 정책 등에 국민들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선호가 영향 받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북한과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1-32〉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이용하면 남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5년과 2018년 2차에 걸쳐 북한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남한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측정했다. 이 문항을 설계한 이유는 앞의 대북 경제협력 문항과 함께 비교해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국민들이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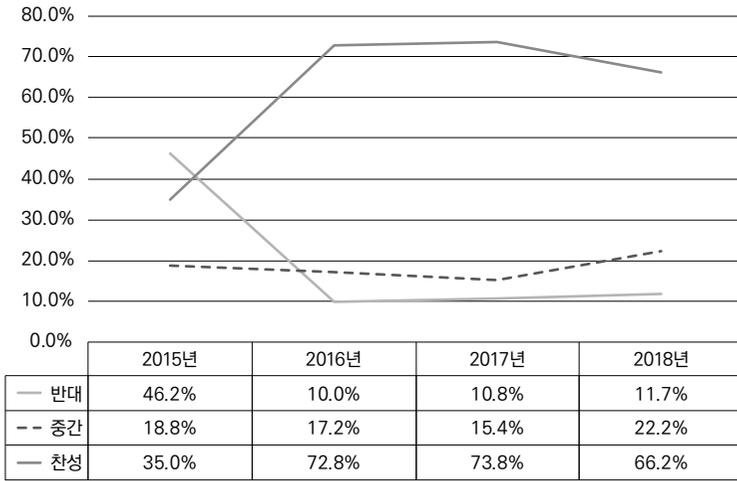
그림에서 볼 수 있듯, 두 조사 사이에 3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차례 조사 모두 전체 응답자

들의 4분의 3 가까이가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남한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항이 갖고 있는 함의는, 통일과 남북관계의 협력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매우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도 통일담론, 즉,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외세에 의해 분리된 역사를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단일민족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들은 이러한 민족주의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이 문항에서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기대감이 통일을 위한 정서적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창올림픽의 단일팀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란을 감안해서 보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의 기저에는 민족주의적 통일에 대한 열망보다, 오히려 이러한 현실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스포츠나 문화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에서의 여자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높았으며, 이는 대통령 및 집권여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였다. 즉, 올림픽 공동참가를 통해 통일에의 의지를 과시한다는 명분론적인 의의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남한 하키 선수들 개인의 이익 침해가 특히 남한의 20대에게는 더 큰 관심사였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는 민족동질성 회복에 대한 민족주의적 열망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통일이 가져올 남한의 현실적 이득과 미래 전망에 국민들이 호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II-33〉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앞의 두 문항이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그것이 가져올 남한의 이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했다면, 이 세 번째 문항은 현재 경제협력의 가장 큰 장애물인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한 반응을 시계열적 변화로 정리해 놓은 위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5년의 설문 결과가 다른 해의 설문 결과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2015년에는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후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라는 표현 대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대체되어 조사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찬성 비율은 2017년의 73.8%에서 2018년에는 66.2%로 약간 떨어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3분의 2 이상의 응답자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찬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2016년에 10.0%, 2017년에 10.8%, 2018년에 11.7%로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앞의 북한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60% 가까운 응답자들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찬성했다. 또, 75% 정도의 응답자들은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하면 남한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또한 다수라는 사실은 논리적 모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논리적 충돌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설명 가능할 것이다.

첫째, 응답자들이 2017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갑작스런 전향적 태도 변화가 그동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때문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계속된 경제제재를 통해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을 수 있다. 보다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남북 경제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판명된 경제제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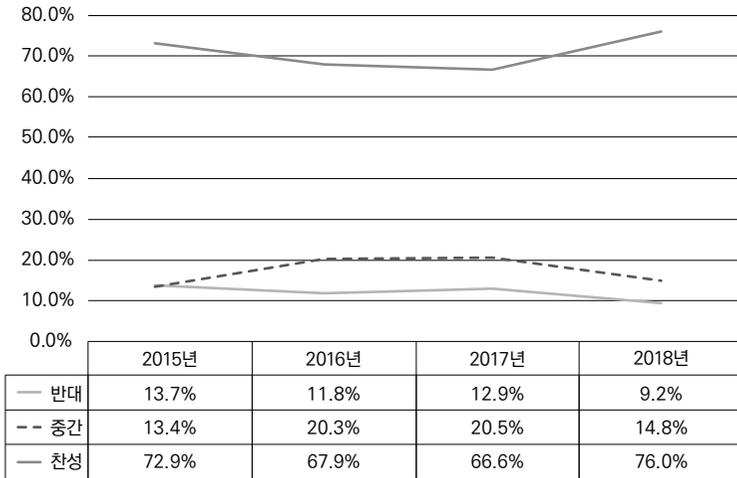
둘째, 지금까지 여러 번 남북 간 화해분위기가 뒤집힌 경험 때문에 쌓인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직까지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도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이 이어졌으며, 북한의 핵실험이 결국 경제협력 파탄으로 이어진 것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협력이 다시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신감을 해소할 선조치를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제재를 선호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 내용으로 많은 응답자들

은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수준을 생각하면 두 번째 가설, 즉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가설의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 표를 보면 남북 간 스포츠 교류에 대한 찬성의견이 17년의 66.6%에서 18년에는 76.0%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 직전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대한 논란에도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힘입은 바가 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II-34〉 스포츠나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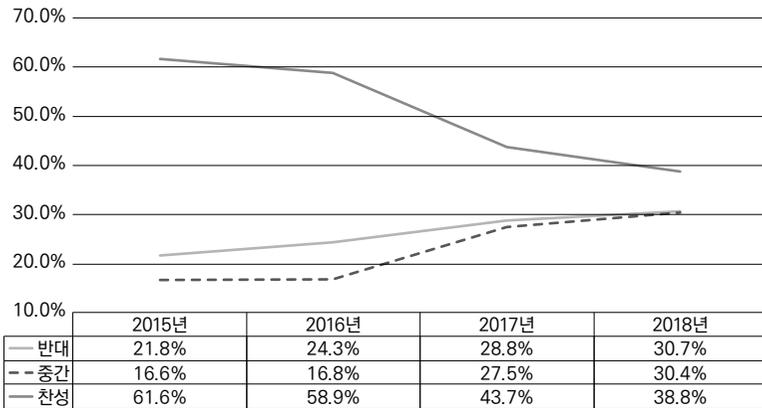


그러나 2015년부터 같은 내용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비교해보면,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스포츠 및 문화 교류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평창올림픽 이후 찬성 비율이 76%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남북관계의 최저점이었던 2017년에도 스포

츠 및 문화, 인적 교류에 대한 찬성 비율은 66.6%로 결코 낮지 않았기 때문이다. 4년간 평균적으로 70.9%의 응답자들이 스포츠·문화 교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스포츠나 문화 교류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비정치적이고, 일반 국민들이 TV 등을 통해 교류를 감상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태도가 대북정책에 갖는 함의는 적지 않다. 즉, 남북관계가 경색된 조건에서 가장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에 유리한 것이 스포츠 등 비정치적, 비경제적 교류라는 정책적 판단에 확실한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국민 여론의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I-35〉 대북 전단 풍선 보내기, 라디오 방송, 확성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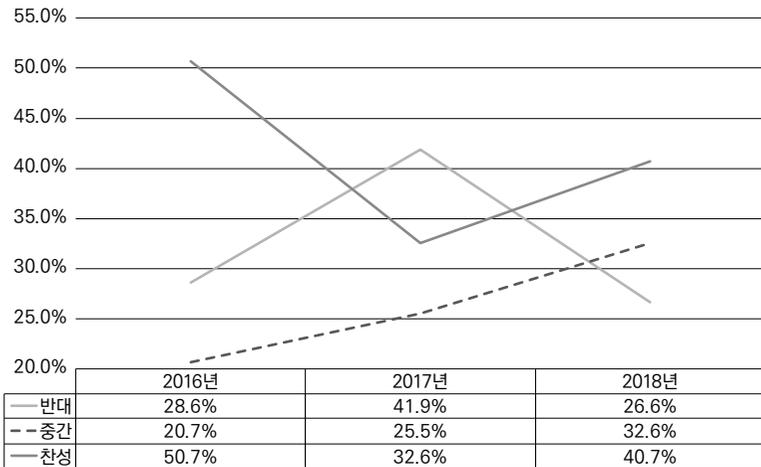


이 문항은 북한에 대한 확성기, 풍선 보내기 등 대북심리전 활동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이다. 대북심리전 활동에 대한 찬성 비율이 2015년 61.5%에 달할 만큼 긍정적이었으나,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8년에는 38.8%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찬성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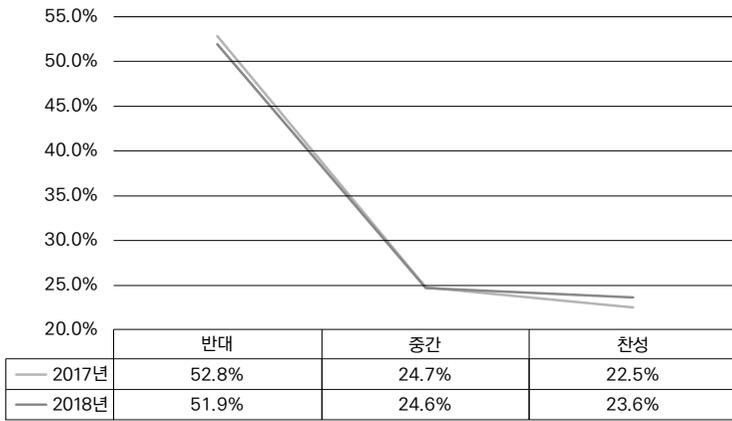
이렇게 22.7%p 감소하는 동안, 반대하는 비율이 그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북심리전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2015년 21.8%에서 2018년 30.7%로 변화하였으며, 8.9%p 정도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그 결과 2018년 현재에도 대북심리전에 찬성하는 응답자(38.8%)들이 반대하는 응답자들(30.7%)보다 많은 실정이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여론이 나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대북 전단 날리기를 금지하는 것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로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36〉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림 II-37〉 북한에 조건 없는 식량 원조를 해야 한다



위의 두 표에 제시된 두 문항은 내용상으로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이고 다른 하나는 ‘조건 없는’ 식량 원조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있다. 물론 인도적 지원에는 식량 이외에도 약품이나 비료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의 인식 수준에서는 두 문항의 내용이 크게 다른 것으로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문항의 내용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의 응답만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인도적 지원에 찬성하는 비율은 40.7%였지만 조건 없는 식량 지원에는 23.6%만이 찬성해서, 두 문항의 찬성 비율에는 17.1%p의 차이가 있었다. 또,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2017년에 32.6%의 응답자가 인도적 지원에 찬성했지만 정권교체와 남북관계의 신속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은 40.7%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에서 경제 교류 및 협력에 찬성하는 비율이 2018년에 61.8%였던 것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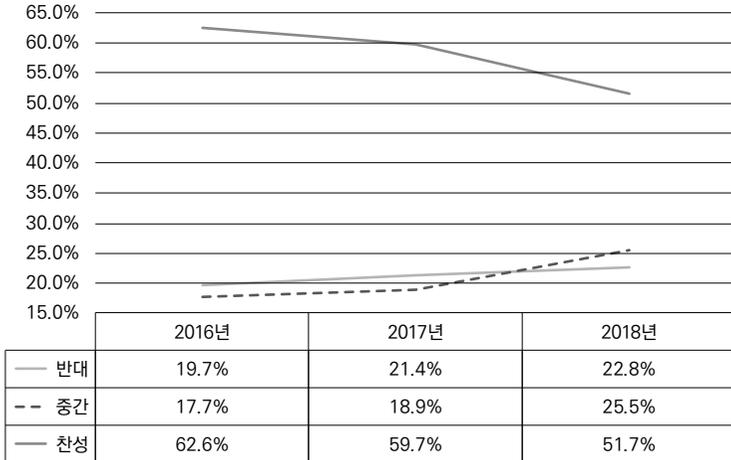
기하면, 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태도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유보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정책 항목과 달리 ‘조건 없는’이라는 단서를 달았을 때 식량 원조에 대한 선호는 2017년과 2018년 사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①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의 크게 나빠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② ‘조건 없는’이라는 표현이 이전의 ‘퍼주기’ 프레임을 응답자들에게 환기시켰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보수정당들과 보수언론들이 사용하는 ‘퍼주기’ 프레임은, 햇볕정책의 북한 식량 지원 및 경제협력이 남한의 경제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그 자체에는 긍정적이며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남한 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간단한 문항 조작을 통해 응답자들에게 이른바 ‘퍼주기’ 프레임을 발동시켰을 때에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반전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과의 평화적 경제협력과 스포츠·문화 교류에 대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한 교류와 협력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퍼주기’ 프레임을 작동시키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조건 없는 지원이나 인도적 지원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남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데 한결 유리할 것이다.

〈그림 II-38〉 북한의 핵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중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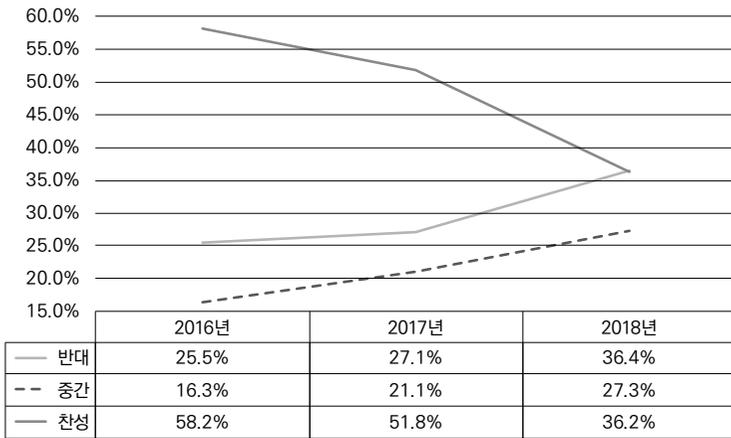
이 문항은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의 전제조건으로 북핵 폐기를 걸어놓고 응답자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이다. 북핵 폐기를 북한과의 교류에 연계해야 하는 주장에 대한 반대 비율은 계속 일정한데(2016년 19.7%, 2017년 21.4%, 2018년 22.8%), 반면 찬성 비율은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약 11%p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북핵 폐기가 전제되었을 때만 북한과의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핵 폐기와 교류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직도 절반 이상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즉, 앞에서 보았듯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과 기타 교류에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 문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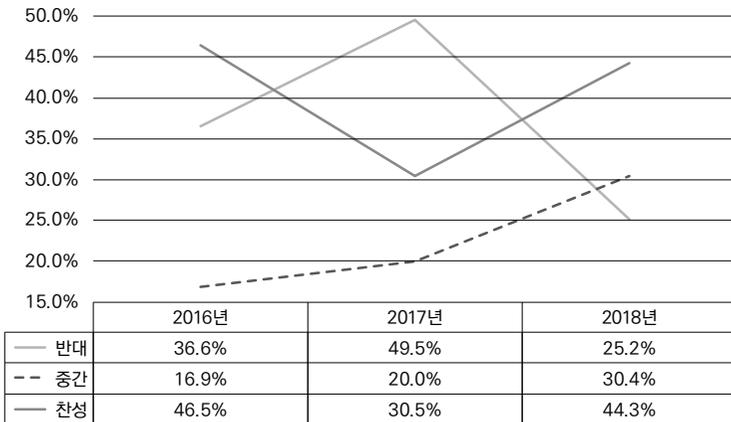
이 문항은 따라서 앞의 인도적 지원 문항과 연관지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는 일방적인 구호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은 지양되어야 하며, 북핵 혹은 남한의 경제적 성장 등이 반대 급부로 제시될 수 있을 때 북한과의 교류협력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욱 견실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림 II-39〉 개성공단 폐쇄는 옳은 결정이다



〈그림 II-40〉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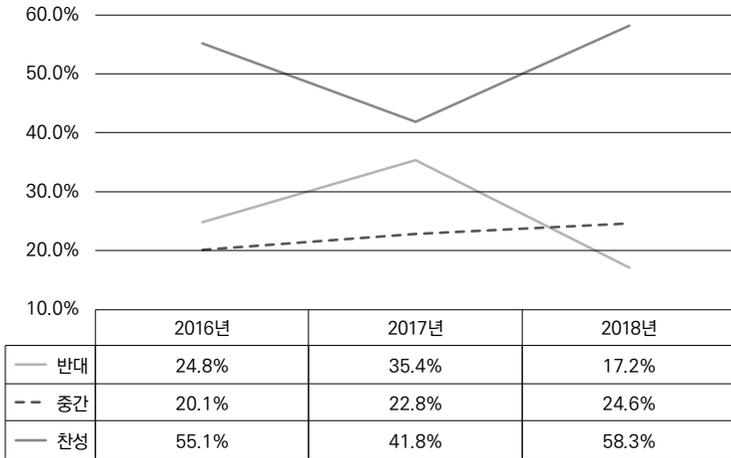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찬성 평가는 16년에 58.2%, 17년 51.8%에서 18년에 36.2%로 급격히 변화했고 마찬가지로 공단 재개에 대한 찬성도 46.5% → 30.5% → 44.3%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와도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흥미로운 것은 18년에도 재가동 찬성 비율이 44.4%로, 공단이 폐쇄되었던 16년의 46.5%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조사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실시된 것을 고려하면, 2018년 하반기 현재의 평가는 매우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성공단과 관련되어 상반되는 내용의 두 문항을 동시에 물은 것은 얼핏 불필요한 중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문항은 논리적으로 상호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삽입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핵실험 혹은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에는 찬성하지만, 적절한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이고 적실성 있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에는 폐쇄 찬성이 58.2%였으나, 동시에 재개를 찬성하는 비율도 46.5%였다. 2016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전체 응답자의 21.4%가 개성공단 폐쇄가 옳은 결정이었다고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개성공단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공단 폐쇄를 찬성하면서 공단 재개의 필요성도 동시에 공감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2017년에는 1.0%, 2018년에는 7.8%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성공단 폐쇄 직후에는 폐쇄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여건이 호전되면 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이 의외로 상당 수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후 2017년과 2018년 한반도의 여러 상황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양가적인 의견은 상당히 퇴색하였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일관된 응답, 즉 개성공

단 폐쇄는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따라서 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개성공단 폐쇄는 옳은 결정이었으며 앞으로도 공단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그림 II-41〉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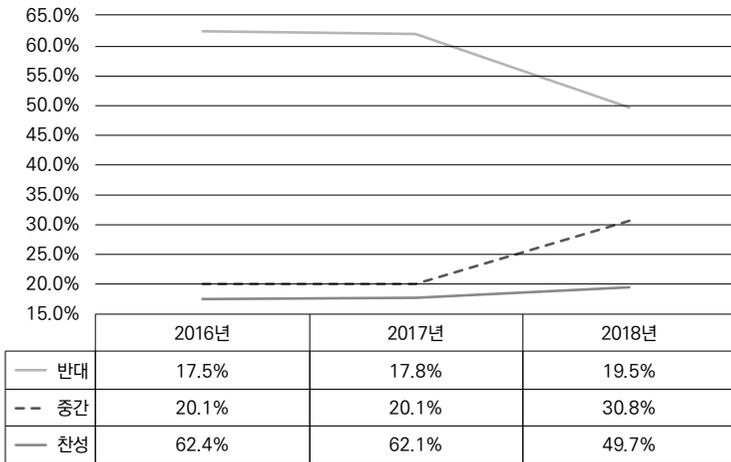
남북교류가 재개된다면 개성공단과 함께 가장 주목받는 것이 금강산 관광의 재개문제이다. 위의 표를 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선호의 변화는 개성공단 재개 문항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관되게 금강산 관광에 대한 선호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선호보다 10% 이상 높은 것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위의 스포츠 교류와 유사하게 금강산 관광을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기보다는 비정치적, 비경제적 교류의 일환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금강산 관광은 북한으로 직접 현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였기 때문에 오히려 개성공단보다도 더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기술적 측면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보다 훨씬 안전하고 무해한 형태의 남북교류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선호를 종합해보면 국민들이 선호하는 북한과의 교류 재개 순서는 스포츠 혹은 문화 교류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이어 금강산 및 개성 등 기타 관광 및 방문으로 이 교류협력을 본궤도에 올린 후, 개성공단 재개로 상징되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단계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42〉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는 도입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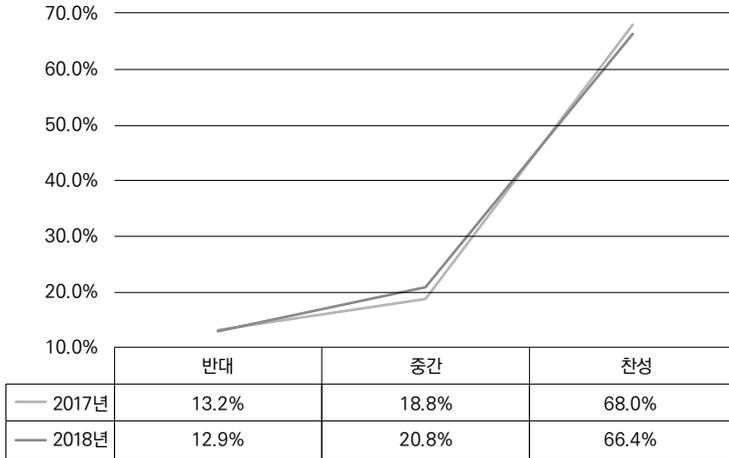
사드(Terminal High Attitude Area Defense: 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문제로 남남갈등이 고조되었다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2016년과 2017년에 사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각각 17.5%, 17.8%에 불과했다. 그리고 찬성의견도 거의 비슷한 62.4% 및 62.1%를 기록했다. 사드가 배치된 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당시 야당의 비판으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실체와 달리 지나치게 과장되게 부풀려진 감이 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듯 실제 여론을 조사해보면 사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말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이 가시화된 2018년에는 사드 도입 반대가 19.5%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크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사드를 찬성하는 비율이 62.1%에서 49.7%로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즉, 사드를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줄었지만, 이것이 사드 반대 여론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다시 교류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함에 따라, 한미 군사협력이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이 아직은 요원해 보이는 현재 상황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사드 반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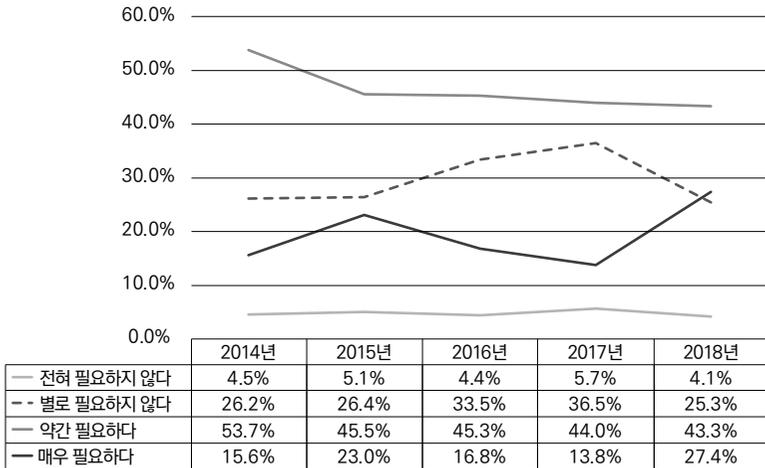
앞에서 분석한 내용과 이 사드 관련 태도를 연관 지어 다시 정리해보면, 남한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면서도 이것이 국방력 약화 혹은 한미관계 악화로 연결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해명과 설득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사이에 길항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II-43〉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통일연구원의 조사를 비롯,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사나 다른 조사들에서는 전통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통일의식을 조사하고 있다. 이 방식은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문장을 통해 통일이 필요한지는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한계 또한 적지 않다. 아직까지도 통일은 한국에서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밝히는 것은 아직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참고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경우, 아래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44〉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8년에 통일이 약간 필요하다(43.3%) 혹은 매우 필요하다(27.4%)고 말한 응답자의 비율은 그 합이 70.7%에 달했다. 그러나, 이 항목이 내포하고 있는 윤리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북정책은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고쳐 물었을 때, 통일보다 평화공존이 우선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8년에 66.4%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70.7%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66.4%는 통일보다도 평화공존을 선호한다는 모순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통일의 필요성을 직접 응답자들에게 물어보는 방식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더 나아가 통일에 저항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그보다는 험난할 것이 틀림없는 통일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수반될 과중한 비용 및 사회갈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통일을 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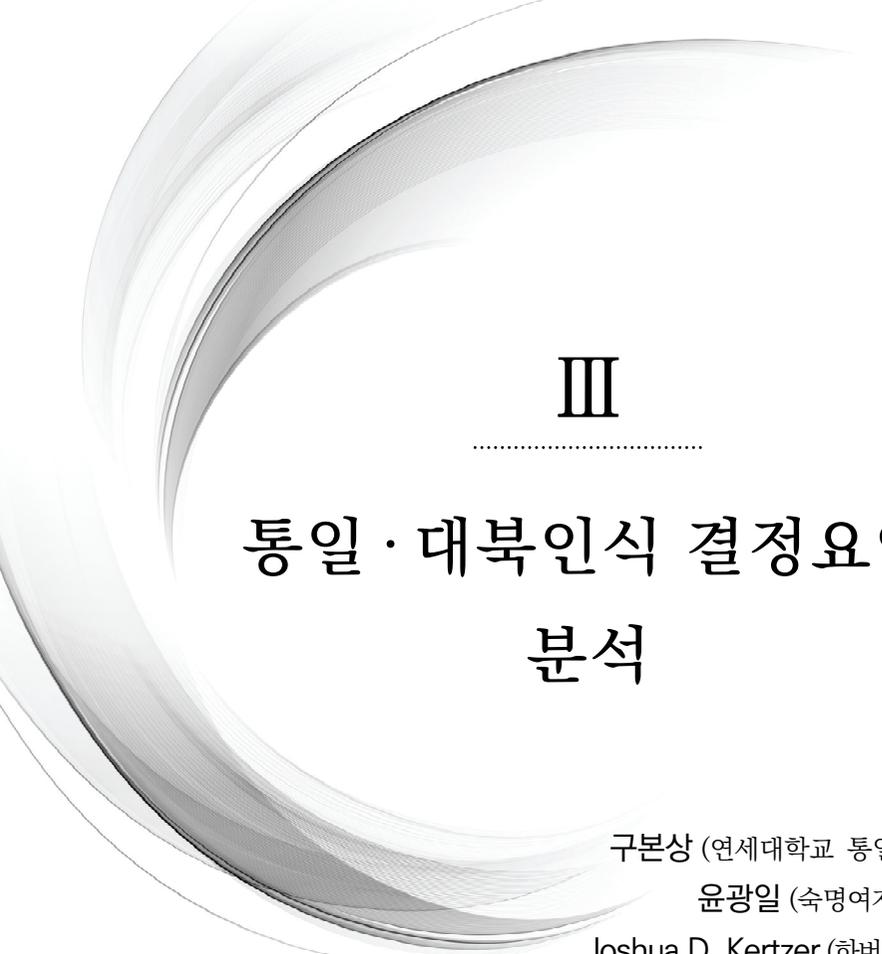
실적인 목표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또, 급격하고 빠른 통일보다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하는 태도가, 그 중간단계로서의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3단계 통일방식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 첫 단계는 평화공존 단계이다. 이후 남북연합을 거쳐 완전한 통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데, 이를 감안해 보면 통일보다 평화공존이 우선이라는 태도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평화적 공존과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은 현 정부의 통일방안과도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표 II-5〉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 반대 | 중간 | 찬성 | 합계 |
|-------|------|-------|-------|--------|
| 2018년 | 9.4% | 18.7% | 72.0% | 100.0% |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협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찬성의견이 72.0%로 응답자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었으며, 반대는 9.4%에 불과했다. 특히 이 조사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통일 · 대북인식 결정요인 분석

구본상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Joshua D. Kertzer (하버드대학교)

1. 통일인식 결정요인 분석: 통일 효용인식, 북한 이미지, 대통령에 대한 평가

구본상(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가. 서론

2017년 북한에 대해 전향적인 정책 방향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신 이후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이 거듭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팽배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극적으로 국면이 전환됐다.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의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시행된 KINU 통일의식조사에는 이처럼 극적으로 찾아온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현 정부는 이를 기회로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위로부터의 통일정책은 국민 여론의 뒷받침 없이 현실화하기 어렵다. 2018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누가, 왜 통일에 대해 낙관적 또는 비관적 입장을 가지는지, 통일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충분히 이해할 때만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의 통일의식과 관계된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모형 분석을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의 필요성을 비롯한 통일 관련 쟁점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는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 이후 경험적 분석에서 성별, 연령,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물론, 이념을 비롯한 정치변수를 일차적으로 고려한다.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s)로 인한 잘못된 분석을 지양하고자 다양한 수준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우파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와 사회지배 경향이라는 성격이 당위성과 상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통일에 대한 태도 형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해볼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변 국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가 통일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판단과 태도와 연계되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나아가 영남 지역 내에서의 분화와 호남의 특징 등 지역주의의 변화를 통일인식과 연계해 다루어 본다. 또한, 연령과 성별 간 상호작용 관계에 주목하여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젊은 연령대에서 성별 차이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확인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는 것으로 글을 마칠 것이다.

나. 선행연구 검토

무엇이 2018년 대한민국 국민의 통일인식과 연계되어 있는가?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대 차이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¹²⁾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북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¹³⁾ 통일에 대한 기대 효용,¹⁴⁾ 정파성,¹⁵⁾ 이념적 차이¹⁶⁾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12) 권영승·이수정,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인식: N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권 2호 (2011);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제7권 2호 (2015); 변중현, “20대 통일인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3)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인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제22권 1호 (2014).

14) 백대현·이재완, “통일인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편익과 비용 인식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가설은 젊은 연령대 혹은 세대 일수록 기성세대가 가진 당위론적 통일인식에서 벗어나 통일이 실현된 후 나타나게 될 사회적 갈등이나 경제적 이익 등 현실적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통일을 바라본다는 것이다.¹⁷⁾ 따라서 젊은 연령대, 특히 20대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통일세대’가 통일의 실현에 대해 부정적이며 소극성을 보인다는 견해를 보인다.¹⁸⁾ 이내영(2014)의 연구는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정도가 높아지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검증하였다.¹⁹⁾ 류현숙 외(2013)는 여성이 남성보다 안보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미래의 남북한 관계를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젊은 연령대와 여성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였다.²⁰⁾

이내영(2014)의 경우 여러 경쟁 가설을 통계모형에 포함한 결과, 북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통일에 대한 기대이익이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념성향도 통일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²¹⁾ 즉 진보성향의 국민은 통일의 당위성과 가능

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2호 (2015); 이내영, 위의 글; 조진만·한정택,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비교 분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6권 1호 (2014); 최우선 외, “통일인식 차이의 원인: 합리주의적 설명,”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 15) 정동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인식 변화-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5호 (2016).
- 16) 박종희, “진보와 보수, 그리고 통일: 통일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통일에 대한 인식과 국내정치의 이념적 대립구도의 관계,” 윤영관 편, 『한반도 통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3);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인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 17) 권영승·이수정,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인식: N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참조.
- 18)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참조.
- 19)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인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 20) 류현숙 외, 『국민의 대북 안보인식 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013).
- 21)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인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성에 대해 보수성향의 국민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설문조사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적용한 박종희(2013)의 연구 역시 변동의 양상은 있으나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보수성향의 응답자보다 통일지향성이 비교적 높음을 보였다.²²⁾ 그러나 2016년 선거 이후 통일의 식조사 결과를 사용한 정동준(2016)은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확인하였으나 이념에서는 그러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는 못했다.²³⁾

통일이 주는 이익과 이를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합리적으로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합리주의적 가설은 각각 다른 서베이 자료를 사용한 최근 연구에서 뚜렷하게 뒷받침된다. 백대현·이재완(2015)은 ‘2013년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통일을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진술과 통일의 필요성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²⁴⁾ 또한, 최우선 외(2016) 역시 2015년 SBS-EAI 통일한국 프로젝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 통일 시점 예상, 통일비용 부담 의향, 통일세 신설, 통일 후 빈부격차 등 쟁점 모두에 대해 주관적 편익계산 변수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함을 보였다.²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활용한 조진만·한정택(2014)은 분석 대상이 젊은 세대로 한정되었다는 한계는 있으나 남한의 경우 현실적 이익의 중요성과 정치적 관심이 통일인식에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보였다.²⁶⁾

22) 박종희, “진보와 보수, 그리고 통일: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통일에 대한 인식과 국내정치의 이념적 대립구도의 관계.”

23) 정동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24) 백대현·이재완,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편익과 비용 인식을 중심으로.”

25) 최우선 외, “통일인식 차이의 원인: 합리주의적 설명.”

그러나 설문조사를 사용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는 인과관계 해석과 관련한 문제점을 노출한다. 특히, 통계모형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통일의 필요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놓고 편익계산을 독립변수로 놓은 뒤 편익계산이 원인이고 통일의 필요성 인식이 결과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실제 설문조사에서 편익계산과 통일의 필요성의 두 변수는 동시에 측정되며, 이들이 사용한 회귀모형은 그 자체로 어떠한 인과관계도 담보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편익계산이 응답자가 통일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역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익(혜택)이 그 비용보다 더 크다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과 통일의 필요성 간 관계 역시 역방향의 인과관계가 가능한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가진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북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별로 가지지 못한다고 응답하는 것 역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위의 문제의식은 이념변수에도 적용이 된다. 일반적으로 통일의식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이념은 자가평가(self-placement) 방식으로 측정한다. 응답자가 0(가장 진보)~5(중도)~10(가장 보수)이라는 ‘진보-보수 연속선(liberal-conservative continuum)’ 상에 자신의 이념 위치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측정방식은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념을 분석한 구본상(2016)의 연구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직전과 직후에 국회의원 후보자(당선자)의 이념에 관해 물어봤을 때,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이 자신의 이념 위치를 변경했다.²⁷⁾ 일반 유권자보다

26) 조진만·한정택,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27) 구본상, “서베이 기반 정치 엘리트 이념 측정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회의원 이

훨씬 체계화된 신념 체계(belief system)를 가지고 있다고 기대되는 정치 엘리트인 국회의원 당선자들마저 스스로 이념을 파악할 때는 심한 단기 변동성을 보이며,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등을 반영하여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박 논란과 공천 파동,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보수 또는 보수에 가까운 유권자(conservative-leaning voters) 가운데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거나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자신을 실제 이념보다 진보 방향으로 움직여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자가평가 측정방식의 이념변수는 통계모형에서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

선행연구 가운데 통계모형에 적절한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가성관계(spurious relationship)를 주요 발견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변수는 정부(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물론 지지 정당과도 연계되어 있다. 특히 이것은 선거 직전이나 직후에는 대통령의 통일정책이나 통일담론과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주창했을 때, 통일에 대해 소극적·부정적 태도를 지녔더라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통일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부정적 견해에서 긍정적 견해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념이나 정당일체감 외에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또는 지지 여부도 통제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까지 주요 경험적 연구 중 이를 적절하게 통제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개인의 성격은 타 집단에 대한 인식, 특히 편견에 영향을 줄

넘지수 측정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4호 (2016).

수 있다. 북한에 대해 평가할 때 개인의 성격이 작동한다면 그 성격과 통일의식 간에도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다룬 국내 연구는 우파권위주의와 북한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이상신(2014)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²⁸⁾ 특히, 우파권위주의 요소 가운데 “소수집단과 외부인에 대한 공격적인 지배성향을 뜻하는 권위주의적 공격성(authoritarian aggression)”은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⁹⁾ 이렇게 볼 때, 개인 성격 차원에서의 변수도 통일의식 분석에 포함한다면 더욱 견고한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다.

선행 통계모형에서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우리의 주변국 인식, 북한인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다. 통일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지만, 주변국과의 관계 내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따라서 자국에 대해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변국을 어떻게 느끼는지는 통일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거나 주변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통일에 드는 비용을 크게 매길 것이며, 따라서 통일의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적극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쉽게도 자국에 대한 자긍심, 북한인식, 주변국 인식 등을 동시에 고려한 경험적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등 체계적인 설문조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통일인식과 관련한 양질의 자료가 축적되고 있으나 많은 선행연구가 연구자의 관심요인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즉

28)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9) 이상신, “정치심리학: 역사와 현황,” 『현상과 인식』, 제33권 4호 (2009), p. 24.

인구사회학적 변수, 정치적 선호, 이념, 개인의 성격, 우리나라, 북한 및 주변국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험적 선행연구는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여러 경쟁적 가설과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변수를 포함한 종합적 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일인식과 유의미하고 견고하게 연관된 변수를 찾고, 이를 통해 2018년 현재 우리 국민이 가진 통일인식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① 사회인구학적 변수 외에도 ②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인식 또는 평가, ③ 개인의 성격, ④ 정치적 성향, ⑤ 통일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가설을 차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인식과 관련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연령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젊은 연령대일수록 기성세대가 가진 당위론적 통일인식에서 벗어나 통일이 실현된 후 나타나게 될 사회적 갈등이나 경제적 이익 등 현실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통일을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해 볼 수 있다.

[가설 1] 연령이 낮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것이며, 통일 관련 이슈에 소극적일 것이다.

이내영(2014)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가설을 검증하였고, 이 가설은 비교적 최근까지 정치학 분야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졌다.³⁰⁾ 류현숙 외(2013)는 여성이 남성보다 안보

상황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다.³¹⁾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젊은 연령대와 여성이 통일에 대해 더 부정적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구본상(2017)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젊은 여성 유권자들은 정치에 관한 관심이나 지식이 동 연령대 남성에게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는 경향도 보이며,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³²⁾ 이는 잉글하트와 노리스(Inglehart & Norris 2000)가 강조했던 ‘현대적 성차’(modern gender gap)의 모습이다.³³⁾ 이에 따르면 젊은 연령대 여성이 통일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해 볼 수 있다.

[가설 2] 연령이 낮아질수록 여성은 통일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것이다.

통일의식과 관련하여 소득 및 교육수준과 같은 변수는 다중회귀 모형을 적용한 기존 연구에서도 종속변수와 견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가설은 세우지 않았으나 통계모형에는 통제변수로 포함할 것이다.

지역적으로 볼 때,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영남 지역, 특히 대구·경북 지역 주민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30)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31) 류현숙 외, 『국민의 대북 안보의식 조사』.

32) 구본상, “ARS 조사방식과 젊은 연령대 여성 표집의 실패: 정치적 의견이 강한 유권자 비율에서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18권 1호 (2017), pp. 42~48.

33) Ronald Inglehart and Pippa Norris, “The Developmental Theory of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1, no. 4 (2000), p. 442.

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며,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호남 지역 국민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구성한다.

[가설 3] 다른 지역에 비해 영남, 특히 대구·경북 지역 국민은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지만, 호남 지역 국민은 더 강하게 느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통일인식 간 관계에 대한 가설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 자긍심을 지닐수록 통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 필요성 역시 크게 느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강대국과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충분하지 못하면 통일의 가능성을 낮게 보며, 설사 통일이 가능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드는 역경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경우, 통일과 관련한 역경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볼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하나된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분리한다면 자긍심이 통일의 필요성 인식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충분하다면 적어도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저항은 크지 않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해 볼 수 있다.

[가설 4]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클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비롯해 통일과 관련한 쟁점에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 혹은 이미지도 국민의 통일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원 혹은 협력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쟁점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는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본다면,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리라 예측해볼 수 있다. 반대로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이들과의 통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흡수통일 또는 우리 체제로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북한을 극복 또는 적대대상으로 보고 우리의 체제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은 협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평화공존이 가능하다면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에 대한 답을 통해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통일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을 적대대상이자 협력대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서 적대대상으로도 보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다. 결국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적대, 협력 등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해 볼 수 있다.

[가설 5]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며, 통일문제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더 느끼며,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것이다. 만약 북한을 협력대상인 동시에 적대대상으로도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경우 그 효과는 상쇄될 것이다.

주변국에 대한 인식 역시 국민의 통일인식과 연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감을 가질수록 통일을 위한 한반도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과의 관계만 개선되면 통일의 가능성은 커진다고 판단할 것이다. 반면, 주변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설령 우리와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통일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리라 생각할 수 있다. 통일의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것은 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우 크다는 인식과 연계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일 수 있다.

민족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분단된 남북한 모두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지는 사람일 경우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허용 관점에서도 주변국 인식과 통일을 연계시켜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에 대해 호감을 느낄 수 있다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북한과 통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적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주변 국가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가설을 수립해 볼 수 있다.

[가설 6-1] 주변국을 긍정적으로 볼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더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6-2]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 적대적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더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6-3]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허용 관점에서 중국에 호감이 클수록 같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과의 통일의 필요성에 덜 부정적일 것이다.

셋째, 개인의 성격(personality)과 통일인식과 관련한 가설이다. 이상신(2014)의 연구는 우파권위주의 성격을 가진 경우 권위주의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으며(Altemeyer 1996),³⁴⁾ 이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³⁵⁾ 그러나 이것이 통일의 필요성과 반드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는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할 때보다 적대대상으로 인식할 때 통일의 필요성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가설 5]와 논리적 맥을 같이 한다.

[가설 7-1] 우파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국민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더 느끼며,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일 것이다.

또한, 사회지배 경향과 통일인식도 연계시켜 볼 수 있다. 사회지배 경향은 ‘세상에는 원래 우월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이 존재하며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성격이라 할 수 있다.³⁶⁾ 특히, 사회지배 경향은 경제 이슈와 관련하여 뚜렷하게 나타

34) Bob Altemeyer,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참조.

35)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36) Felicia Pratto, Jim Sidanius and Shana Levin, “Social Dominance Theory and the Dynamics of Intergroup Relations: Taking Stock and Looking Forward.”

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빈부격차를 인정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회지배 경향이 강할수록 통일비용과 관련된 판단을 내릴 때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의 발전수준 차이가 뚜렷한 상황에서 통일비용의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는 독일통일 경험에서도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사회지배 경향이 강할수록 북한이 우리보다 열등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 우리가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가설 7-2] 사회지배 경향이 강한 국민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며, 통일문제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다.

넷째, 정치적 성향 및 판단과 통일인식 간 관계에 대한 가설이다. 대한민국 이념은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⁷⁾ 여러 차원(dimension) 가운데 서구와는 달리 경제적 차원보다는 정치·안보(반공)와 관련한 차원이 가장 주된 차원이다.³⁸⁾ 예를 들어 큰 정부를 선호하며 국가가 대기업을 견제해주기 바라는 경제적·진보적 성향을 가졌더라도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북한에 대해 반대하고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반도문제를 이해한다면 자신을 보수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7 (2006); Jim Sidanius, "The Psychology of Group Conflict and the Dynamics of Oppression: A Social Dominance Perspective," in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eds. Shanto Iyengar and William McGuir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37) 구본상, "서베이 기반 정치 엘리트 이념 측정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회의원 이념지수 측정 사례" 참조.

38) 강원택,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제36권 (2012) 참조.

많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자가평가 방식의 이념 측정은 뚜렷한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그 외의 변수를 통해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에서 보수정당은 안보 쟁점과 관련하여 가장 뚜렷하게 구분된다. ‘정통 보수정당’이든 ‘합리적 보수정당’이든 모두 대북문제나 안보와 관련하여서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다. 이렇게 볼 때 보수정당에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가지는 국민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설 8-1] 보수정당에 정당일체감을 가진 국민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며, 통일문제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며, 통일정책과 관련하여서 대통령의 정책 방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따라서 모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꾸준히 자신의 대북관과 대북정책을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검증받는다. 이처럼 국민은 통일정책을 대통령의 통치 영역으로 인식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연구는 정치변수 가운데 이념이나 지지하는 정당 또는 정당일체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대통령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 8-2] 적극적 통일정책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더 공감하며, 통일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일 것이다.

다섯째, 통일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와 통일인식 간 관계에 대한 가설이다. 비용과 이익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국민의 경우 통일

이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판단할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통일의 이익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판단과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판단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이익과 개인이익을 두 축으로 하여 <표 III-1>과 같이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³⁹⁾

<표 III-1> 통일이익에 대한 인식에 따른 유형 구분

| | | 국가적 이익 | |
|--------|--------|--------|--------|
| | | 이익 | 이익이 아님 |
| 개인적 이익 | 이익 | 낙관 | 이기 |
| | 이익이 아님 | 소외 | 비관 |

출처: 최준영(2016)의 <표 2>를 단순화한 것임.⁴⁰⁾

위의 유형에서 통일에 대해 가장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경우는 낙관유형일 것이며, 반대로 가장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경우는 비관유형일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합리주의적 선택’ 관점에서 보면, 이기유형이 소외유형보다는 더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일 것이다. 반대로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익 우선’의 시각에서 보면, 소외유형이 이기유형보다는 더 통일에 대해 긍정적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낙관유형보다 소외유형과 비관유형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며, 특히 비관유형이 가장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통일이익에 대한 인식유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39) 최준영,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p. 119.

40) 위의 글, p. 119.

[가설 9] 통일이익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을 때, 낙관 유형보다 이기, 소외, 비관유형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비관유형이 가장 통일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 인식 또는 평가, 개인의 성격, 정치적 성향, 통일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가설 9개(세부 가설 13개)를 적절한 통계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해 볼 것이다.

다. 경험적 분석

(1) 변수 설명 및 모형

통일인식 분야의 핵심 종속변수는 통일의 필요성이다.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의 4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확한 결과 분석을 위해 중간 답변이 없이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III-1>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요약한 것이다. 2018년에는 필요하다고 응답(‘약간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 응답의 합)한 비율이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여 2014년 시점을 웃돌았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7.3%에 달해 전반적으로 긍정 응답을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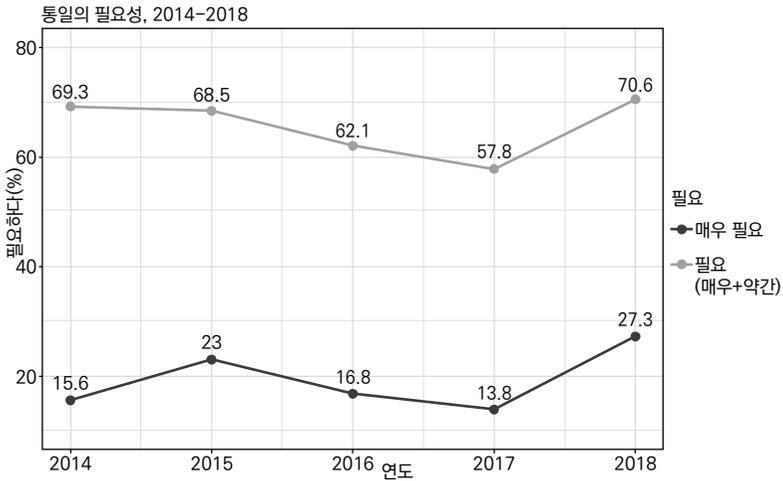
통일의 필요성 변수 외에도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평화공존)’, ‘생전에 통일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모든 것 감내)',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당면 목표)',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나의 소망)', '나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통일세 찬성)',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가 통일 때문에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크다(통일비용)',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민족주의 통일)',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경제우선)' 등을 종속변수로 선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운데 성별은 남성 1, 여성 2로 코딩하였다. 연령은 10세 단위로 끊어 연령대 변수로 만들 때 잃을 수 있는 세대에 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만 나이를 사용하였다. 소득은 가구 월 평균 소득으로 측정하였고,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무학(=1)부터 대학원 박사(=8)까지 서열변수로 측정하였다. 지역변수는 주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측정하였다. 외국 거주도 보기에는 있었으나 실제 응답자 가운데에는 없었다.

정치변수 가운데 이념은 0(매우 진보)~5(중도)~10(매우 보수)의 11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대통령(정부)의 국정운영 평가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다소 잘못하고 있다'~'다소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는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보수정당에 대한 선호는 '자유한국당'을 가장 선호하는 정당으로 응답한 경우 1로, 나머지는 0으로 코딩하였다.

〈그림 III-1〉 통일의 필요성(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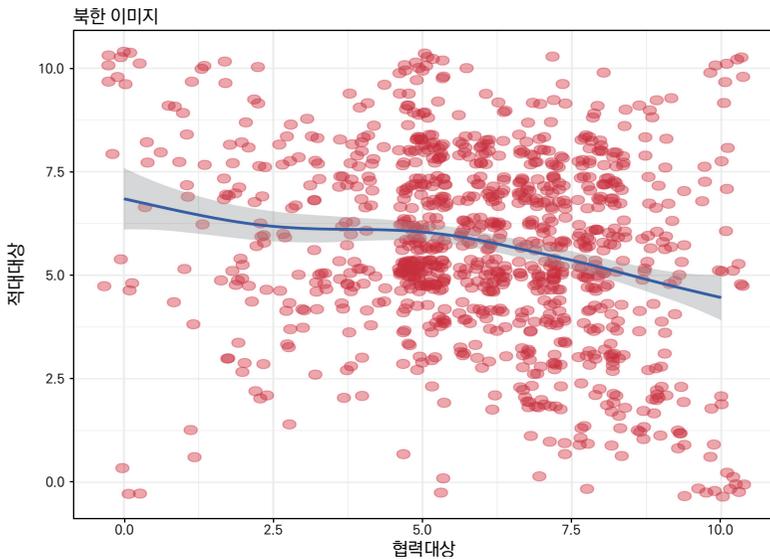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별로 자랑스럽지 않다’~‘다소 자랑스럽다’~‘매우 자랑스럽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북한의 이미지 측정 변수 가운데 ‘협력대상’과 ‘적대대상’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 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을 선택지로 하였고, 이 문항은 여러 설문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됐다.⁴¹⁾ 그러나 이 경우 변수가 범주형 변수로 나왔는데, 이는 여러 문제점을 지닌다. 특히 ‘협력대상’이면서 동시에 ‘적대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음

41) 은기수,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통일과 평화』, 제2권 2호 (2010) 참조.

에도 그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2014년부터는 범주형 변수 대신 각 이미지를 11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도 적용되었다.⁴²⁾ 실제로 본 연구가 사용한 데이터에서도 ‘협력대상’과 ‘적대대상’ 이미지 간에는 명확한 선형 관계를 감지되지 않았다. 상관계수(r)는 -0.21 에 그쳤다. <그림 III-2>는 두 변수값을 지터링(jittering)한 후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실선은 비모수 다중회귀(loess) 선으로 두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반적으로 우하강 곡선의 형태를 보이지만 음영으로 표시한 95% 신뢰구간을 고려할 때, 두 변수 간 관계가 그리 뚜렷하지는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협력대상으로도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 북한의 이미지(협력대상-적대대상) 산점도



42)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p. 192.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귀하께서는 ()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혹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5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매겨주십시오. -5점은 매우 싫어하는 것을, 5점은 매우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측정하였다.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호오도(好惡度) 측정방식으로 측정하여, 양의 값을 가지면 좋아하는 것이며, 음의 값을 가지면 싫어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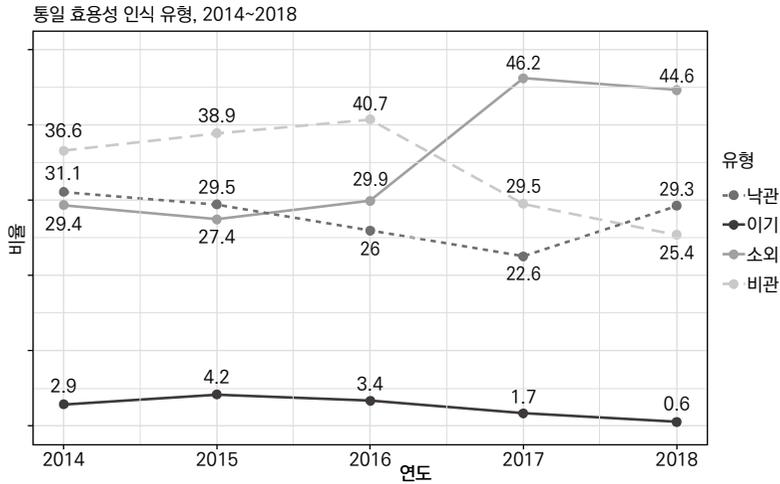
한편, 개인의 성격변수로 우파권위주의와 사회지배 경향 변수는 각각 7개 문항과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내용에 합치하도록 재코딩한 후 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우파권위주의 관련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7점에서 35점 사이 값을 가지며, 사회지배 경향 관련 문항은 7점 척도로 측정되어 이론적으로는 8점에서 56점 사이의 값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8점에서 47점 사이의 값이 관찰되었다. 두 변수 모두 값이 클수록 그 성격이 강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와 통일인식 간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변수는 낙관-이기-소외-비관으로 나뉜다. 2018년 조사의 경우,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안 되지만 나에게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기’ 유형의 경우 전체 0.6%에 불과하다. 따라서 낙관(29.3%)-소외(44.6%)-비관(25.4%)의 세 유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림 III-3〉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 유형의 시계열 추이를 보여주는데 집단별 변화가 매우 역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모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낙관 유형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던 추세에서 2018년 반등하였다. 반면,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 모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비관유형은 2017년 이후 감소함으로써 낙관유형과 비관유형 비율 순위가 바뀌게 되었다. 최근 남북 간, 북미 간 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통일이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주었고, 이는 낙관유형의 비율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까지 30% 미만이었던 소외유형이 2017년 이후 40%를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유념할 만하다.

〈그림 Ⅲ-3〉 통일 효용성 인식 유형, 2014~2018



앞장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을 위해 통계적으로는 순위로지스틱 회귀(ordinal logistic regression)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는 모든 종속변수가 서열변수임에 착안한 것이다. 통계모형을 사용하는 기존 연구 대부분은 가설을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모형적 합도를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종합적인 모형 구성을 위해 핵심 종속변수인 통일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경우 각 설명 변수가 종속변수 설명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두 개의 가성 R^2 (McFadden's pseudo- R^2 , Cragg and Uhler's pseudo- R^2)를 추가로 제시한다.

(2) 연구 결과

(가) 통일의 필요성

〈표 III-2〉는 통일의 필요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순위로지스틱 회귀모형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변수만을 포함한 경우(모형 1-(1)), 연령, 그리고 연령과 성별 간 상관관계 변수가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변수 외에 국가에 대한 자긍심, 북한에 대한 이미지, 주변국에 대한 호오도, 개인의 성격, 통일 효용에 따른 유형변수를 모형에 포함했을 때(모형 1-(2)) 두 가성 R^2 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에도 연령, 그리고 연령과 성별 간 상관관계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그 크기가 크게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는 이념을 비롯해 정치 관련 변수를 포함했을 때(모형 1-(3))에도 변함이 없었다. 즉 연령이 낮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것이며, 통일 관련 이슈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가설 1]과 연령이 낮아질수록 여성은 통일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는 [가설 2]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표 III-2〉 회귀모형 결과(종속변수: 통일의 필요성)

| | 모형 1-(1) | 모형 1-(2) | 모형 1-(3) |
|---|------------------|------------------|------------------|
| | 회귀계수(표준오차) | 회귀계수(표준오차) | 회귀계수(표준오차) |
| 자긍심 | | 0.474** (0.110) | 0.449** (0.110) |
| 사회지배 경향 | | -0.022 (0.013) | -0.020 (0.013) |
| 권위주의 경향 | | -0.031* (0.016) | -0.030 (0.016) |
| 통일소외유형 | | -0.685** (0.155) | -0.682** (0.158) |
| 통일비관유형 | | -1.683** (0.187) | -1.664** (0.189) |
| 북한 이미지: 협력대상 | | -0.127** (0.032) | -0.131** (0.032) |
| 북한 이미지: 적대대상 | | 0.257** (0.033) | 0.239** (0.033) |
| 미국 호감도 | | -0.036 (0.040) | -0.014 (0.041) |
| 중국 호감도 | | 0.100* (0.047) | 0.090 (0.047) |
| 일본 호감도 | | -0.102* (0.041) | -0.100* (0.041) |
| 러시아 호감도 | | 0.024 (0.053) | 0.030 (0.053) |
| 대구·경북 | | -0.663** (0.218) | -0.503* (0.225) |
| 부산·울산·경남 | | -0.168 (0.183) | -0.113 (0.185) |
| 호남 | | 0.251 (0.234) | 0.112 (0.237) |
| 소득 | 0.0004 (0.0003) | 0.0002 (0.0003) | 0.0002 (0.0003) |
| 교육수준 | 0.058 (0.058) | 0.033 (0.064) | 0.014 (0.065) |
| 연령 | 0.076** (0.013) | 0.070** (0.013) | 0.076** (0.014) |
| 성별 | 0.499 (0.374) | 0.500 (0.393) | 0.530 (0.396) |
| 연령:성별 | -0.025** (0.008) | -0.022** (0.008) | -0.023** (0.008) |
| 대통령 국정지지 | | | 0.258* (0.108) |
| 자가평가 이념 | | | -0.050 (0.040) |
| 자유한국당 정당일체감 | | | -0.233 (0.229) |
| 1 2 | -0.389 (0.689) | -1.446 (0.939) | -1.009 (0.984) |
| 2 3 | 1.987** (0.677) | 1.475 (0.934) | 1.929* (0.980) |
| 3 4 | 4.038** (0.686) | 4.082** (0.941) | 4.564** (0.989) |
| N | 992 | 991 | 991 |
| McFadden's Pseudo R ² | 0.06 | 0.20 | 0.21 |
| Cragg and Uhler's Pseudo R ² | 0.15 | 0.42 | 0.43 |

주: ** $p < 0.01$; * $p < 0.05$.
 () 안은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

[가설 3]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영남, 특히 대구·경북 지역 국민은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반면 호남 지역 국민은 더 강하게 느낄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뒷받침되었다. 다른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면, 지역 관련 변수의 회귀계수 방향은 가설이 예측한 방향과 일치했으나 대구·경북 지역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영남 지역이 통일의식과 관련하여 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합자료에서는 뚜렷하게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호남 지역의 경우 중요 변수를 모형에 포함할 경우 다른 지역과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통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자긍심 변수의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클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비롯해 통일과 관련한 쟁점에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4]는 뚜렷하게 뒷받침되었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서 협력대상 변수와 적대대상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계수의 부호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것은 만약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측정하는 범주형 변수를 사용했다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과는 [가설 5]를 뒷받침한다. 즉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며, 통일문제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 통일의 필요성을 더 느끼며,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일 것이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통일의 필요성과 부의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은 유념할 만하다. 오히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간 관계에 대한 가설은 부분

적으로만 뒷받침되었다. 우선 주변 국가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일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설 6-1]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민족주의 관점에서 일본에 적대적인 국민은 상대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 보았던 [가설 6-2]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과 관련한 [가설 6-3]은 모형 1-(2)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으나, 정치 관련 변수를 포함한 모형 1-(3)에서는 통계적 유의미성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허용 관점에서 중국에 대해 호감을 느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더 긍정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주변국 가운데 일본에 대한 호감도만이 유효하다는 것은 한국전쟁과 냉전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적 반감이 있으며, 이러한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성격과 관련한 가설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가설 7-1]은 우파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국민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더 느끼며,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일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모형 1-(2)에서 우파권위주의 변수는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것은 우파권위주의 성격이 강한 국민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의미로 [가설 7-1]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정치변수를 포함했을 때 우파권위주의 변수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게 된다. 반면 사회지배 경향 변수의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7-2]는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

보수정당에 정당일체감을 느끼는 국민과 통일인식에 대한 가설은 부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우선 보수정당에 정당일체감을 가진 국

민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느끼며, 통일문제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라고 본 [가설 8-1]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반면, 대통령(정부)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통일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가설 8-2]는 확실하게 뒷받침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이익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낙관 유형과 비교할 때 소외 및 비관유형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덜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 9]처럼 낙관유형과 비교했을 때 이기, 소외, 비관유형은 통일에 부정적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비관유형이 가장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회귀계수의 크기와 표준오차를 고려하면 [가설 9]는 매우 뚜렷하게 뒷받침되었다.

(나) 평화공존과 민족주의 통일

〈표 III-3〉의 첫 번째 열(모형 2)은 종속변수를 ‘전쟁 없이 남북한 평화공존이 가능하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진술에 대한 의견으로 할 때 순위로지스틱 회귀모형 결과를 나타낸다. 앞에서 사용한 모형과 비교할 때, 전체적 모형적합도는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간’ 답변 없이 4점 척도로 측정한 통일의 필요성 변수와는 달리 평화공존에 대한 변수는 중간 답변을 허용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많은 일반인 대상 설문에서 극단적인 값보다는 중간값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추론은 충분히 타당성을 지닌다.

우선 유의수준 통과를 기준으로 할 때, 통일이익 인식에 따라 나는 유형과 관련한 [가설 9]와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가설 5]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했을 때와 회귀계수의 방향은 모두 반대이다. 즉 통일소외유형과 통일비관유형은 평화공존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볼수록 평화공존에 부정적인 반면 북한을 협

력대상으로 볼수록 평화공존에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변수와 관련된 것으로 대구·경북 지역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에 반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평화공존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호남 지역은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흔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의 영향을 받아 호남 지역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결과에 따르면 호남 지역 주민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통일 그 자체보다는 평화공존 측면에서 다른 지역 주민과 차별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사실 왜 부산·울산·경남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 비해 평화공존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는 현재로서는 적절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단순히 표집상의 문제인지 근본적 특성이 반영된 것인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변수의 회귀계수의 경우 예상대로 음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연령이 높아질수록 평화공존이 가능하면 통일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표 III-3〉의 두 번째 열(모형 3)은 종속변수를 ‘남북한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라는 진술에 대한 의견으로 설정했을 때 순위로지스틱 회귀모형 결과를 나타낸다. ‘평화공존’ 결과와 비교할 때 모형적합도는 향상됐다. ‘평화공존’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일이익 인식에 따라 나는 유형과 관련한 [가설 9]와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가설 5]가 확실하게 뒷받침되었다.

‘평화공존’ 결과와 몇 가지 변수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첫째, 자긍심과 관련된 [가설 4]가 뒷받침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 변수의 회귀계수는 뚜렷하게 음의 값(-0.201)을 나타냈는데, 이는 우

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낮을수록 남북한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통령(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즉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할수록 남북한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수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나 이념변수는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통일과 관련한 문제를 국회나 정당과 연계시키기보다는 대통령(정부)에 연계시키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주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던 세 지역 모두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였다(대구·경북 0.463, 부산·울산·경남 0.488, 호남 0.930).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들 지역 모두 남북한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특히, 지역적으로 통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졌던 호남 지역이 경북 지역의 두 배에 가까운 회귀계수 값을 가졌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는 다른 조건들이 같다고 가정할 때 호남 지역 주민은 남북한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공존’ 결과와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 주민들은 통일 그 자체보다는 평화상태의 유지를 더 중요한 것으로 본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III-3〉 회귀모형 결과(종속변수: 평화공존, 민족주의 통일)

| | 전쟁 없이 평화공존 가능하면 통일은 필요 없다 | | 남북한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 | |
|---|------------------------------|----------|-------------------------------|----------|
| | 모형 2 | | 모형 3 | |
| | 회귀계수(표준오차) | | 회귀계수(표준오차) | |
| 자긍심 | -0.001 | (0.102) | -0.219* | (0.103) |
| 사회지배 경향 | 0.021 | (0.012) | 0.007 | (0.012) |
| 권위주의 경향 | 0.002 | (0.015) | 0.015 | (0.015) |
| 통일소외유형 | 0.620** | (0.145) | 0.765** | (0.146) |
| 통일비관유형 | 1.068** | (0.174) | 1.031** | (0.176) |
| 북한 이미지: 협력대상 | 0.106** | (0.029) | 0.202** | (0.030) |
| 북한 이미지: 적대대상 | -0.096** | (0.031) | -0.151** | (0.032) |
| 미국 호감도 | 0.003 | (0.038) | 0.066 | (0.039) |
| 중국 호감도 | 0.039 | (0.044) | 0.029 | (0.046) |
| 일본 호감도 | 0.033 | (0.038) | -0.063 | (0.039) |
| 러시아 호감도 | -0.005 | (0.049) | -0.046 | (0.050) |
| 대구·경북 | 0.151 | (0.204) | 0.463* | (0.210) |
| 부산·울산·경남 | -0.556** | (0.175) | 0.488** | (0.177) |
| 호남 | 0.863** | (0.224) | 0.930** | (0.218) |
| 소득 | 0.0002 | (0.0003) | -0.0001 | (0.0003) |
| 교육수준 | -0.035 | (0.060) | 0.067 | (0.061) |
| 연령 | -0.017 | (0.012) | -0.022 | (0.012) |
| 성별 | 0.074 | (0.367) | -0.218 | (0.374) |
| 연령:성별 | 0.003 | (0.008) | 0.007 | (0.008) |
| 대통령 국정지지 | -0.119 | (0.099) | -0.229* | (0.104) |
| 자가평가 이념 | -0.017 | (0.038) | 0.021 | (0.038) |
| 자유한국당 정당일체감 | 0.186 | (0.209) | -0.094 | (0.215) |
| 1 2 | -2.720 | (0.910) | -4.755** | (0.946) |
| 2 3 | -0.585 | (0.904) | -2.614** | (0.923) |
| 3 4 | 0.322 | (0.905) | -0.904 | (0.921) |
| 4 5 | 2.542 | (0.908) | 1.387 | (0.920) |
| N | 991 | | 988 | |
| McFadden's Pseudo R ² | 0.06 | | 0.10 | |
| Cragg and Uhler's Pseudo R ² | 0.18 | | 0.27 | |

주: ** $p < 0.01$; * $p < 0.05$.

() 안은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

(다) 통일비용 관련 문항: 통일세 부담, 통일편익론

〈표 III-4〉는 통일을 비용과 연결하는 진술(통일세 부담, 통일편익론)을 종속변수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두 종속변수 모두 통일과 관련한 비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 우선 통일세 부담은 ‘나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라는 문항에 대한 답으로 측정했는데 비용이 직접적이면서 세금 인상과 연계된다. 반면, 통일편익론은 ‘분단 때문에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가 통일 때문에 지불해야 할 비용보다 크다’라는 문항에 대한 답으로 측정하는데 위의 문항에 비해 원론적이며 즉각적 비용 부담을 언급하지 않는다.

〈표 III-4〉 회귀모형 결과(종속변수: 통일세 찬성, 통일편익론)

| | 통일세 찬성 | | 통일편익론(이익) > 비용 | |
|---|------------|----------|----------------|----------|
| | 모형 4 | | 모형 5 | |
| | 회귀계수(표준오차) | | 회귀계수(표준오차) | |
| 자긍심 | 0.269** | (0.102) | 0.286** | (0.105) |
| 사회지배 경향 | 0.010 | (0.012) | -0.037** | (0.012) |
| 권위주의 경향 | 0.002 | (0.015) | 0.053** | (0.015) |
| 통일소외유형 | -0.609** | (0.145) | -0.253** | (0.145) |
| 통일비관유형 | -1.305** | (0.177) | -0.403** | (0.174) |
| 북한 이미지: 협력대상 | -0.105** | (0.029) | 0.084** | (0.029) |
| 북한 이미지: 적대대상 | 0.173** | (0.031) | 0.090** | (0.031) |
| 미국 호감도 | -0.003 | (0.039) | -0.128** | (0.038) |
| 중국 호감도 | 0.022 | (0.044) | 0.021 | (0.045) |
| 일본 호감도 | -0.024 | (0.037) | 0.013 | (0.038) |
| 러시아 호감도 | -0.020 | (0.049) | -0.026 | (0.049) |
| 대구·경북 | -0.424* | (0.212) | -0.092 | (0.213) |
| 부산·울산·경남 | -0.148 | (0.170) | 0.847** | (0.174) |
| 호남 | -0.281 | (0.211) | 0.501 | (0.221) |
| 소득 | 0.0004 | (0.0003) | 0.0001 | (0.0003) |
| 교육수준 | 0.067 | (0.059) | 0.022 | (0.060) |
| 연령 | 0.035** | (0.012) | -0.017 | (0.012) |
| 성별 | 0.108 | (0.367) | -0.364 | (0.373) |
| 연령:성별 | -0.009 | (0.008) | 0.012 | (0.008) |
| 대통령 국정지지 | 0.494** | (0.100) | 0.066 | (0.101) |
| 자가평가 이념 | -0.035 | (0.037) | -0.052 | (0.037) |
| 자유한국당 정당일체감 | 0.099 | (0.213) | 0.361 | (0.216) |
| 1 2 | 1.582 | (0.912) | -2.264* | (0.917) |
| 2 3 | 3.368** | (0.916) | -0.264 | (0.917) |
| 3 4 | 4.864** | (0.922) | 1.433 | (0.905) |
| 4 5 | 7.826** | (0.953) | 3.807** | (0.911) |
| N | 990 | | 989 | |
| McFadden's Pseudo R ² | 0.12 | | 0.06 | |
| Cragg and Uhler's Pseudo R ² | 0.32 | | 0.15 | |

주: ** $p < 0.01$; * $p < 0.05$.

() 안은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

전체적 모형적합도를 보면 ‘통일세 부담’(모형 4)이 ‘통일편익론’(모형 5)에 비해 대략 두 배 가량 크다. 두 결과 간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드러난다. 우선 자긍심과 관련된 [가설 4]는 두 모형에서 모두 뒷받침된다. 즉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수록 통일 관련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으며, 통일로 인한 이익이 비용(손해)보다 크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이익 인식에 따라 나는 유형과 관련한 [가설 9]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뒷받침되었다.

두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첫째, 북한에 대한 두 이미지가 서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을 언급하는 ‘통일세 부담’(모형 4)의 경우 [가설 5]는 검증된다. 즉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볼수록 통일세 부담에는 부정적 견해를 취하는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볼수록 통일세 부담에 긍정적인 견해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론적인 비용 계산을 언급하는 ‘통일편익론’(모형 5)의 경우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볼수록 통일편익론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북한을 협력의 상대로 볼 때도 통일편익론에 동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북한을 협력의 상대로 보는 이들은 통일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고 통일이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직접적 비용 부담은 꺼리는 ‘통일소극계층’의 성격을 가진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직접적 비용을 언급할 경우, 젊은 연령대는 즉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통일편익론’(모형 5) 결과에서 연령은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않았으나 ‘통일세 부담’(모형 4) 결과에서 연령은 명확하게 양의 값(0.035)을 얻었다. 이는 연령과 통일인식 간 정(+)의 상관관계를 예상한 [가설 1]을 지지한다. 즉 연령이 낮아질수록 통일세를 부담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분단으로 인한 손해가 통일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접적 비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성격과 통일비용 부담을 연계시키지 않았지만, 원론적 통일비용 계산을 묻는 때에는 개인의 성격이 작동하였다는 점이다. ‘통일편익론’(모형 5)의 경우 우파권위주의와 사회지배 경향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동 방향은 [가설 7-1]과 [가설 7-2]처럼 상반되었다(우파권위주의 회귀계수=0.037, 사회지배 경향 회귀계수=-0.057). 즉 우파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통일편익론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지배 경향이 강할수록 통일편익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직접적 비용, 특히 세금 인상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되는 경우, 응답자들은 정부(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통일의식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 간 정(+)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는 [가설 8-2]는 ‘통일세 부담’ 모형에서 견고하게 뒷받침된다. 실제 정부(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통일세 부담’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특히 정책과 연계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평가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원론적 비용을 다루는 ‘통일편익론’의 경우 정부(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아무런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섯째, 문항에 따라 지역적으로 차별성이 드러난다. 직접적 부담을 언급하는 ‘통일세 부담’ 모형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은 뚜렷하게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반면 원론적 비용 계산을 다루는 ‘통일편익론’에서는 그러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통일편익론’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만 ‘통일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라) 통일 우선순위 관련 문항: 경제 우선, 당면 목표

〈표 III-5〉는 통일의 우선순위를 다루는 두 개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통계모형 결과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문제를 선택하겠다(경제 우선)’와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당면 목표)’인데,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먼저 ‘경제 우선’ 모형(모형 6)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은 통일의 이익 인식 유형변수(소외, 비관유형), 북한의 이미지(협력, 적대), 지역변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변수였다. 소외, 비관유형일수록 경제문제를 통일문제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가설 9] 지지). 또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볼수록 경제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볼수록 경제문제보다는 통일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가설 5] 지지). 정부(대통령)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경제문제보다는 통일문제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었다([가설 8-2] 지지).

<표 III-5> 회귀모형 결과(종속변수: 경제우선, 당면 목표)

| | 통일문제보다 경제문제 우선 | 통일은 당면 목표가 아니다 |
|---|-------------------|-------------------|
| | 모형 6 | 모형 7 |
| | 회귀계수(표준오차) | 회귀계수(표준오차) |
| 자긍심 | -0.160 (0.107) | -0.238* (0.103) |
| 사회지배 경향 | -0.023 (0.012) | 0.017 (0.012) |
| 권위주의 경향 | 0.023 (0.015) | 0.026 (0.015) |
| 통일소외유형 | 0.813** (0.147) | 0.573** (0.144) |
| 통일비관유형 | 1.031** (0.179) | 0.886** (0.172) |
| 북한 이미지: 협력대상 | 0.202** (0.030) | 0.108** (0.029) |
| 북한 이미지: 적대대상 | -0.151** (0.032) | -0.161** (0.031) |
| 미국 호감도 | 0.066 (0.039) | 0.054 (0.038) |
| 중국 호감도 | 0.029 (0.046) | 0.026 (0.045) |
| 일본 호감도 | -0.063 (0.039) | -0.007 (0.038) |
| 러시아 호감도 | -0.046 (0.050) | -0.000 (0.049) |
| 대구·경북 | 0.463* (0.210) | 0.674** (0.205) |
| 부산·울산·경남 | 0.488** (0.177) | 0.021 (0.172) |
| 호남 | 0.930** (0.218) | 0.386 (0.213) |
| 소득 | -0.0001 (0.0003) | -0.0003 (0.0003) |
| 교육수준 | 0.067 (0.061) | 0.043 (0.060) |
| 연령 | -0.022 (0.012) | -0.023 (0.012) |
| 성별 | -0.218 (0.374) | -0.112 (0.367) |
| 연령:성별 | 0.007 (0.008) | 0.006 (0.008) |
| 대통령 국정지지 | -0.229* (0.104) | -0.006 (0.101) |
| 자가평가 이념 | 0.021 (0.038) | 0.011 (0.038) |
| 자유한국당 정당일체감 | -0.094 (0.215) | 0.337 (0.213) |
| 1 2 | -4.755** (0.946) | -3.263** (0.913) |
| 2 3 | -2.614** (0.923) | -0.813 (0.904) |
| 3 4 | -0.904 (0.921) | 0.548 (0.904) |
| 4 5 | 1.387 (0.920) | 2.819** (0.908) |
| N | 988 | 989 |
| McFadden's Pseudo R ² | 0.10 | 0.08 |
| Cragg and Uhler's Pseudo R ² | 0.26 | 0.21 |

주: ** $p < 0.01$; * $p < 0.05$.

() 안은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

지역과 관련한 모형 6의 결과는 ‘남북한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모형 3)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지역주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던 세 지역 모두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였다. 지역적으로 통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졌던 호남 지역이 대구·경북 지역의 두 배에 가까운 회귀계수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조건들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호남 지역 주민들이 통일문제보다는 경제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호남은 진보/통일, 영남은 보수/반통일이라는 기존의 지역 인식과는 달리 2018년 현재 호남 지역 주민들은 통일 그 자체보다는 평화 상태의 유지와 현실적 문제인 경제문제 해결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당면 과제’ 모형(모형 7) 결과에서는 자긍심 변수와의 유의미한 관계가 추가로 확인되었다([가설 4] 지지). 즉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수록 통일을 당면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대신 지역변수 가운데에는 대구·경북 지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이 통일을 당면 과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정부(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한 연계를 찾을 수 없었는데, ‘당면 과제’ 문항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마) 적극적 반응 요구 문항: 모든 것 감내, 나의 소망

〈표 III-6〉은 앞에서 다룬 문항에 비해 통일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문항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때의 결과이다. 모형 8은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모든 것 감내)’ 문항에 대한 답변을 종속변수로 한 것이다. 모형 9는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나의 소망)’라는 문항의 답변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이다. 특히, 모형 9는 4점 척도로 측정한 통일의 필요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1-(3)을 제외하면 가장 모형적합도가 높다.

〈표 III-6〉 회귀모형 결과(종속변수: 모든 것 감내, 나의 소망)

| | 통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 | | 통일은 나의 소망이다 | |
|---|--------------------------|------------------|-------------|--|
| | 모형 8 | | 모형 9 | |
| | 회귀계수(표준오차) | | 회귀계수(표준오차) | |
| 자긍심 | 0.309** (0.105) | 0.213* (0.103) | | |
| 사회지배 경향 | 0.004 (0.012) | -0.023 (0.012) | | |
| 권위주의 경향 | 0.049** (0.015) | 0.043** (0.015) | | |
| 통일소외유형 | -0.487** (0.147) | -0.730** (0.145) | | |
| 통일비관유형 | -0.842** (0.174) | -1.420** (0.177) | | |
| 북한 이미지: 협력대상 | -0.162** (0.030) | -0.153** (0.030) | | |
| 북한 이미지: 적대대상 | 0.097** (0.031) | 0.211** (0.031) | | |
| 미국 호감도 | 0.002 (0.038) | -0.001 (0.038) | | |
| 중국 호감도 | 0.029 (0.046) | 0.032 (0.045) | | |
| 일본 호감도 | 0.064 (0.039) | -0.030 (0.038) | | |
| 러시아 호감도 | -0.084 (0.050) | -0.072 (0.049) | | |
| 대구·경북 | -0.337 (0.210) | -0.002 (0.212) | | |
| 부산·울산·경남 | 0.144 (0.173) | -0.801** (0.178) | | |
| 호남 | -0.059 (0.218) | -0.028 (0.215) | | |
| 소득 | -0.0001 (0.0003) | 0.0003 (0.0003) | | |
| 교육수준 | 0.046 (0.060) | 0.002 (0.059) | | |
| 연령 | 0.027* (0.012) | 0.033** (0.012) | | |
| 성별 | 0.073 (0.372) | -0.131 (0.373) | | |
| 연령:성별 | -0.004 (0.008) | -0.005 (0.008) | | |
| 대통령 국정지지 | 0.206* (0.101) | 0.091 (0.100) | | |
| 자가평가 이념 | -0.005 (0.038) | -0.035 (0.037) | | |
| 자유한국당 정당일체감 | 0.214 (0.218) | 0.109 (0.215) | | |
| 1 2 | -0.316 (0.923) | -0.864 (0.908) | | |
| 2 3 | 1.823* (0.922) | 1.144 (0.908) | | |
| 3 4 | 3.330** (0.925) | 2.611** (0.909) | | |
| 4 5 | 6.046** (0.920) | 5.059** (0.922) | | |
| N | 988 | 988 | | |
| McFadden's Pseudo R ² | 0.09 | 0.14 | | |
| Cragg and Uhler's Pseudo R ² | 0.23 | 0.36 | | |

주: ** $p < 0.01$; * $p < 0.05$.

() 안은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

우선 모형 8과 모형 9에서 자긍심은 유효한 변수로 판명되었다([가설 4] 지지). 즉 자긍심이 높을수록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긍심이 높을수록 통일을 본인의 소망이라고 여기는 경향도 확인됐다.

앞의 결과에서 일관성 있게 확인된 [가설 5]와 [가설 9]는 두 모형에서도 지지됐다. 즉 소외, 비관유형일수록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할 의사가 약했으며, 통일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았다. 또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볼수록 두 문항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볼수록 두 문항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문항을 종속변수로 사용할 때, 연령변수는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통일의 필요성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 1-(3)에서 나타났던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가설 2]는 유효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결과는 우파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며, 통일을 본인의 소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가설 7-1] 지지). 이상신(2014)이 주장하듯 우파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할수록 권위주의적 공격성에 따라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⁴³⁾ 그러나 이것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이어지는 대신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할수록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며 통일을 소망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논리적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43)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p. 201.

(3) 연령별·성별 통일의식

2007년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에서 이미 연령별로 통일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⁴⁴⁾ 즉 당시 젊은 층 가운데 남한과 북한을 독립적인 나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나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위협이나 도발을 일으킬 때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족주의담론에 따라 남북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중심의 민족주의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⁴⁵⁾ 그렇다면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2018년 KINU 통일의식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하여 대체로 국민들은 통일과 평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고, 그것이 조사에 반영됐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과정에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이 20대 연령층이었다.

그렇다면 연령과 관련하여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는 통일의식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앞에서 제시한 통계모형 결과를 종합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며, 특히 통일세 등 구체적 비용 부담이나 통일에 대해 적극적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 매우 소극적인 특징을 보였다. 그 원인은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통일의식과 연관될 수 있는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통일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두 부류로 나눈 후 젊은 연령대에서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졌으니 장차 통일 실현에 대해 비판적 전망을 내리는

44) 김병로 외, 『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 pp. 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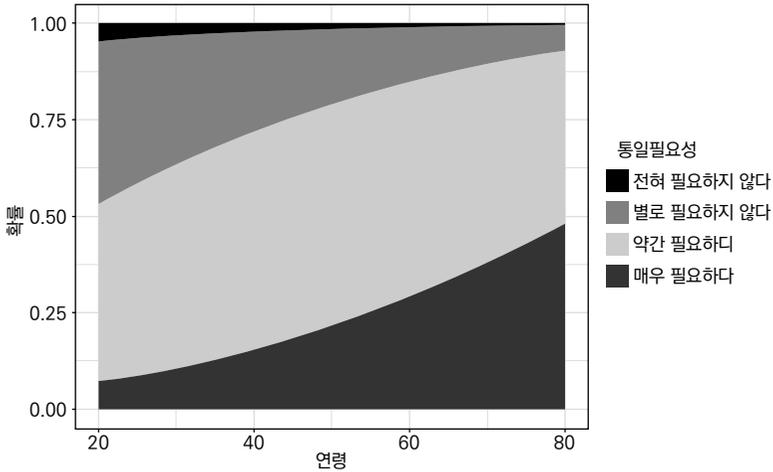
45) 위의 책, p. 13.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통일의 필요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한 통계모형은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다른 종속변수를 사용한 모형에 비해 높았다. 이는 다른 종속변수와는 달리 ‘중간’ 답변이 없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정책과 연계되기보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통일의 필요성 변수가 연령과 관련하여 통일의식을 가늠해보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통계모형 가운데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 1-(3)을 활용하여 연령의 변화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 수준이 4개의 응답 범주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 결과는 여러 변수를 통제한 통계모형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령별 통일의 필요성 값을 요약한 것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10세 단위로 끊어서 연령대별로 보는 대신 만 나이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연령대로 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림 III-4>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III-4〉 연령별 통일의 필요성 인식 확률: 모형 1-(3) 적용



〈그림 III-4〉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젊은 연령층이 부정적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는 비율은 고연령층에 비해 뚜렷하게 낮다. 그러나 부정적 답변의 구성을 보면 젊은 연령층의 경우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이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 비율은 극히 낮다. 실제로 ‘약간 필요하다’ 비율은 고연령층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 결국 젊은 층의 경우 적극 부정층이 아닌 소극 부정층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 부정층은 설득과 교육에 따라 얼마든지 긍정적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령과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는 발견 가운데 하나가 연령에 따른 변화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연령변수와 성별변수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통계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이를 검증해 보았고,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령변수와 성별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았던 기존 연구 결과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정치학 분야에서 성별변수는 잊힌 변수였다. 이는 많은 계량적 정치학 연구가 주로 선거 직후 시행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통계모형에 여러 변수를 포함하면 성별변수가 투표 선택과 같은 종속변수를 설명함에 있어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경우 지금까지 남성보다 보수적인 선택을 하며, 정치에 관한 관심과 정치 지식이 남성에 비해 낮고, 특히 결혼 후에는 남편의 정치적 선택을 따라가는 ‘전통적 성차(traditional gender gap)’가 자주 관찰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은 연구가 젊은 연령대 여성이 통일에 대해 더 부정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본상(2017)의 최근 연구 결과처럼 젊은 여성 유권자들은 정치에 관한 관심이나 지식이 동 연령 남성 유권자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는 경향도 보이며,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⁴⁶⁾ 이러한 특징은 ‘세월호 경험’과 ‘촛불집회’를 경험한 20대 초반의 경우 더욱 뚜렷하다. 이는 잉글하트와 노리스가 강조했던 ‘현대적 성차(modern gender gap)’인데,⁴⁷⁾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관찰되었던 현상이다.⁴⁸⁾ 이미 투표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특징이 한국에서도 감지되었다.⁴⁹⁾ 무엇보다 이번 연구에서 젊은 연령대 여성의 적극적 정치 참여와 진보적 경향이 일반 경제나 정치 쟁점뿐만 아니라 통일 관련

46) 구본상, “ARS 조사방식과 젊은 연령대 여성 표집의 실패: 정치적 의견이 강한 유권자 비율에서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pp. 42~48.

47) Ronald Inglehart and Pippa Norris, “The Developmental Theory of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참조.

48) Pippa Norris, Joni Lovenduski and Rosie Campbell, *Gende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London: The Electoral Commission, 2004) 참조.

49) Bon Sang Koo, “Traditional Gender Gap in the Modernized Society: Dynamics of the Gender Gap in Voter Turnout in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Seoul: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2018) 참조.

쟁점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젊은 연령대 여성은 동 연령대 남성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통일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성별·연령별 변수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통일의식과 관련하여 도출할 수 있는 함의는 젊은 연령대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극적 반응이나 비용 부담을 요구할 때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아 설득과 교육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청년층보다는 ‘전통적 성차’가 뚜렷한 노년층 여성이 설득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4) 소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반영된 KINU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강할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긍심이 강할수록 통일과 관련한 비용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통일을 당면 목표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고, 본인의 소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통일이 개인과 국가에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효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어 보았을 때, 통일이 국가에는 이익이 되겠지만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소외’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과반에 달했다. ‘소외’ 유형과 더불어 통일이 개인과 국가 모두에 이익이 아니라고 여기는 ‘비관’ 유형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취했고, 통일을 위해 감내해야 할 희생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평화공존에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은 늘었으나, 성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적게 인식하지만, 젊은 연령대 여성에서는 동 연령대 남성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통일의 당위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상충하는 결과이다. 이는 잉글하트와 노리스가 제기했던 ‘현대적 성차(modern gender gap)’⁵⁰⁾ 즉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젊은 연령대 여성이 동 연령대 남성보다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진보적 정당을 지지하며 여러 이슈에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현상이 한국에서 통일 관련 쟁점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주변 국가 중 일본에 대한 호오도(好惡度)와 북한에 대한 이미지도 역시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유의미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일본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이 클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덜 적극적이었으며, 평화공존과 통일의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통일편익론’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통일을 위한 비용 부담 등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할 경우 오히려 통일의 필요성에 더 적극적이었고, 상대적으로 평화공존에는 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통일을 위한 비용 부담 등에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상충적이지는 않아 협력의 대상이자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도 높았다.

다섯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들이 상대

50) Ronald Inglehart and Pippa Norris, “The Developmental Theory of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참조.

적으로 부정적이었고, 호남 지역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등 다양한 변수를 통계모형에 포함할 경우,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지역 간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올해 호남 지역의 경우 통일 관련 이슈를 인식할 때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인식과는 달리 호남 지역 주민들은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한다거나 본인의 소망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다른 지역 주민보다 평화공존, 경제 우선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여섯째, 지역변수와 정부(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보수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등의 변수를 통계모형에 포함할 경우, 선한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자가평가 이념(self-placed ideology) 변수와 통일인식 간 유의미한 연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보수정당에 대한 실망과 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본인의 이념 위치를 정할 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엄밀한 검증을 위해서는 더 적절한 이념 측정방식이 요구된다.

일곱째, 개인의 심층 성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세상에는 원래 우월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이 존재하며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지배 경향을 강하게 지닐수록 ‘통일편익론’에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 권위를 존경하고 이에 순응하는 것을 미덕으로 보는 우파권위주의 경향을 가진 경우, 통일편익론에 긍정적이었으며,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통일을 본인의 소망으로 밝히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났다.

위의 분석 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통일담론이 지속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해 자긍심을 가진 사람과 통일이 각 개인에게 효용을 가져다주리라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긍정적 통일 인식의 전반적 향상을 위해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유권자, 그리고 젊은 연령대 유권자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통일의 효용 인식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 제고를 위한 환경은 단기간에 마련될 수 없고, 여러 조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볼수록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편익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통일 달성을 위한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통일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비용 등 당장 부담을 수반하는 통일정책에는 저항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 통일의식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 때 현재의 적극적 통일담론과 정책도 그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 단임제 대통령제의 특성상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느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현재 낙관적 여론에 기대지 말고, 통일정책이 그 방향성 자체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북한인식 결정요인 분석: 국가정체성, 애국심 그리고 대북태도

윤광일(숙명여자대학교)

가. 서론

2018년 4월 27일과 5월 26일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열린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사상 최초로 열린 북미정상회담

담을 기점으로 한반도에서는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 기조와 일련의 후속 조치가 ‘위로부터’ 강하고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여론 또한 일견 호의적으로 보인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로 중앙정치의 쟁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방선거조차 남북 관계를 둘러싼 평화와 냉전 세력 간의 대립구도로 치러졌고 결과는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드러났다. 집권 2년 차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대한 지속적이고 높은 지지 또한 위로부터의 평화와 통일정책 기조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와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평화와 번영은, 더 나아가 통일은 남북 정상 간 그리고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들의 합의만으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통일은 어떻게 오는가?

집단 관계(intergroup relations)에 대한 정치·사회심리학적 연구는 서로 다른 집단을 하나의 공동 목표와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억제하거나 서로 이익을 가져다 줄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조차 극히 어려운 과제임을 오랫동안 보고해 왔다. 이에 의하면, 집단 간 갈등과 반목은 한정된 재화 획득을 둘러싼 ‘현실적 갈등’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집단 간 구분이 자의적이고 개인에게 사소하거나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구분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경우일지라도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와 ‘외집단 폄하(out-group derogation)’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집단 간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둘러싼 경쟁이나 자기 개념의 주요 요소로서 자긍심(self-esteem)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집단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적(motivational) 이유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차별을 수반하는 범주화(categorization)

라는 사회인지적 원인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집단 상황은 곧 갈등 상황이며 집단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한 협력보다는 갈등이 일상 사인 것이다.⁵¹⁾

그렇다면,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대결과 반목 그리고 단절과 적대의 시간이 남북고위급 또는 남북정상회담 직후 단속적으로 그것도 위로부터 부과된 화해와 평화의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었던 사실과 정권 수립 이후 거의 중단 없이 체제 우월성과 적대적 이념을 재생산해 온 두 체제 내 공고화된 정치사회화 기제를 상기해보면, 민간 차원에서 교류협력과 통일이 얼마나 지난한 과업인지 추론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올해부터 급작스레 위로부터 시동이 걸린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 지향 동력은 당분간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집단 관계에 대한 정치·사회심리학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아래로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객관적 시각으로 천착해야 할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집단 관계 연구의 궁극적 지향이 갈등의 원인과 필연성 규명이라기보다는 갈등의 억제와 완화 그리고 해소라는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실천적 목표를 향해야 하는 것처럼 남북관계 연구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체제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통일에 대한 추동력이 거세어질수록 이와 같은 연구의 실천적 적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완전한 통일은 선언과 합의문으로 이루어지

51) Henri Tajfel and John C. Turner,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s. William G Austin and S. Worchel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1986); Donald R. Kinder and Cindy D. Kam, *Us Against Them: Ethnocentric Foundations of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Jack Citrin and David O. Sears, *American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참조.

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구성원이 하나의 같은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공유하여 자신의 정체성의 주요 근원 중 하나를 이 새로운 국가에서 찾게 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집단을 온존, 강화시키는 ‘집단 규범(group norm)’으로서 국가정체성의 주요 구성요소인 애국심에 초점을 맞추어 이의 대북 및 통일 태도에 대한 함의를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 문헌에서 소홀히 해온 한국인 애국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애국심의 개념적 논의를 통해 관련 개념인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내셔널리즘(nationalism)을 구분하고 특정 형태인 맹목적 또는 무비판적(blind or uncritical), 건설적(constructive), 상징적(symbolic) 애국심과 국가자부심(national pride) 등을 소개한다. 이어 정치·사회심리학적 연구 성과에 의존하여 대북 및 통일 태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애국심의 함의를 이론적으로 논의한 후, KINU 통일의식조사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한다.⁵²⁾ 이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서로 적대적인 체제에서 개인 정체성의 일부를 찾고 체제 규범에 충실해 온 남북한주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국가 규범으로서 애국심이 담아야 할 내용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52) 설문조사 자료는 2018년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1일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종이설문을 이용한 대면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표본 표집은 2018년 2월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기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응답자 수는 1,002명이었다.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이었다.

나. 북한인식 결정요인 분석: 국가정체성, 애국심 그리고 대북태도

(1) 개념적 논의

애국심은 문자 그대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애국심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비해 개념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 이는 ‘나라’에 대한 개념적 정의 그리고 역사적, 정치적 함의와 관련이 있다. 이는 애국심뿐만 아니라 후술할 국가정체성과 내셔널리즘의 개념 정의와 이를 둘러싼 논쟁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서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세 개념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네이션에 대한 태도(national attitudes)’ 형성을 분석한 타지펠(Tajfel 1969)도 태도 대상 곧 네이션 개념의 애매모호함이 태도 분석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³⁾

우선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애국심의 대상이 되는 나라는 ‘파트리아(patria)’를 번역한 것으로 혈연과 공통의 언어, 종교, 역사 등에 바탕을 둔 인종 또는 문화 공동체를 의미하는 ‘나티오(natio)’와 구분되는 정치공동체를 의미한다. 정치공동체로서 파트리아는 국가로 번역되는 일련의 개념 중 country, state, polity 등에, 인종 또는 문화 공동체로서 나티오는 nation에 해당한다.⁵⁴⁾ 파트리아는 근대 이후에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개념화한 국가(state), 곧 특정한 영토 내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권을 행사하는 인간 공

53) Henri Tajfel, “The Formation of National Attitudes: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Interdisciplinary Relationships in the Social Sciences*, eds. Muzafer Sherif and C. W. Sherif (Chicago: Aldine, 1969), p. 137.

54) Igor Primoratz, “Patriotism,”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Edward N. Zalta (2017),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um2017/entries/patriotism/>> (검색일: 2018.7.1.).

동체를 가리키게 되는데, 이 개념상 근대 국가는 네이션(nation)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하지 않으며 모든 네이션이 베버 개념의 국가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복수의 네이션 집단이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⁵⁵⁾

그럼에도 애국심의 대상으로 18세기 서구에 나타난 근대 국가는 형성 이전에 실재한 것이든 형성 과정에서 정치엘리트가 만들어 동원한 것이든, 네이션 또는 특정 영토 내에서 공통의 기원 신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연대감을 가진 인간 공동체를 의미하는 ‘에쓰니(ethnie)’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국가(nation-state)’로 분류된다.⁵⁶⁾ 다시 말해서 애국심이라는 신념 또는 태도의 대상은 어원상 정치공동체로 국민 기본권과 통치원리에 대한 근본규범으로서 헌법과 이를 구현하는 정치제도를 함축하나 근대 이후 국가는 대체로 국민국가이기에 태도 대상이 인종, 언어, 문화, 역사 등도 포괄하게 된다. 또한, 어느 경우든 국가는 구성원 없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태도 대상은 ‘같은 국민(compatriot)’을 포함하게 된다.⁵⁷⁾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애국심, 국가정체성,

55) Daniel Bar-Tal and Ervin Staub, *Patriotism i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Nations* (Chicago, Illinois: Nelson-Hall Publishers, 1997); Montserrat Guibernau, "Anthony D. Smith on Nations and National Identity: A Critical Assessment," *Nations and Nationalism*, vol. 10, no. 1/2 (2004), pp. 41~125; Richard R. Verdugo and Andrew Milne, *National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Charlotte: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16) 참조.

56)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86) 참조; 근대 이후 국가 형성 과정은 영토 내 복수 네이션 집단의 구성원을 “문화적 균질화(cultural homogenization)”를 통해 국민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Montserrat Guibernau, "Anthony D. Smith on Nations and National Identity: A Critical Assessment," pp. 125~141). 따라서 이 글에서는 네이션(또는 민족) 국가보다는 국민국가로 번역한다.

57) Daniel Bar-Tal and Ervin Staub, *Patriotism i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Nations* 참조; Elizabeth Theiss-Morse, *Who Counts as an American?: The Boundaries of National Identity*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22~23.

내셔널리즘의 태도 대상으로서 나라 또는 국가를 국민국가에 한정하기로 한다.

애국심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관련 개념인 국가정체성과 내셔널리즘 간의 이론적·경험적 구분 시도에서도 사전적 정의의 유용함을 제한한다. 정치심리학에서 애국심은 주로 국가정체성의 긍정적 측면 또는 심리적 결과로 부정적 대응인 내셔널리즘과 구분하여 논의되어 왔다.⁵⁸⁾ 우선 국가정체성은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 이론을 원용하여 한 개인을 다른 나라 국민과 구분하게 하는 기준 또는 범주인 동시에 같은 나라의 다른 국민과 공유하고 있는 자기 개념(self-concept)의 한 부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⁵⁹⁾ 또한, 국가정체성은 국가에 대한 자기 동일시(self-identification), 국민과 국가에 대한 정서적 애착심(emotional attachment), 국민의 기준과 범위

58) Rick Kosterman and Seymour Feshbach, "Toward a Measure of Patriotic and Nationalistic Attitudes," *Political Psychology*, vol. 10, no. 2 (1989), pp. 74~257; Daniel Druckman, "Nationalism, Patriotism, and Group Loyalty: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ersho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38, no. 1 (1994), pp. 43~68; Rui J. P. De Figueiredo, Jr and Zachary Elkins,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1 (2003), pp. 88~171; Qiong Li and Marilyn B. Brewer, "What Does It Mean to Be an American? Patriotism, Nationalism, and American Identity after 9/11," *Political Psychology*, vol. 25, no. 5 (2004), pp. 39~727; Leonie Huddy and Nadia Khatib,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1 (2007), pp. 63~77; Eldad Davidov, "Measurement Equivalence of Nationalism and Constructive Patriotism in the Issp: 34 Countri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olitical Analysis*, vol. 17, no. 1 (2009), pp. 64~82; Jack Citrin and David O. Sears, *American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pp. 58~59.

59) Henri Tajfel and John C. Turner,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p. 66; Kristen Renwick Monroe, James Hankin, and Renée Bukovchik Van Vechten,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dentity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no. 1 (2000), pp. 419~447; Marilyn B. Brewer, "The Importance of Being We: Human Nature and Intergroup Relations," *American Psychologist*, vol. 62, no. 8 (2007), pp. 38~728 ; 윤광일, "한국인 국가정체성의 정치심리학," 『문화와 정치』, 제4권 4호(2017), pp. 5~41.

를 규정하는 규범적 내용에 대한 신념 등의 세 가지 심리적 요소로 구성된다.⁶⁰⁾ 개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 자기 개념을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욕구 내지는 동기가 소속감을 갖고 동일시하게 되는, 곧 자기 개념의 일부가 되는 국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애착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⁶¹⁾ 국가정체성은 개인의 여타 사회정체성과 마찬가지로 귀속적인 성격 특성(personality trait)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긴 하지만,⁶²⁾ 구성원 자격의 공식적 경계를 확정할 수 있고 구성원에게 공식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권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종이나 젠더 등과 같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여타 사회정체성과 뚜렷하게 구분된다.⁶³⁾

국가정체성의 심리적 구성 요소인 정서적 애착심은 애국심과 매우 밀접한 개념으로 애국심을 국가정체성의 한 측면 또는 발현(manifestation)으로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⁶⁴⁾ 실제로 애국심에 대

60) Jack Citrin and David O. Sears, *American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p. 170; 집단(사회, 국가) 정체성 연구에서 정체성으로 번역되는 identity와 identification은 대체로 상호 대체 가능한 개념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전자는 ‘내용(content),’ 후자는 개인이 집단(사회, 국가)에 통합(incorporation)되는 ‘과정(process)’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Marilynn Brewer, “Social Identity and Citizenship in a Pluralistic Society,” in *The Political Psychology of Democratic Citizenship*, eds. Eugene Borgida, Christopher M. Federico, and John L. Sulliva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상기한 국가정체성에 대한 정의와 심리적 구성 요소도 내용과 과정을 함의하는 정체성 개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61) Sonia Roccas and Andrey Elster, “Group Identitie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ed. L. R. Tropp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참조.

62) Leonie Huddy, “From Social to Political Identity: A Critical Examin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Political Psychology*, vol. 22, no. 1 (2001), pp. 56~127.

63) Deborah J. Schildkraut, “Boundaries of American Identity: Evolving Understandings of “U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7, no. 1 (2014), p. 443.

64) Thomas Blank and Peter Schmidt, “National Identity in a United Germany: Nationalism or Patriotism? An Empirical Test with Representative Data,” *Political Psychology*, vol. 24, no. 2 (2003), pp. 289~312; Qiong Li and Marilynn B. Brewer, “What Does It Mean to Be an American? Patriotism,

한 개인 수준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을 소속감과 자기 개념을 중심으로 조작화하여 애착심 중심의 애국심과 경험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⁶⁵⁾ 일반적으로 국가정체성과 애국심을 이론적으로는 구분하더라도 국가정체성을 독립적으로 조작화하기보다는 애국심으로 대체해 측정해 왔다.⁶⁶⁾

애국심이 개인 자긍심과 관련하여 국가정체성의 긍정적 측면으로 상정되어 온 반면에 내셔널리즘은 상기한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국가정체성의 부정적인 측면 또는 애국심의 부정적 극단 형태인 ‘국수주의(chauvinism)’나 ‘호전적 애국주의(jingoism)’ 등과 같은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코스터만과 페시바흐(Kosterman and Feshbach 1989)는 내셔널리즘을 자기 나라의 우월함에 대한 자각과 이에 근거한 압도적 지위에 대한 믿음으로 애국심을 애착심(feelings of attachment)으로 구분했고,⁶⁷⁾ 드 피기리도와 엘킨스

Nationalism, and American Identity after 9/11,” pp. 727~739; Jack Citrin and David O. Sears, *American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pp. 58~60; 한편, 내이던선(Nathanson 1993)은 자기 나라에 대한 ‘개인적 소속감(a sense of personal identification)’을 특별한 애정(special affection), 웰빙에 대한 특별한 관심,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과 함께 애국심의 정의로 제시한다. Stephen Nathanson, *Patriotism, Morality, and Peace* (Lanham: Rowman & Littlefield, 1993) 참조.

65) Leonie Huddy and Nadia Khatib,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pp. 63~77.

66) Rick Kosterman and Seymour Feshbach, “Toward a Measure of Patriotic and Nationalistic Attitudes”; Daniel Bar-Tal and Ervin Staub, *Patriotism i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Nations*; Amélie Mummendey, Andreas Klink, and Rupert Brown, “Nationalism and Patriotism: National Identification and out-Group Rejec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0, no. 2 (2001), pp. 72~159; Thomas Blank and Peter Schmidt, “National Identity in a United Germany: Nationalism or Patriotism? An Empirical Test with Representative Data”; Rui J. P. De Figueiredo, Jr and Zachary Elkins,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1 (2003) 참조, 이에 비하여 국가정체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국민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는 규범적 내용에 대한 신념에 초점을 맞춰왔다. 윤광일, “한국인 국가정체성의 정치심리학,” pp. 5~41.

(De Figueiredo and Elkins 2003)는 전자를 다른 나라와의 비교와 경쟁을 전제하는 자기 나라의 우월함과 지배에 대한 믿음으로, 후자를 비경쟁적이며 자기참조(self-reference)적인 자기 나라의 사회 체제와 제도, 가치 또는 건국이념 등에 대한 애착심으로 대비시켰다.⁶⁸⁾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애국심과 내셔널리즘의 대비는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⁶⁹⁾ 34개국 설문조사 비교연구에서도⁷⁰⁾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애국심과 내셔널리즘의 이와 같은 대비가 학계 일반에서 합의된 구분은 아니다. 이는 특히 정치사상과 역사학, 사회학 등에서 두드러진다. 예컨대, 내셔널리즘을 애국심과 명확한 구분 없이 국민 국가 건설 과정에서 정치적 단위와 네이션 집단을 일치시키려는 엘리트의 대중 동원 이데올로기로 설명하거나,⁷¹⁾ 상기한 국가정체성 요소 중 규범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 네이션 또는 국가정체성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기도 한다.⁷²⁾ 또한, 인종, 시민 또는 문화 등 규범적

67) Rick Kosterman and Seymour Feshbach, "Toward a Measure of Patriotic and Nationalistic Attitudes," pp. 257~274.

68) Rui J. P. De Figueiredo, Jr. and Zachary Elkins,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pp. 171~188.

69) Thomas Blank, "Determinants of National Identity in East and West Germany: An Empirical Comparison of Theories on the Significance of Authoritarianism, Anomie, and General Self-Esteem," *Political Psychology*, vol. 24, no. 2 (2003), pp. 88~259; Thomas Blank and Peter Schmidt, "National Identity in a United Germany: Nationalism or Patriotism? An Empirical Test with Representative Data," pp. 289~311.

70) Eldad Davidov, "Measurement Equivalence of Nationalism and Constructive Patriotism in the Issp: 34 Countri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p. 88~103.

71)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참조.

72) Robert M. Kunovich,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4, no. 4 (2009), pp. 573~593; Tim Reesens and Matthew Wright, "Nationalism and the Cohesive Society: A

내용 요소에 기반하여 국가 내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내셔널리즘을 옹호하여 애국심과의 기능상 구분이 모호한 접근도 있으며,⁷³⁾ 애국심과 내셔널리즘의 대비를 인지하면서도 두 개념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분석상 구분 이점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⁷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문조사에 바탕을 둔 경험적 연구에서는 애국심과 내셔널리즘 그리고 국가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구분과 각 개념에 대한 독립적인 조작화에 천착하기보다는 애국심의 특정 유형을 세분화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왔다.⁷⁵⁾ 원래 개인적 수준

Multilevel Analysis of the Interplay among Diversity, National Identity, and Social Capital across 27 European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6, no. 2 (2013), pp. 81~153.

73) David Miller, *On Nationality* (New York: Clarendon Press, 1995) 참조; Nenad Miscevic, “Nationalism,”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Edward N. Zalta,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win2014/entries/nationalism/>> (검색일: 2018.7.1.).

74) Rogers Brubaker, “In the Name of the Nation: Reflections on Nationalism and Patriotism,” *Citizenship Studies*, vol. 8, no. 2 (2004), pp. 27~115; Bart Bonikowski, “Nationalism in Settled Tim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42, no. 1 (2016), pp. 49~427.

75) Ervin Staub, “Blind Versus Constructive Patriotism: Moving from Embeddedness in the group to Critical loyalty and Action,” in *Patriotism i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Nations*, eds. D. Bar-Tal and E. Staub (Chicago: Nelson-Hall, 1997), pp. 28~213; Mikael Hjerm,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Acta Sociologica*, vol. 41, no. 4 (1998), pp. 47~335; Robert T. Schatz, Ervin Staub, and Howard Lavine, “On the Varieties of National Attachment: Blind Versus Constructive Patriotism,” *Political Psychology*, vol. 20, no. 1 (1999), pp. 74~151; Rui J. P. De Figueiredo, Jr. and Zachary Elkins,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pp. 171~188; Leonie Huddy and Nadia Khatib,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pp. 63~77; Eldad Davidov, “Measurement Equivalence of Nationalism and Constructive Patriotism in the Issp: 34 Countri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p. 64~82; Christopher S. Parker, “Symbolic Versus Blind Patriotism: Distinction without Differen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3, no. 1 (2010), pp. 97~114; Sonia Roccas and Andrey Elster, “Group Identities,” pp. 106~122; Huddy Leonie, “Unifying National Identity Research: Interdisciplinary

의 애국심 구분은 권위주의 성격 유형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이에 의하면, ‘참 애국심(genuine patriotism)’은 “나라에 대한 사랑과 비판적 이해에 기초한 나라의 가치에 대한 애착심”으로, ‘유사 애국심(pseudo-patriotism)’은 “특정 민족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심, 지배적 집단 양식에 대한 무비판적 동조, 다른 나라를 외집단으로 배척”하는 것으로 정의된다.⁷⁶⁾ 후속 연구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에 내포적 의미를 부가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맹목적 또는 무비판적 애국심은 유사 애국심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는 자기 나라에 대한 “완고하고 융통성 없는 애착심”으로 “무비판적 긍정적 평가, 확고한 충성심, 비판에 대한 무관용” 등의 특성을 내포한다. 이에 대비되는 건설적 애국심은 참 애국심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 나라의 궁극적 복지와 인류의 보편적 이상과 가치를 향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감행할 수 있는 ‘비판적 충성심(critical loyalty)’을 내포한다.⁷⁷⁾ 다시 말해서 유사 또는 맹목적 애국심은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측면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을, 참 또는 건설적 애국심은 긍정적 측면

Perspectives,” in *Dynamics of National Identity: Media and Societal Factors of What We Are*, ed. J. Grimm, L. Huddy, P. Schmidt, and J. Seethaler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6), pp. 9~21.

76) Daniel J. Levinson, “The Study of Ethnocentric Ideology,” in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eds. T. W. Adorno, E. Frenkel-Brunswik, D. J. Levinson, and N. R. Sanford (New York: Harper, 1950), p. 107.

77) Ervin Staub, “Blind Versus Constructive Patriotism: Moving from Embeddedness in the group to Critical loyalty and Action,” pp. 497~512; Robert T. Schatz, Ervin Staub, and Howard Lavine, “On the Varieties of National Attachment: Blind Versus Constructive Patriotism,” pp. 151~174; Eldad Davidov, “Measurement Equivalence of Nationalism and Constructive Patriotism in the Issp: 34 Countri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p. 64~82; Eldad Davidov, “Nationalism and Constructive Patriotism: A Longitudinal Test of Comparability in 22 Countries with the Issp,”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23, no. 1 (2010), pp. 88~103.

으로서의 애국심을 각각 정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징적 애국심은 맹목적 애국심의 우파 또는 보수 정치이데올로기 편향과 건설적 애국심의 좌파 또는 진보적 정치이데올로기 편향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국가와 이의 핵심 가치에 대한 추상적, 정서적 애착심”으로 정의된다.⁷⁸⁾ 기존 애국심 개념의 당파와 정치이데올로기 편향을 회피하기 위해 제시된 또 다른 예로 특정 네이션 집단이 아닌 국민국가에 대한 개인 감정을 뜻하는 국가자부심이 있다.⁷⁹⁾ 상징적 애국심과 국가자부심은 모두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고안된 것이며 국가와 이의 핵심가치가 대표하는 상징에 대한 자부심을 내포하기 때문에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두 개념 모두 개인 자긍심을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자부심과 연계하는 사회정체성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전자가 국기(national flag)와 국가(national anthem)에 대한 자부심에 한정되어 조작화되는 데 비해, 후자는 국가의 역사, 정치제도, 업적, 국제적 위상 등 포괄적 분야에 대한 자부심으로 측정되어 상징적 애국심과 경험적으로 구분된다.⁸⁰⁾

애국심 개념에 대한 논의를 요약해 보면, 우선 애국심은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되며 이 글에서 나라는 실재 또는 상상의 네이션 집단에 바탕을 둔 근대 이후 출현한 국민국가로 한정한다. 관련 개념인 국가정체성과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사회정체성 이론을 원용하여 애국심과 내셔널리즘을 국가정체성의 한

78) Christopher S. Parker, “Symbolic Versus Blind Patriotism: Distinction without Difference?” pp. 97~114.

79) Mikael Hjerm,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pp. 47~335.

80) Leonie Huddy and Nadia Khatib,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pp. 63~77; Christopher S. Parker, “Symbolic Versus Blind Patriotism: Distinction without Difference?” pp. 97~114.

요소인 정서적 애착심의 각각 긍정적, 부정적 발현 형태로 구분한다. 또한 애국심의 특정 형태로서 내셔널리즘과 유사한 맹목적 또는 무비판적 애국심, 자기 나라와 인류의 궁극적 이상과 가치에 기초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지지하는 건설적 애국심, 그리고 양자의 당파, 정치이데올로기적 편향을 회피하고자 고안된 상징적 애국심과 국가자부심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편, 애국심과 관련 개념은 대체로 정서적 애착심, 충성심, 자부심 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양한 형태의 애국심은 대북 및 통일 태도에 대해 어떠한 이론적 함의를 갖는가?

(2) 이론적 논의

사회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개인이 애국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무엇보다 국가정체성 획득을 통해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기 개념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소속 동기와 함께 타인과 차별화하려는 일견 모순된 동기를 함께 갖고 있고 이는 개인의 집단정체성 일반과 국가정체성 획득의 기반이 된다.⁸¹⁾ 개인은 또한 긍정적 자기 개념 곧, 자긍심을 유지 또는 고양하려는 기본 동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개념의 일부가 된 한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사실, 곧 '자기 나라' 역시 자긍심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긍심과 애국심의 한 유형으로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은 동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된다. 그리고 개인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를 평가하려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자기 나

81) Marilynn B. Brewer,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17, no. 5 (1991), pp. 82~475.

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내려고 할 것이다. 한편, 개인의 사회인지는 기본적으로 사회범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타인의 외집단 간의 구분과 ‘사회적 비교’에 의한 내집단 편애는 일상적인 것으로, 내집단으로서 자기 나라와 외집단으로서 다른 나라와의 구분과 비교, 그리고 이를 통한 자기 나라 사랑 곧 애국심 획득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애국심은 자기고양, 소속 및 차별화, 자기평가 등의 동기적 기반과 사회범주적 사회인지에 의해 별다른 심적 노력 없이도 획득하게 되는 정치태도이다.⁸²⁾ 유년기부터 형성된 애국심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매스미디어 등의 정치사회화 기관을 통해 강화되며, 정치인과 정당의 동원, 그리고 나라의 위기 상황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강화되기도 한다.⁸³⁾

애국심을 국가정체성의 한 요소로서 긍정적 자기 개념과 국가자부심이 결부된 정서적 애착심으로 접근한다면 이를 내집단 편애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내집단 편애 또는 자부심과 외집단 폄하 또는 편견이 독립적인지 여부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내집단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더라도 내집단 편애의 정도가 강한 경우나 현실적 갈등으로 외집단에 대한 적대심이 높은 경우 두 심리적 정향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82) 사회정체성 이론과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회범주화 이론에 대해서는 Henri Tajfel and John C. Turner,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Rupert Brown, "Social Identity Theory: Past Achievements, Current Problems and Future Challeng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0, no. 6 (2000), pp. 745~778; Marilyn B. Brewer, "The Importance of Being We: Human Nature and Intergroup Relations"; Leonie Huddy, "Unifying National Identity Researc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참조.

83) Jean Piaget and Anne Marie Weil, "The Development in Children of the Idea of the Homeland and of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vol. 3 (1951), pp. 561~578.

있다.⁸⁴⁾

이와 같은 논의는 국가정체성의 긍정적, 부정적 발현으로 각각 상정된 애국심과 내셔널리즘에 대한 일반적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도 매우 적절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다른 나라에 대한 우월감이나 편견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태도가 다른 태도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애국심과 외집단에 대한 관용이 공존 가능한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⁸⁵⁾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북한주민도 자기 나라 국민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나라의 바탕이 같은 민족이라는 역사적 근거로 내집단으로 본다면, 북한주민 또한 애국심의 대상이 되거나 적어도 폄하 또는 편견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다른 이주자 집단에 비하여 국민으로 생각하는 데 거부감이 작다는 경험적 연구는 이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⁸⁶⁾

84) Marilynn B. Brewer,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and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5, no. 3 (1999), pp. 429~444; Marilynn B. Brewer, "Intergroup Discrimination: Ingroup Love or Outgroup Hate?"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Prejudice*, eds. Chris G. Sibley and Fiona Kate Barl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85) 이에 대한 기존 연구로 Amélie Mummendey, Andreas Klink, and Rupert Brown, "Nationalism and Patriotism: National Identification and out-Group Rejection"; Thomas Blank and Peter Schmidt, "National Identity in a United Germany: Nationalism or Patriotism? An Empirical Test with Representative Data"; Rui J. P. De Figueiredo, Jr and Zachary Elkins,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Jacques-Philippe Leyens *et al.*, "Emotional Prejudice, Essentialism, and Nationalism the 2002 Tajfel Lectu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3, no. 6 (2003), pp. 703~717; Ulrich Wagner *et al.*, "A Longitudinal Test of the Relation between German Nationalism, Patriotism, and Outgroup Derog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8, no. 3 (2012), pp. 319~332 참조.

86) 윤광일, "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 25권 2호 (2013), pp. 29~63; 윤광일, "한국인 국가정체성의 정치심리학," pp. 5~41.

그러나 오랜 적대의 역사를 상기해 보면, 애국심이 높을수록 또는 내셔널리즘이 높을수록 북한을 적대적 외집단으로, 따라서 편견대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한편, 애국심의 태도대상으로서 한국이 대표하는 상징과 원칙 및 가치 등이 두드러진 경우, 이와 대립되는 북한 체제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대한민국의 원칙 및 가치가 자유와 관용을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험적 분석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제기된 추론적 가설을 탐색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우선 애국심이 북한을 지원, 협력, 경계, 적대대상으로 보는 데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애국심이 북한을 경계나 적대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원 또는 협력대상으로 보는 데 도움을 준다면, 이는 현재 한국인이 북한을 외집단보다는 내집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종속변수 곧, 태도 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하여 애국심을 건설적 애국심과 맹목적 애국심으로 구분하여 통제된 후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맹목적 애국심은 애국심의 부정적 극단 또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내셔널리즘과 유사한 개념으로,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대상보다는 경계나 적대대상으로 생각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한민국의 원칙 및 가치에 기반한 건설적 애국심은 북한을 반드시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게 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

경험적 분석에서는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북 및 통일 태도의 분포를 기술하고 애국심과 추상적 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 후, 애국심이 통일정책 관련 선호에 어떠한 함의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예를 들

어, 애국심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지, 통일에 대한 선호와 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차원에서 통일세에 대한 선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상과 같은 애국심의 함의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 기본적으로 탐색적 연구인 까닭은 기존 연구의 이론적 논증과 실증적 분석이 어느 한 방향으로 추론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 접근에 의존한 선행연구가 압도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한국을 사례로 한 연구가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다. 경험적 분석

(1) 대북 및 통일 태도 현황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일상화, 보편화된 갈등사회로 규정할 수 있다.⁸⁷⁾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거시 지표로 측정된 갈등 수준도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최상위권일 뿐만 아니라, 대표성 있는 표본을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국 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⁸⁸⁾

한국 사회에서는 계층, 세대, 이념, 영호남 지역, 대북 및 통일정책 관련 선호(남남) 등이 주요 갈등요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이번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

87) 조대엽,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 새로운 사회갈등과 공공성 재구성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파주: 나남출판, 2014) 참조.

88) 거시 지표 연구는 박준, “한국 사회 갈등 현 주소,”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2013.8.); 정영호·고숙자,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참조. 설문조사 연구는 윤인진, “한국인의 갈등의식 현황과 변화: 제1~3차 한국인의 갈등의식조사 결과 분석,” 『한국사회』, 제16권 1호 (2015), pp. 3~36; 윤광일, “균열구조와 19대 대선: 완전한 균열로서 지역균열,” 『한국정치연구』, 제27권 1호 (2018), pp. 241~279 참조.

등이 다소 심각하거나(73.15%) 매우 심각한(10.38%)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구체적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도 <표 III-7>과 같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주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 갈등요인 | 전혀 심각하지 않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약간 심각하다 | 매우 심각하다 | Total |
|-------|------------|--------------|--------------|------------|---------------|
| 지역 | 36 (3.6) | 284 (28.3) | 593 (59.1) | 89 (8.9) | 1,002 (100.0) |
| 계층 | 7 (0.7) | 154 (15.4) | 564 (56.3) | 277 (27.6) | 1,002 (100.0) |
| 이념 | 17 (1.7) | 224 (22.4) | 516 (51.5) | 245 (24.5) | 1,002 (100.0) |
| 세대 | 11 (1.1) | 254 (25.4) | 608 (60.7) | 129 (12.9) | 1,002 (100.0) |
| 남남 | 24 (2.4) | 243 (24.3) | 577 (57.6) | 158 (15.8) | 1,002 (100.0) |
| Total | 95 (1.9) | 1,159 (23.1) | 2,858 (57.1) | 898 (17.9) | 5,010 (100.0) |

응답자들은 또한 최근 일련의 조사와 큰 차이 없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약간 또는 매우 심각한 사회갈등을 계층(83.9%), 이념(76.0%), 세대(73.6%), 남남(73.4%), 지역(68.1%) 순으로 꼽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사회구조적 구분, 갈등집단 내 정체성과 규범, 그리고 정당에 의한 조직적 동원으로 한국 정치의 지배균열로 제시되어 온 지역균열의 심각함에 대한 인식이 누그러지고 있는 반면에, 내용적 측면에서 ‘중첩갈등’의 특성이 강한 계층, 이념, 세대, 남남 갈등의 심각함이 두드러진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요인이든 이들 요인에 의해 구분되는 갈등집단의 구성원은 동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이와 같은 갈등구조는 한 개인이 다양한 갈등집단에 속하는 ‘교차갈등’ 구조와 달리 민주주의와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갖는다.⁸⁹⁾ 다만, 주관적인 구분이든 객관적

89) 윤광일, 위의 글, pp. 241~280.

인 구분이든 하위 계층일수록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⁹⁰⁾ 현재 중첩갈등의 구성요인은 이념, 세대, 남남 등으로 좁혀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⁹¹⁾

이념, 세대, 남남갈등이 중첩되어 있다는 가설은 젊을수록 자신을 이념적·진보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과 통일정책에 대해 온건한 선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대립이 두드러져 온 서구와 달리 한국의 이념갈등은 대북 및 통일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⁹²⁾ 진보성향이 강한 젊은 층이 이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90) 강원택, “사회계층과 정치적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서울: 21세기북스, 2014), pp. 61~106.

91) 하위계층의 보수성은 이번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표 III-8〉 참조). 이에 대해서는 립셋(Lipset)의 ‘노동계급 권위주의(working class authoritarianism)’와 이를 체제정당화(system justification) 이론으로 수용한 조스트(Jost)의 ‘노동계급 보수주의(working class conservatism)’로 이해할 수 있다. Seymour Martin Lipset,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1960), pp. 97~130; John T. Jost, “Working Class Conservatism: A System Justification Perspectiv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vol. 18 (2017), pp. 73~78.

92) 강정인, “보수주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모호한 정상화,” 강정인 외,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9) 참조; 강원택,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룩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3호 (2011), pp. 99~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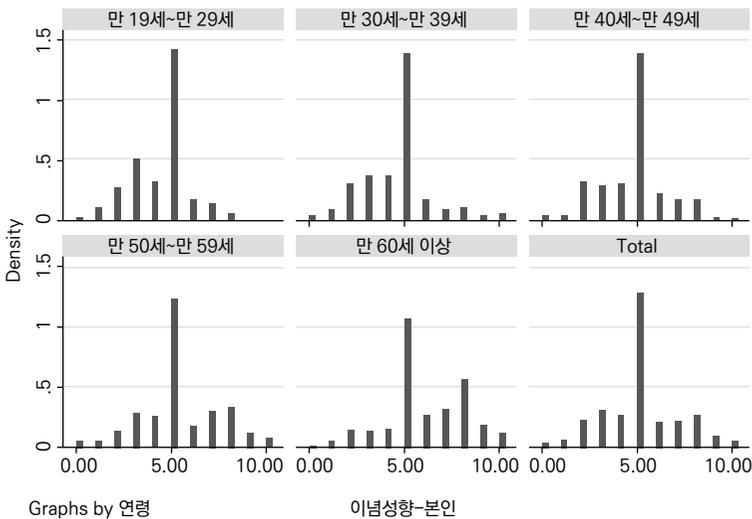
〈표 III-8〉 사회경제변수와 정치이데올로기, 탈물질주의, 기본가치 평균비교

| | | N | 진보- 보수 | 탈물질 | 개방 | 보수 | 자기초월 | 자기고양 |
|-------|-----------------|-------|------------|------------|------------|------------|------------|------------|
| | | | M(SD) | M(SD) | M(SD) | M(SD) | M(SD) | M(SD) |
| 성별 | 남성 | 498 | 4.97(2.05) | 2.20(1.32) | 3.44(0.99) | 3.92(0.83) | 3.74(0.91) | 3.42(0.77) |
| | 여성 | 504 | 5.11(1.87) | 2.05(1.21) | 3.12(0.93) | 3.98(0.86) | 3.74(0.87) | 3.32(0.79) |
| 연령 | 만 19세~ 만 29세 | 175 | 4.32(1.49) | 2.37(1.41) | 3.57(0.93) | 3.80(0.73) | 3.69(0.89) | 3.55(0.81) |
| | 만 30세~ 만 39세 | 171 | 4.51(1.78) | 2.38(1.28) | 3.40(0.90) | 3.79(0.76) | 3.65(0.86) | 3.47(0.79) |
| | 만 40세~ 만 49세 | 205 | 4.68(1.76) | 2.13(1.27) | 3.46(0.91) | 3.90(0.82) | 3.77(0.84) | 3.48(0.74) |
| | 만 50세~ 만 59세 | 198 | 5.33(2.04) | 1.99(1.27) | 3.14(0.99) | 4.08(0.90) | 3.86(0.89) | 3.31(0.79) |
| | 만 60세 이상 | 253 | 5.96(2.08) | 1.90(1.09) | 2.94(0.99) | 4.10(0.92) | 3.73(0.94) | 3.15(0.74) |
| | 학력 | 중졸 이하 | 139 | 5.93(2.09) | 1.74(1.13) | 2.63(0.95) | 4.16(0.96) | 3.65(0.89) |
| 고졸 이하 | | 430 | 5.05(1.92) | 2.08(1.23) | 3.28(0.95) | 3.97(0.85) | 3.73(0.86) | 3.38(0.77) |
| 대졸 이상 | | 433 | 4.74(1.88) | 2.30(1.31) | 3.48(0.93) | 3.86(0.79) | 3.78(0.91) | 3.49(0.77) |
| 가구소득 | 100만원 | 65 | 6.00(1.98) | 1.61(1.05) | 2.83(1.05) | 4.18(0.87) | 3.85(1.09) | 3.11(0.75) |
| | 101만원~ 200만원 | 145 | 5.84(2.12) | 1.88(1.24) | 3.02(0.91) | 3.98(0.89) | 3.71(0.89) | 3.11(0.69) |
| | 201만원~ 300만원 | 212 | 5.00(1.93) | 2.21(1.29) | 3.16(1.00) | 3.92(0.89) | 3.71(0.85) | 3.27(0.80) |
| | 301만원~ 500만원 | 456 | 4.81(1.88) | 2.23(1.23) | 3.41(0.95) | 3.93(0.82) | 3.75(0.88) | 3.50(0.76) |
| | 501만원 | 123 | 4.53(1.70) | 2.15(1.39) | 3.52(0.92) | 3.93(0.81) | 3.76(0.89) | 3.56(0.78) |
| | Total | 1,002 | 5.04(1.96) | 2.13(1.27) | 3.27(0.98) | 3.95(0.85) | 3.74(0.89) | 3.38(0.78) |

〈표 III-8〉은 정치이념 자기평가(0: 매우 진보~10: 매우 보수)와 정치이념의 기저에 있는 것으로 상정되어 온 개인의 가치를 탈물질주의와 슈워츠(Schwartz)의 기본가치(개방, 보수, 자기초월, 자기고양)로 조작화하여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등의 사회경제변수로 구분하여 그 평균을 담고 있다. 우선, 예상대로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을 진보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중도(5점)를 기준으로 볼 때 49세 이하와 50세 이상 간의 진보-보수 구분이 뚜렷한 가운데 19세~29세 집단의 진보적 평가(M=4.3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 자기평가의 분포를 보아도 이와 같은 세대 간 구분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중도에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49세 이하 집단에서 5점 미만 곧, 진보성향으로 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19세~29세 집단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특히 눈에 띈다(<그림 III-5>).

<그림 III-5> 세대별 정치이념 평가 분포



서구 연구에서 기본가치 중 진보성향을 뒷받침하는 가치로 상정되어온 개방, 보수 그리고 탈물질주의 또한 정치이념 자기평가와 마찬가지로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개방 가치와 탈물질주의 가치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에 보수 가치를 삶의 가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표 III-8〉 참고). 요컨대, 젊은 세대일수록 자신을 진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 또한 진보적 성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을 규정해온 대북 및 통일정책 선호에 대한 세대 간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표 III-9〉는 응답자가 북한을 얼마나 지원, 협력, 경계, 또는 적대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0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10점(“매우 동의한다”)까지 11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를 연령집단별 평균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예상과 다르게 연령대가 높을수록 오히려 북한을 지원과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 가운데, 전 연령대에 걸쳐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만 19세~만 29세(M=5.66) 연령집단이 만 60세 이상(M=5.57) 집단보다 더 북한을 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진보적 정치이념과 가치를 지닌 만 19세~만 29세 집단이 북한을 지원과 협력대상으로 보는 데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경계와 적대대상으로 보는 데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드러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한국의 이념지형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 과정의 주체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선호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II-9〉 연령집단별 북한 평가

| 연령 | N | 지원 M(SD) | 협력 M(SD) | 경계 M(SD) | 적대 M(SD) |
|-------------|-------|-------------|-------------|-------------|-------------|
| 만 19세~만 29세 | 175 | 4.81(2.43) | 5.24(2.36) | 6.26(2.21) | 5.66(2.28) |
| 만 30세~만 39세 | 171 | 4.94(2.27) | 5.40(2.21) | 5.92(2.17) | 5.26(2.22) |
| 만 40세~만 49세 | 205 | 5.24(2.51) | 5.80(2.32) | 5.81(2.16) | 5.05(2.44) |
| 만 50세~만 59세 | 198 | 5.38(2.38) | 5.80(2.25) | 5.97(2.16) | 5.05(2.29) |
| 만 60세 이상 | 253 | 5.34(2.17) | 6.02(2.03) | 5.93(2.12) | 5.57(2.23) |
| Total | 1,002 | 5.17(2.36) | 5.69(2.24) | 5.97(2.16) | 5.32(2.30) |

세대 간 대북 및 통일정책 선호 차이에 대한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는 북한에 대한 관심, 통일 필요성 및 시기 등과 같은 북한과 통일 관련 전반적 태도에서뿐만 아니라 통일세 찬성과 같은 구체적 정책 선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우선,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만 39세 이하 집단의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북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19세~29세 집단의 경우 17.7%, 30세~39세 집단의 경우 14.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 비해 다소 또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세~29세 집단의 경우 28%, 30세~39세 집단의 경우 32.2%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만 40세 이상 집단에서 북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비율은 한 자리 숫자로 낮은 반면에 다소 또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두 과반수로 높게 나타났다(〈표 III-10〉 참고).

〈표 Ⅲ-10〉 북한에 대한 관심

(단위: 명 (%))

| | 만 19세~ 만 29세 | 만 30세~ 만 39세 | 만 40세~ 만 49세 | 만 50세~ 만 59세 | 만 60세 이상 | Total |
|-----------|-----------------|-----------------|-----------------|-----------------|----------------|------------------|
| 전혀 관심이 없다 | 31 (17.1) | 25 (14.6) | 13 (6.4) | 8 (4.0) | 11 (4.4) | 88 (8.8) |
| 별로 관심이 없다 | 95 (54.3) | 91 (53.2) | 85 (41.7) | 71 (35.9) | 94 (37.2) | 436 (43.6) |
| 다소 관심이 있다 | 45 (25.7) | 51 (29.9) | 91 (44.6) | 100 (50.5) | 112 (44.3) | 399 (39.9) |
| 매우 관심이 있다 | 4 (2.3) | 4 (2.3) | 15 (7.4) | 19 (9.6) | 36 (14.2) | 78 (7.8) |
| Total | 175 (100.0) | 171 (100.0) | 204 (100.0) | 198 (100.0) | 253 (100.0) | 1,001 (100.0) |

젊은 세대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세대 간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집단별 남북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 분포를 담고 있는 〈표 Ⅲ-11〉에 의하면, 다시 한 번 39세 이하 집단과 40세 이상 집단 간의 인식 차가 드러난다. 예컨대 남북통일이 전혀 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19세~29세 집단의 경우 44.6%, 30세~39세 집단의 경우 40.4%에 달하는 데 반해, 60세 이상 집단의 경우 19.0%, 그리고 40세~49세와 50세~59세 집단의 경우 각각 26.8%, 22.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통일이 약간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두 젊은 층에서는 과반수를 넘기긴 했으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이들 연령집단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40세 이상 집단에서는 통일 필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모두 70%가 넘고 특히 적극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모두 최소한 33%를 넘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세대 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표 III-11〉 남북한 통일 필요성

(단위: 명 (%))

| | 만 19세~ 만 29세 | 만 30세~ 만 39세 | 만 40세~ 만 49세 | 만 50세~ 만 59세 | 만 60세 이상 | Total |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2 (6.9) | 9 (5.3) | 7 (3.4) | 7 (3.5) | 6 (2.4) | 41 (4.1) |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66 (37.7) | 60 (35.1) | 48 (23.4) | 37 (18.7) | 42 (16.7) | 253 (25.3) |
| 약간 필요하다 | 78 (44.6) | 82 (48.0) | 81 (39.5) | 87 (43.9) | 106 (41.9) | 434 (43.3) |
| 매우 필요하다 | 19 (10.9) | 20 (11.7) | 69 (33.7) | 67 (33.8) | 99 (39.1) | 274 (27.4) |
| Total | 175 (100.0) | 171 (100.0) | 205 (100.0) | 198 (100.0) | 253 (100.0) | 1,002 (100.0) |

통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세대 간 차이는 통일문제를 응답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생각하게 하는 질문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통일이 “나의 진정한 소망”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담고 있는 〈표 III-12〉에 의하면, 이에 대해 전혀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19세~29세 집단에서는 53.7%, 30세~39세 집단에서는 46.5%로 부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다소 또는 매우 동의하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각각 18.3%, 22.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40세 이상 집단 모두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60세 이상 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15.9%p에 달할 정도로 많이 났다. 다시 말해서, 통일 필요성을 자신과 결부지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부정적 응답 비율이 긍정적 응답 비율보다 높았으며 특히 19세~29세 집단의 부정적 응답 비율이 과반수일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통일 과정의 주축이 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체적 통일편익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표 III-12〉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에 대한 동의

(단위: 명 (%))

| | 만 19세~ 만 29세 | 만 30세~ 만 39세 | 만 40세~ 만 49세 | 만 50세~ 만 59세 | 만 60세 이상 | Total |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32 (18.3) | 28 (16.5) | 22 (10.7) | 13 (6.6) | 18 (7.1) | 113 (11.3) |
| 별로 동의하지 않음 | 62 (35.4) | 51 (30.0) | 49 (23.9) | 50 (25.4) | 60 (23.8) | 272 (27.2) |
| 보통임 | 49 (28.0) | 53 (31.2) | 59 (28.8) | 57 (28.9) | 56 (22.2) | 274 (27.4) |
| 다소 동의함 | 26 (14.9) | 35 (20.6) | 59 (28.8) | 59 (30.0) | 97 (38.5) | 276 (27.6) |
| 매우 동의함 | 6 (3.4) | 3 (1.8) | 16 (7.8) | 18 (9.1) | 21 (8.3) | 64 (6.4) |
| Total | 175 (100.0) | 170 (100.0) | 205 (100.0) | 197 (100.0) | 252 (100.0) | 999 (100.0) |

한편, 통일 필요성에 대한 추상적 인식과 구체적 소망에서 나타난 세대 간 차이는 희망하는 통일 시기에 대한 세대 간 차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표 III-13〉 참고). 예컨대,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세 이상 집단에서 18.6%로 가장 높았고 40세~49세 12.2%, 50세~59세 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19세~29세 집단(7.4%)과 30세~39세 집단(6.4%)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39세 이하 연령집단에서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 비율은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19세~29세 집단(32.6%)과 30세~39세 집단(28.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 통일 시기

(단위: 명 (%))

| | 만 19세~ 만 29세 | 만 30세~ 만 39세 | 만 40세~ 만 49세 | 만 50세~ 만 59세 | 만 60세 이상 | Total |
|---------------------|-----------------|-----------------|-----------------|-----------------|----------------|------------------|
|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 57 (32.6) | 48 (28.1) | 37 (18.1) | 31 (15.7) | 38 (15.0) | 211 (21.1) |
| 속도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 105 (60.0) | 112 (65.5) | 143 (69.8) | 145 (73.2) | 168 (66.4) | 673 (67.2) |
|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 | 13 (7.4) | 11 (6.4) | 25 (12.2) | 22 (11.1) | 47 (18.6) | 118 (11.8) |
| Total | 175 (100.0) | 171 (100.0) | 205 (100.0) | 198 (100.0) | 253 (100.0) | 1,002 (100.0) |

이상과 같이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적 선호에서 젊은 세대와 장년과 노년 세대 간의 차이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대 간 차이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이라는 구체적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표 III-14〉 참고). 예를 들어, 통일세에 대해 전혀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가 19세~29세 집단에서는 57.7%, 30세~39세 집단에서는 51.2%로 부정적 비율이 과반수로 높게 나타났고, 다소 또는 매우 동의하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각각 15.4%, 20.6%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40세 이상 집단에서는 아마도 세금이라는 정책 선호의 특성상, 비록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 부정적 응답도 40세~49세 39.0%, 50세~59세 41.4%, 60세 이상 38.7%로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 특히 60세 이상 집단은 통일세에 대한 동의 비율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40세 이상 장년과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에 비해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본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소망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편익 교육과 홍보 강화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II-14〉 “나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에 대한 동의

(단위: 명 (%))

| | 만 19세~ 만 29세 | 만 30세~ 만 39세 | 만 40세~ 만 49세 | 만 50세~ 만 59세 | 만 60세 이상 | Total |
|------------|-----------------|-----------------|-----------------|-----------------|----------------|------------------|
| 전혀 동의하지 않음 | 37 (21.1) | 30 (17.7) | 38 (18.5) | 26 (13.1) | 32 (12.7) | 163 (16.3) |
| 별로 동의하지 않음 | 64 (36.6) | 57 (33.5) | 42 (20.5) | 56 (28.3) | 66 (26.1) | 285 (28.5) |
| 보통임 | 47 (26.9) | 48 (28.2) | 63 (30.7) | 56 (28.3) | 67 (26.5) | 281 (28.1) |
| 다소 동의함 | 26 (14.9) | 32 (18.8) | 53 (25.9) | 52 (26.3) | 82 (32.4) | 245 (24.5) |
| 매우 동의함 | 1 (0.6) | 3 (1.8) | 9 (4.4) | 8 (4.0) | 6 (2.4) | 27 (2.7) |
| Total | 175 (100.0) | 170 (100.0) | 205 (100.0) | 198 (100.0) | 253 (100.0) | 1,001 (100.0) |

(2) 한국인 애국심 현황

이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한국인 애국심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자. 상술한 개념적 논의에 의하면, 애국심에 대한 경험적 정의는 정당일체감과 정치이데올로기 편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작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보수정당과 정치이데올로기 지지와 연계되어 있고, 특히 맹목적 애국심은 그 연계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반해 건설적 애국심은 상대적으로 진보정당과 정치이데올로기 지지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⁹³⁾ 따

93) Robert T. Schatz, Ervin Staub and Howard Lavine, "On the Varieties of National Attachment: Blind Versus Constructive Patriotism," pp. 151~174; Leonie Huddy and Nadia Khatib,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pp. 63~77.

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애국심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단일 설문으로 조작화(‘국민으로서 자부심’)한 후, 민주주의 발전, 국제사회에서 위상, 경제성장, 사회보장, 과학기술의 발전, 스포츠, 예술과 문화, 군사력, 역사, 공정한 사회적 대우 등 10개의 세부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모두 4점 척도로 측정했다.⁹⁴⁾

〈표 III-15〉 한국인 애국심 분포

(단위: 명 (%))

| 항목 |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 다소 자랑스럽다 | 매우 자랑스럽다 | 계 |
|------------|-------------------|-------------------|---------------|---------------|------------------|
| 국민으로서 자부심 | 14 (1.4) | 188 (18.8) | 651 (65.0) | 148 (14.8) | 1,001 (100.0) |
| 민주주의 | 8 (0.8) | 165 (16.5) | 711 (71.0) | 118 (11.8) | 1,002 (100.0) |
| 국제사회 위상 | 16 (1.6) | 231 (23.1) | 620 (61.9) | 134 (13.4) | 1,001 (100.0) |
| 경제성장 | 22 (2.2) | 225 (22.5) | 587 (58.6) | 168 (16.8) | 1,002 (100.0) |
| 사회보장 | 29 (2.9) | 386 (38.6) | 519 (51.9) | 67 (6.7) | 1,001 (100.0) |
| 과학기술의 발전 | 10 (1.0) | 154 (15.4) | 636 (63.5) | 201 (20.1) | 1,001 (100.0) |
| 스포츠 | 4 (0.4) | 88 (8.8) | 570 (56.9) | 340 (33.9) | 1,002 (100.0) |
| 예술과 문화 | 7 (0.7) | 161 (16.1) | 606 (60.5) | 228 (22.8) | 1,002 (100.0) |
| 군사력 | 32 (3.2) | 485 (48.4) | 418 (41.7) | 67 (6.7) | 1,002 (100.0) |
| 역사 | 19 (1.9) | 286 (28.6) | 543 (54.3) | 153 (15.3) | 1,001 (100.0) |
| 공정한 사회적 대우 | 77 (7.7) | 511 (51.0) | 391 (39.0) | 23 (2.3) | 1,002 (100.0) |

94) 10개 세부 분야는 ISSP 국가정체성 모듈의 국가자부심 관련 문항을 번역한 것이다.

KINU 통일의식조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인들은 국민으로서 그리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표 III-15〉 참조). 예컨대, 단일 설문에서 응답자들의 79.8%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소 또는 매우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공정한 사회적 대우’와 ‘군사력’을 제외한 8개 분야에서 과반수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답했고, 특히 스포츠(90.8%), 과학기술의 발전(83.6%), 예술과 문화(83.2%) 분야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자료 분석에서 비판적 충성심에 기반한 건설적 애국심의 구성요소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세 분야 중,⁹⁵⁾ ‘민주주의 발전’(82.7%)은 긍정적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사회보장’(58.5%)은 과반수를 겨우 넘었고, ‘공정한 사회적 대우’(41.3%)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가장 낮았고(2.3%) 부정적 응답자도 더 많았다.

이어 한국인 애국심의 현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 연령, 학력,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변수에 따른 애국심과 이의 특정 형태로서 건설적, 맹목적, 상징적 애국심, 그리고 애국심 관련 개념으로 내셔널리즘과 국가정체성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표 III-16〉 참조). 우선 애국심은 상기한 바대로 단일 설문으로 측정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10개 세부 분야에서의 자부심 평균으로 구한 애국심 지수로 측정했다. 건설적 애국심은 ‘민주주의 발전’, ‘사회보장’, 그리고 ‘공정한 사회적 대우’ 분야에 대한 평균으로 조작화했고, 맹목적 애국심은 “애국자라면 한국이 잘못된 경우에도 한국을 지지해

95) Eldad Davidov, "Measurement Equivalence of Nationalism and Constructive Patriotism in the Issp: 34 Countri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p. 64~82; Eldad Davidov, "Nationalism and Constructive Patriotism: A Longitudinal Test of Comparability in 22 Countries with the Issp," pp. 88~103.

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4점 척도)로, 상징적 애국심은 “나는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는 진술에 동의 정도(5점 척도)로 조작화했다.⁹⁶⁾ 내셔널리즘은 “한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 나라”로 생각하는지(4점 척도)로 측정했다.

국가정체성은 애국심과 내셔널리즘은 물론 자기 개념과 집단 동일시, 국민 자격 기준에 규범적 신념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 개념이지만, 사회정체성 측정에 있어서 단일 정체성 문항이 복수 문항을 이용한 다차원적 측정 못지않게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⁹⁷⁾ 애국심의 특정 유형과 구분하여 자기 개념 중심으로 측정한 국가정체성이 여타 애국심 척도에 비해 정치이데올로기 편향이 거의 없어,⁹⁸⁾ 이 연구에서도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은 정체성(나는 누구인가?)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로 국가정체성을 조작화했다.

사회경제변수에 따른 애국심과 건설적, 맹목적, 상징적 애국심, 그리고 내셔널리즘과 국가정체성 평균 차이는 t-검정을 한 성별을 제외하고,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후 튜키 짝비교 사후검정(Tukey HSD pairwise post hoc test)을 이용하여 분석했다.⁹⁹⁾ 이에 의하면, 여성(M=2.48)이 남성(M=2.34)보다 높게 나타난 맹목

96) 10개 세부 분야의 신뢰성 계수(Cronbach's alpha)는 0.7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건설적 애국심의 세 구성 변수의 신뢰성 계수는 0.53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ISSP 34개국 비교설문조사 분석 결과(Davidov 2009)를 인용하여 지수화했다. Eldad Davidov, “Measurement Equivalence of Nationalism and Constructive Patriotism in the Issp: 34 Countri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p. 64~82.

97) Tom Postmes, Alexander S. Haslam and Lise Jans, “A Single-Item Measure of Social Identification: Reliability, Validity, and Util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2 (2013), pp. 597~617.

98) Leonie Huddy and Nadia Khatib,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pp. 63~77.

99) 튜키 짝비교 사후검정의 더 자세한 결과는 저자로부터 구할 수 있다.

적 애국심을 제외하고 성별에 따른 애국심과 이의 특정 형태 그리고 관련 지표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는 맹목적 애국심의 보수 편향과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한 바 있는 한국 여성 유권자의 보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⁰⁰⁾

〈표 III-16〉 사회경제변수와 애국심 평균 비교

| | | N | 자부심 M(SD) | 애국심 M(SD) | 건설적 애국심 M(SD) | 맹목적 애국심 M(SD) | 상징적 애국심 M(SD) | 내셔널 리즘 M(SD) | 국가 정체성 M(SD) |
|----|-----------------|-------|----------------|----------------|---------------------|---------------------|---------------------|--------------------|--------------------|
| 성별 | 남 | 497 | 2.92 (0.65) | 2.84 (0.39) | 2.64 (0.47) | 2.34 (0.77) | 3.59 (0.82) | 2.59 (0.65) | 3.56 (0.80) |
| | 여 | 504 | 2.94 (0.59) | 2.83 (0.36) | 2.64 (0.43) | 2.48 (0.70) | 3.54 (0.77) | 2.53 (0.57) | 3.49 (0.75) |
| 연령 | 만 19세~ 만 29세 | 175 | 2.77 (0.63) | 2.76 (0.37) | 2.55 (0.45) | 2.22 (0.71) | 3.33 (0.88) | 2.43 (0.60) | 3.34 (0.84) |
| | 만 30세~ 만 39세 | 171 | 2.80 (0.61) | 2.82 (0.36) | 2.61 (0.43) | 2.22 (0.67) | 3.40 (0.79) | 2.54 (0.60) | 3.49 (0.74) |
| | 만 40세~ 만 49세 | 205 | 2.98 (0.61) | 2.84 (0.37) | 2.66 (0.45) | 2.43 (0.72) | 3.51 (0.77) | 2.56 (0.58) | 3.51 (0.80) |
| | 만 50세~ 만 59세 | 198 | 2.94 (0.56) | 2.85 (0.35) | 2.63 (0.44) | 2.48 (0.78) | 3.69 (0.75) | 2.57 (0.58) | 3.61 (0.74) |
| | 만 60세 이상 | 252 | 3.09 (0.64) | 2.88 (0.39) | 2.72 (0.45) | 2.59 (0.73) | 3.79 (0.72) | 2.66 (0.68) | 3.63 (0.73) |
| | 학력 | 중졸 이하 | 139 | 3.02 (0.62) | 2.89 (0.34) | 2.75 (0.42) | 2.63 (0.71) | 3.75 (0.72) | 2.64 (0.63) |
| | 고졸 이하 | 429 | 2.91 (0.60) | 2.83 (0.34) | 2.64 (0.42) | 2.46 (0.74) | 3.61 (0.77) | 2.53 (0.59) | 3.50 (0.75) |
| | 대졸 이상 | 433 | 2.92 (0.64) | 2.82 (0.41) | 2.61 (0.48) | 2.29 (0.72) | 3.46 (0.83) | 2.57 (0.64) | 3.52 (0.81) |

100) 윤광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기본 심리특성의 영향: 가치와 정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제8권 (2017), pp. 5~35.

| | | | 자부심 | 애국심 | 건설적 애국심 | 맹목적 애국심 | 상징적 애국심 | 내셔널리즘 | 국가 정체성 |
|-------|-------------|-------|----------------|----------------|----------------|----------------|----------------|----------------|----------------|
| 가구소득 | 200만원 미만 | 65 | 3.11 (0.64) | 2.88 (0.40) | 2.71 (0.45) | 2.77 (0.77) | 3.77 (0.79) | 2.68 (0.66) | 3.52 (0.69) |
| | 200만원~300만원 | 144 | 2.97 (0.64) | 2.85 (0.34) | 2.69 (0.41) | 2.55 (0.78) | 3.75 (0.78) | 2.62 (0.65) | 3.63 (0.76) |
| | 300만원~400만원 | 212 | 3.00 (0.62) | 2.81 (0.38) | 2.62 (0.44) | 2.32 (0.71) | 3.50 (0.75) | 2.52 (0.60) | 3.51 (0.76) |
| | 400만원~500만원 | 456 | 2.88 (0.61) | 2.85 (0.36) | 2.64 (0.44) | 2.38 (0.72) | 3.56 (0.79) | 2.56 (0.59) | 3.54 (0.77) |
| | 500만원 이상 | 123 | 2.88 (0.63) | 2.79 (0.43) | 2.60 (0.52) | 2.34 (0.71) | 3.37 (0.87) | 2.50 (0.66) | 3.38 (0.84) |
| Total | | 1,001 | 2.93 (0.62) | 2.84 (0.37) | 2.64 (0.45) | 2.41 (0.74) | 3.56 (0.80) | 2.56 (0.62) | 3.53 (0.77) |

주: 상징적 애국심과 국가정체성은 5점 척도로, 그 외 다른 변수는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만 19세부터 60세 이상까지 5세대로 구분한 연령집단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곧,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애국심, 건설적, 맹목적, 상징적 애국심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고, 내셔널리즘과 국가정체성도 높게 나타났다으며, 특히 모든 변수에서 만 19~29세 집단과 만 60세 이상 집단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편, 서구 연구에서 진보 정치이데올로기 지지와 혼재된(conflated) 것으로 알려진 건설적 애국심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고, 두 연령집단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나라와 달리 민주주의가 내셔널리즘과도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기존 경험적 연구 결과로¹⁰¹⁾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건설적 애국심의 타당도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따른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학력 집단이 애국

101) Eldad Davidov, "Measurement Equivalence of Nationalism and Constructive Patriotism in the Issp: 34 Countri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참조.

심 관련 모든 변수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건설적, 맹목적, 상징적 애국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드러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낮은 학력 집단의 보수성을 반영하는 결과이지만, 건설적 애국심에 대해서는 연령집단 분석에서처럼 추가적 연구의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 소득에 따른 평균 비교 결과에 의하면, 집단 간 별 차이가 없는 국가정체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에서 최저 소득 집단(200만원 미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맹목적 애국심에 대해서는 최저 소득 집단과 상위 집단 간에서 그리고 단일 설문 의 자부심과 상징적 애국심에 있어서는 최저 소득 집단과 최상위 소득 집단(500만원 이상) 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요약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대체로 애국심과 이의 특정 및 관련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 집단에서는 만 29세 이하 청년 집단과 만 60세 이상 집단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현재 한국 사회 주요 갈등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세대갈등의 한 내용 요소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대북 및 통일 태도에 대한 한국인 애국심의 함의를 탐색하도록 하자.

(3) 한국인 애국심과 대북 및 통일 태도

먼저 한국인 애국심이 평가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태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지원, 협력, 경계, 적대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하여 11점 척도(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0점 “매우 동의한다”)로 측정된 동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10개 세부 분야에서의 자부심 평균으로 구한 애국심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사회경제변수(연령, 성, 학력, 가구 월평균 소득)와¹⁰²⁾ 출신지역(만 15세까지

가장 오랫동안 산 지역), 선호정당, 정치이데올로기(0점 매우 진보~10점 매우 보수, 11점 척도로 측정) 등을 통제변수로 구축한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추정했다.¹⁰³⁾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 애국심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북한을 경계 또는 적대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원 또는 협력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표 III-17〉 참조). 다른 조건이 같다면, 4점 척도의 애국심이 1점 높아지는 경우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동의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1.23점, 협력대상으로 동의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0.94점씩 각각 높아지는데 그 크기도 작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에 반해 애국심이 높아진다고 해도 북한을 경계 또는 적대대상으로 보는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두 모형 모두 애국심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 이하 회귀분석에서는 변환하지 않은 원 사회경제변수를 사용했다. 예컨대, 연령은 조사시점 당시 만 나이로, 학력은 무학부터 대학원(박사과정)까지 최종학력 기준 8개 범주로, 그리고 가구 월평균 소득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세전소득으로 원래 측정된 대로 사용했다.

103) 이하 회귀계수의 통계적 검정은 응답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7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으로 나누어 군집화 로버스트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를 사용했다.

〈표 III-17〉 애국심과 북한 평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

| | 지원대상 | 협력대상 | 경계대상 | 적대대상 |
|----------|-----------------------------|------------------------------|------------------------------|------------------------------|
| 연령 | 0.18* (0.07) | 0.23* (0.07) | -0.11 ⁺ (0.05) | -0.14** (0.04) |
| 여성 | -0.10 (0.20) | -0.29 ⁺ (0.14) | 0.01 (0.11) | 0.11 (0.13) |
| 학력 | 0.16** (0.04) | 0.04 (0.04) | -0.00 (0.05) | -0.10 ⁺ (0.05) |
| 소득 | -0.00 (0.00) | 0.00* (0.00) | -0.00 (0.00) | -0.00 (0.00) |
| 호남 | 0.88** (0.24) | 0.92 ⁺ (0.42) | -0.48 (0.27) | -0.41 (0.26) |
| 대구·경북 | -0.13 (0.19) | -0.61 (0.32) | 0.81*** (0.12) | 0.84* (0.27) |
| 부산·울산·경남 | -0.30 (0.18) | 0.07 (0.25) | 0.48* (0.18) | 0.26 (0.15) |
| 민주 | 0.60** (0.15) | 0.65* (0.24) | 0.15 (0.14) | -0.03 (0.14) |
| 한국 | -0.02 (0.27) | -0.08 (0.19) | 0.12 (0.32) | 0.15 (0.32) |
| 미래 | -0.10 (0.21) | 0.12 (0.31) | 0.70** (0.18) | 0.50** (0.11) |
| 평화 | 1.60 (1.68) | 0.69 (1.53) | 0.74 (0.97) | -0.53 (1.11) |
| 정의 | 1.44 ⁺ (0.64) | 1.88** (0.39) | 0.52 (0.49) | -0.24 (0.54) |
| 이념 | -0.05 (0.03) | -0.04 (0.04) | 0.09 ⁺ (0.05) | 0.14 ⁺ (0.06) |
| 애국심 | 1.23** (0.31) | 0.97* (0.32) | -0.34 (0.20) | -0.51 (0.36) |
| 상수 | 0.44 (1.05) | 1.84 ⁺ (0.78) | 6.80*** (0.70) | 7.03** (1.18) |
| N | 994 | 994 | 994 | 993 |
| R-sqr | 0.120 | 0.148 | 0.056 | 0.071 |

주: ⁺p < 0.10; *p < 0.05; **p < 0.01; ***p < 0.001

() 안은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

이와 같은 결과는 우선 현재 애국심이 북한을 현실적 갈등 관계에 있는 경계 또는 적대적 외집단으로 보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나라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반드시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과 적대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¹⁰⁴⁾ 그럼에도 이 결과가 현재 한국인이 북한주민을 같은 민족이나 국민으로 곧, 내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해석하거나 애국심이 북한을 내집단으로 볼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번 통일의식조사에는 이를 직접 측정할 설문이 없었고, 내집단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계변수의 회귀계수를 해석해 보면, 호남 출신은 북한을 부정적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대구·경북 출신은 경계 및 적대대상으로, 부산·울산·경남 출신은 경계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 또한 북한을 긍정적 대상으로 보는 데에 동의할 가능성을 높이고, 보수적 정치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을수록 북한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은 낮지만, 경계 및 적대대상으로 볼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수정당의 성격이 강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바른미래당의 선호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북한을 지원 및 협력대상으로 볼 가능성을 높이고 경

104) Rui J. P. De Figueiredo, Jr. and Zachary Elkins,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pp. 171~188.

계 및 적대대상으로 볼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보수란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왔다는 사실과 일견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것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예외적 현상인지 아니면 청년세대가 북한에 대해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추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들이 통일 과정의 주요 동력이자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III-18〉은 상기 다중회귀분석 모형에 애국심 지수 대신 이의 특정 개념인 건설적 애국심과 맹목적 애국심을 독립변수로 구축한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담고 있다.¹⁰⁵⁾ 이에 의하면, 건설적 애국심은 앞서 본 애국심 지수처럼 북한을 경계 또는 적대대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지원 또는 협력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4점 척도의 건설적 애국심이 1점 높아지는 경우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동의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1.03점, 협력대상으로 동의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0.73점씩 각각 높아지고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특히, 건설적 애국심은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평가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낮추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건설적 애국심이 포괄적 애국심의 구성 요소 중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원천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와 달리 맹목적 애국심은 네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 북한에 대한 평가에 의미 있는 함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 가치와 이상 그리고 비판적 충성심에 바탕을 둔 건설적 애국심이 북한을 적대적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경계대상으로 평가하는

105) 건설적 애국심과 맹목적 애국심의 상관계수는 0.09로 낮아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우려는 없는 편이다.

태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는 이와 유사한 구성 요소로 측정된 ‘정치적 국가자부심(political national pride)’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¹⁰⁶⁾ 그러나 자기 나라가 잘못된 경우에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 맹목적 애국심이 북한에 대한 평가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내셔널리즘이나 ‘민족 문화적 국가자부심(natio-cultural national pride)’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대조된다.¹⁰⁷⁾ 한편, 통제변수 회귀계수의 추정결과는 앞서 살펴본 포괄적 애국심 지수 모형의 추정결과와 기본적으로 같다.

〈표 III-18〉 건설적 및 맹목적 애국심과 북한 평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

| | 지원대상 | 협력대상 | 경계대상 | 적대대상 |
|----------|------------------------------|------------------------------|-------------------------------|------------------------------|
| 연령 | 0.16 ⁺ (0.07) | 0.23 [*] (0.07) | -0.11 ⁺ (0.05) | -0.14 [*] (0.04) |
| 여성 | -0.13 (0.20) | -0.31 ⁺ (0.16) | 0.00 (0.09) | 0.12 (0.13) |
| 학력 | 0.17 ^{**} (0.04) | 0.05 (0.03) | -0.01 (0.05) | -0.10 ⁺ (0.05) |
| 소득 | -0.00 (0.00) | 0.00 [*] (0.00) | -0.00 (0.00) | -0.00 (0.00) |
| 호남 | 0.87 [*] (0.25) | 0.91 ⁺ (0.42) | -0.44 ⁺ (0.22) | -0.38 (0.24) |
| 대구·경북 | -0.16 (0.19) | -0.63 ⁺ (0.31) | 0.81 ^{***} (0.12) | 0.86 [*] (0.28) |
| 부산·울산·경남 | -0.32 (0.20) | 0.05 (0.26) | 0.50 [*] (0.18) | 0.27 (0.17) |

106) 정치적 국가자부심은 건설적 애국심 구성 요소에 ISSP 문항 중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경제성장’을 추가한 개념이다. Mikael Hjerm,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p. 343.

107) Mikael Hjerm,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Rui J. P. De Figueiredo, Jr. and Zachary Elkins,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참조.

| | 지원대상 | 협력대상 | 경계대상 | 적대대상 |
|-----------|------------------|------------------|-------------------|-------------------|
| 민주 | 0.56** (0.13) | 0.64* (0.24) | 0.18 (0.12) | -0.01 (0.14) |
| 한국 | -0.01 (0.25) | -0.06 (0.18) | 0.09 (0.32) | 0.13 (0.33) |
| 미래 | -0.10 (0.20) | 0.13 (0.31) | 0.69** (0.18) | 0.50** (0.10) |
| 평화 | 1.66 (1.78) | 0.70 (1.63) | 0.57 (0.87) | -0.62 (1.08) |
| 정의 | 1.47+ (0.64) | 1.86** (0.43) | 0.53 (0.44) | -0.24 (0.56) |
| 이념 | -0.05 (0.03) | -0.03 (0.04) | 0.09+ (0.04) | 0.14+ (0.06) |
| 건설적 | 1.03* (0.29) | 0.73+ (0.30) | -0.55* (0.20) | -0.55 (0.31) |
| 맹목적 | 0.17 (0.12) | 0.03 (0.17) | 0.10 (0.20) | 0.02 (0.23) |
| 상수 | 0.79 (0.95) | 2.57* (0.90) | 7.04*** (0.41) | 6.97*** (0.54) |
| N | 994 | 994 | 994 | 993 |
| R-squared | 0.124 | 0.143 | 0.066 | 0.076 |

주: +p < 0.10; *p < 0.05; **p < 0.01; ***p < 0.001
() 안은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

그렇다면, 애국심은 통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함의를 내포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애국심이 통일에 대한 추상적인 선호와 구체적 정책에 대한 선호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를 종속변수의 측정 척도를 고려하여 순위프로빗(ordered probit) 모형으로 추정하여 이에 답하고자 한다. 모형의 종속변수로서 통일에 대한 추상적인 선호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북한 관심)’,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통일 필요)’,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나의 소망)’, 그리고 ‘통일 시기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조속 통일)’ 등의 설문으로 측정했고, 구체적 정책에 대한 선호는 ‘나는 통일비용 조달을 위해 세금 인상

찬성한다(통일세 찬성)’는 진술에 동의 정도로 측정했다. 5개 종속 변수 모두 리커트(Likert)형 척도로 조작화했는데, ‘조속 통일’은 3점 척도로, ‘북한 관심’과 ‘통일 필요’는 4점 척도로, ‘나의 소망’과 ‘통일세 찬성’은 5점 척도로 각각 측정 했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는 기본적으로 <표 III-17>의 다중회귀분석 모형과 같다.

<표 III-19> 애국심과 통일 태도에 대한 순위프로빗 모형

| | 북한 관심 | 통일 필요 | 조속 통일 | 나의 소망 | 통일세 찬성 |
|----------|--------------------|--------------------|--------------------|--------------------|--------------------|
| 연령 | 0.34*** (0.03) | 0.29*** (0.05) | 0.19*** (0.01) | 0.22*** (0.03) | 0.18*** (0.05) |
| 여성 | -0.34*** (0.09) | -0.36*** (0.04) | -0.30*** (0.02) | -0.31*** (0.06) | -0.25*** (0.07) |
| 학력 | 0.10** (0.03) | 0.04 (0.04) | 0.03 (0.02) | 0.03 (0.03) | 0.09* (0.04) |
| 소득 | 0.00 (0.00) | 0.00+ (0.00) | 0.00 (0.00) | 0.00** (0.00) | 0.00** (0.00) |
| 호남 | 0.03 (0.08) | 0.15 (0.15) | -0.02 (0.13) | 0.13 (0.13) | 0.09 (0.08) |
| 대구·경북 | -0.05 (0.09) | -0.41*** (0.10) | -0.26+ (0.14) | -0.23+ (0.12) | -0.32** (0.11) |
| 부산·울산·경남 | 0.08 (0.12) | -0.11 (0.10) | -0.13 (0.10) | -0.42*** (0.08) | -0.12+ (0.06) |
| 민주 | 0.29** (0.09) | 0.23+ (0.12) | 0.26** (0.10) | -0.02 (0.05) | 0.13* (0.05) |
| 한국 | -0.14 (0.14) | -0.19 (0.16) | -0.03 (0.16) | 0.02 (0.12) | -0.06 (0.18) |
| 미래 | 0.27*** (0.05) | 0.06 (0.34) | 0.38 (0.24) | 0.18* (0.08) | 0.08 (0.08) |
| 평화 | -0.07 (0.16) | -0.46+ (0.26) | -0.03 (0.36) | -0.87 (0.59) | -0.26 (0.38) |
| 정의 | 1.28*** (0.23) | 0.82** (0.28) | 0.75** (0.24) | 0.40* (0.17) | 0.57** (0.20) |

| | 북한 관심 | 통일 필요 | 조속 통일 | 나의 소망 | 통일세 찬성 |
|------------------|-------------------|-------------------|-------------------|-------------------|-------------------|
| 이념 | -0.05** (0.02) | -0.04* (0.02) | -0.02 (0.02) | -0.05* (0.02) | -0.04* (0.02) |
| 애국심 | 0.37*** (0.07) | 0.56*** (0.04) | 0.64*** (0.15) | 0.48** (0.17) | 0.56* (0.22) |
| cut1 | 0.82* (0.41) | 0.44† (0.27) | 1.53** (0.51) | 0.50 (0.65) | 1.30 (0.93) |
| cut2 | 2.42*** (0.44) | 1.78*** (0.27) | 3.70*** (0.49) | 1.50* (0.66) | 2.22* (0.96) |
| cut3 | 3.97*** (0.46) | 3.09*** (0.25) | | 2.27*** (0.65) | 3.02** |
| cut4 | | | | 3.47*** (0.64) | 4.44*** (1.02) |
| N | 993 | 994 | 994 | 991 | 993 |
| Log Likelihood | -1027.12 | -1080.16 | -778.73 | -1397.76 | -1373.65 |
| Pseudo R-squared | 0.09 | 0.09 | 0.08 | 0.05 | 0.05 |

주: †p < 0.10; *p < 0.05; **p < 0.01; ***p < 0.001
() 안은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

순위프로빗 모형 추정결과를 담은 <표 III-19>에 의하면, 무엇보다 애국심이 통일 선호에 긍정적 함의가 있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애국심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속한 통일을 선호하게 되며, 통일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욱이 애국심은 통일에 대한 추상적인 선호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세금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애국심이 평가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해 긍정적 함의를 갖는다는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와도 부합한다.

한편, 통제변수 분석 결과는 대체로 상기 다중회귀모형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예컨대, 호남 출신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선호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구·경북 출신은 ‘북한 관심’

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호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부정적 선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울산·경남 출신은 ‘나의 소망’과 ‘통일세 찬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의 ‘나의 소망’ 모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수적 정치이데올로기는 ‘조속 통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일에 대한 부정적 선호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통일 선호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바른미래당 지지층 ‘북한 관심’과 ‘나의 소망’에 있어서 긍정적 선호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통일에 대한 추상적인 선호와 구체적 선호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전 연구와 상충되는 결과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상기 다중회귀모형 추정결과와는 대조적으로, 통일 선호에 대한 5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 선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점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맹목적 애국심이 높게 나타난 앞선 결과(〈표 III-16〉 참조)와 함께 북한에 대한 현재 한국 여성의 보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애국심 지수 대신 건설적 애국심과 맹목적 애국심을 독립변수로 하여 통일에 대한 추상적 그리고 구체적 선호에 대한 애국심의 함의를 탐색해 보도록 하자. 〈표 III-20〉은 앞서 제시한 순위프로빗 모형에 독립변수만 애국심의 특정 개념으로 대체하여 구축한 모형의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앞서 살펴본 건설적 및 맹목적 애국심과 북한 평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모형 추정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예컨대, 5개 모형 모두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건

설적 애국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선호를 긍정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맹목적 애국심은 ‘통일 필요’에서 부정적 선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애국심 지수 순위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와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건설적 및 맹목적 애국심과 통일 태도에 대한 순위프로빗 모형

| | 북한 관심 | 통일 필요 | 조속 통일 | 나이의 소망 | 통일세 찬성 |
|----------|--------------------|--------------------|--------------------|--------------------|--------------------|
| 연령 | 0.34*** (0.03) | 0.29*** (0.05) | 0.19*** (0.01) | 0.22*** (0.03) | 0.18*** (0.05) |
| 여성 | -0.35*** (0.08) | -0.35*** (0.04) | -0.29*** (0.03) | -0.30*** (0.07) | -0.26*** (0.07) |
| 학력 | 0.11** (0.04) | 0.04 (0.04) | 0.03 (0.02) | 0.03 (0.03) | 0.09* (0.04) |
| 소득 | 0.00 (0.00) | 0.00 (0.00) | 0.00 (0.00) | 0.00* (0.00) | 0.00** (0.00) |
| 호남 | 0.02 (0.08) | 0.14 (0.13) | -0.04 (0.10) | 0.12 (0.12) | 0.08 (0.08) |
| 대구·경북 | -0.06 (0.08) | -0.42*** (0.09) | -0.27+ (0.14) | -0.24* (0.11) | -0.33** (0.11) |
| 부산·울산·경남 | 0.07 (0.12) | -0.12 (0.11) | -0.13 (0.11) | -0.42*** (0.09) | -0.13+ (0.07) |
| 민주 | 0.28** (0.09) | 0.23* (0.11) | 0.26** (0.09) | -0.01 (0.05) | 0.12* (0.05) |
| 한국 | -0.13 (0.14) | -0.17 (0.15) | -0.00 (0.14) | 0.04 (0.12) | -0.05 (0.18) |
| 미래 | 0.28*** (0.05) | 0.08 (0.33) | 0.39+ (0.23) | 0.19* (0.09) | 0.08 (0.09) |
| 평화 | -0.08 (0.19) | -0.48+ (0.25) | -0.04 (0.39) | -0.88 (0.56) | -0.23 (0.39) |
| 정의 | 1.27*** (0.22) | 0.77** (0.26) | 0.71** (0.26) | 0.37* (0.17) | 0.55* (0.23) |
| 이념 | -0.05** (0.02) | -0.04+ (0.02) | -0.01 (0.02) | -0.05* (0.02) | -0.04* (0.02) |

| | 북한 관심 | 통일 필요 | 조속 통일 | 나의 소망 | 통일세 찬성 |
|------------------|-------------------|-------------------|-------------------|-----------------------------|-------------------|
| 건설적 | 0.25** (0.08) | 0.35*** (0.06) | 0.46*** (0.10) | 0.32 ⁺ (0.19) | 0.44* (0.19) |
| 맹목적 | 0.01 (0.03) | -0.11** (0.04) | -0.11 (0.08) | -0.07 (0.05) | -0.01 (0.07) |
| cut1 | 0.48 (0.49) | -0.43 (0.41) | 0.70 (0.45) | -0.13 (0.62) | 0.89 (0.84) |
| cut2 | 2.08*** (0.52) | 0.91* (0.36) | 2.86*** (0.42) | 0.87 (0.63) | 1.80* (0.85) |
| cut3 | 3.62*** (0.55) | 2.20*** (0.36) | | 1.63** (0.61) | 2.60** (0.94) |
| cut4 | | | | 2.83*** (0.61) | 4.02*** (0.91) |
| N | 993 | 994 | 994 | 991 | 993 |
| Log Likelihood | -1029.53 | -1085.58 | -782.76 | -1401.85 | -1375.71 |
| Pseudo R-squared | 0.09 | 0.09 | 0.07 | 0.05 | 0.05 |

주: ⁺p < 0.10; *p < 0.05; **p < 0.01; ***p < 0.001
() 안은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

라. 소결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위로부터의 통일과 평화체제에 대한 추동력이 거세어지는 시점에서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 구성원이 정체성의 주요 근원을 새로운 통일국가에서 찾게 될 때 올 것이라는 신념 하에 국가정체성의 주요 구성요소인 애국심에 초점을 맞추어 이의 대북 및 통일 태도에 대한 함의를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 분석을 이용하여 탐색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현재 한국인들 대 다수가 국민으로서,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다만, 군사력과 공정한 사회적 대우 분야에서만 자부심을 느끼는 한국인이 반수를 넘지 못했다. 둘째,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등 사회경제변수에

따른 애국심과 이의 특정 개념(건설적, 맹목적, 상징적 애국심), 그리고 애국심 관련 개념(내셔널리즘과 국가정체성)의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대체로 이들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집단 간 애국심의 차이는 한국 사회 주요 갈등 중 하나인 세대갈등의 한 내용 요소로 해석된다. 셋째, 애국심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사회경제변수, 정당지지, 정치이데올로기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 모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애국심이 높아질수록 북한을 경계 또는 적대대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지원 또는 협력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궁극적 가치와 이상 그리고 비판적 충성심에 기반한 건설적 애국심은 북한을 지원 또는 협력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을 높이고 경계대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하여 내셔널리즘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맹목적 애국심은 북한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한 독립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애국심 일반과 건설적 애국심은 통일에 대한 추상적 선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국심이 높을수록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속한 통일을 선호하게 되고, 통일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아울러 통일을 위한 세금 인상에도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맹목적 애국심은 통일 필요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의미 있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 관련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관련 연구와 대조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통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엇보다 현재 한국인 애국심이 오랜 적대와 대

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적어도 편견과 적대의 대상인 외집단으로 여기게 하지는 않는, 긍정적 함의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맹목적 애국심이 외국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지는 다른 나라 연구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가 북한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선호로 이어지지 않는 긍정적 양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북한도 나의 정체성의 진정한 일부가 되어가는, 곧 북한을 내집단으로 여기게 되어 나의 자긍심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리고 애국심을 집단 규범으로서 남북한 주민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게 하는 국가정체성의 주요 요소로 해석한다면, 현재 한국인의 애국심은 통일에 대해 매우 긍정적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 애국심의 ‘타락한 형태’로서 긍정적 애국심과 그 구분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맹목적 애국심 또는 내셔널리즘도¹⁰⁸⁾ 부정적 영향이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애국심은 - 특히, 건설적 애국심은 - 통일 과정에서 더 강하게 고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개념 논의에서도 제기한 바대로, 애국심의 대상으로서 국가와 국가가 함축하는 일련의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역사적으로 고정된 의미나 당위성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을 거쳐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헌법과 정치제도가 그러하며 귀속적, 역사·문화적 전통 요소도 국가 내 어느 한 네이션 집단 것만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08) Rick Kosterman and Seymour Feshbach, "Toward a Measure of Patriotic and Nationalistic Attitudes"; Rogers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Maurizio Viroli, *For Love of Country: An Essay on Patriotism and Nation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Leynes *et al.*, "Emotional prejudice, essentialism, and nationalism: The 2002 Tajfel Lectu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3, no. 6 (2003), pp. 703~717; Rogers Brubaker, "In the Name of the Nation: Reflections on Nationalism and Patriotism," pp. 115~127 참조.

애국심의 대상으로 국민 또한 법적 기준에 의해 구분할 것인지 주류 네이션이 아닌 소수자 또는 이주자를 포함해야 할 것인지도 논쟁의 대상이다.¹⁰⁹⁾ 특히 지구화와 다문화시대의 도래로 근대 주권국가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애국심의 대상으로서 국가와 그 구성요소는 재구성 과정에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국인 애국심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의 네이션이 서로 다른 통치 원리에 기반하여 두 개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경우 통일은 애국심의 대상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애국심의 실천적, 정책적 고양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함께 가야 할 이유이다.

한편, 젊은 세대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들이 통일정책과 과정의 주요 동력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 관련 연구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추후 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3. 북한주민 인식 결정요인 분석: 이미지, 비인간화, 그리고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

Joshua. D. Kertzer(하버드대학교)

가. 서론

엘리트와 대중이라는 두 층위 모두에서 국제정치는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 대해 갖는 인식에 의해 작동된다.¹¹⁰⁾ 지도층이 다른 나

109) Elizabeth Theiss-Morse, *Who Counts as an American?: The Boundaries of National Identity*, pp. 22~23.

라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들이 추구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형성하듯, 시민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그들이 지지하는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¹¹¹⁾ 일례로 분쟁 해소의 주요 장벽 중 하나는 분쟁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바꾸는 과정을 포함한다. 한쪽의 시민이 상대방 지역의 사람들을 열등하거나 더 인간적이지 못한 존재로 바라볼 경우, 이러한 시선은 폭력과 보복성 무력의 사용을 정당화한다.¹¹²⁾ 그러나 이미지는 집단 간 분쟁 가능성을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력의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경제통합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또 경제문화적 교류의 중심논리가 되기도 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서로 다른 집단의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하면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¹¹³⁾

본고에서는 이미지, 고정관념, 비인간화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차용하여 다음 세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¹¹⁴⁾ 첫째, 한국인들이 북

110) Robert Jervis,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Richard K. Herrmann, *Perceptions and Behavior in Soviet Foreign Polic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5) 참조.

111) Richard K. Herrmann and Michael P. Fischerkeller,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 3 (1995), pp. 415~450.

112) Ifat Maoz and Clark McCauley, "Threat, dehumanization, and support for retaliatory aggressive policies in asymmetric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 1 (2008), pp. 93~116; Emile Bruneau and Nour Kteily, "The enemy as animal: Symmetric dehumanization during asymmetric warfare," *PLOS ONE*, vol. 12, no. 7 (2017), pp. 1~120.

113) Karl W. 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Cambridge: MIT Press, 1953) 참조; Thomas F. Pettigrew,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9 (1998), pp. 65~85.

114) Susan T. Fiske *et al.*,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no. 6 (2002), pp. 878~902; Nick Haslam, "Dehumanization: An Integrative

한주민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떠한가? 둘째, 어떤 인구통계적 요소와 정치적 성향을 통해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셋째, 이러한 인식과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입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이론체계 중 일부를 아직 남북관계의 맥락에 체계적으로 대입하여 시험해 보지 못한 만큼, 위 세 질문은 실질적 중요성이 명확하면서도 이론적으로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본고의 논의는 아래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국제관계에서의 이미지에 대한 기존 정치심리학 연구를 고정관념, 비인간화라는 두 이론적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후 북한주민에 대해 한국인이 가진 이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한국인이 북한주민을 특별히 따뜻하거나 차갑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비인간화에 대한 이론 중 ‘인간의 고유성’이 아닌 ‘인간 본성’의 측면과 관련해서 한국인이 북한주민을 비인간화한다는 증거를 찾아본다. 한국인은 북한주민을 동물처럼 바라봄으로써 비인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비인간화한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다수는 어떤 측면에서는 덜 인간적인 존재로서 인식되며, 인간 하위의 존재는 아니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 인식된다.

셋째로 각각의 고정관념을 잘 포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의 유형을 파악하여 다변수 맥락에서 이러한 인식과 인구분포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특히 젊은 한국인들이 고령 세대보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등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서민층과 보수층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다. 청년층과 교육수준이 낮은 층은 인간 본성과 관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0, no. 3 (2006), pp. 252~264.

려하여 북한주민을 비인간화하는 경향 또한 더 높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이러한 인식에 따른 정치적 결과를 살펴보면, 온정적 시선과 인간 본성 측면에서 비인간화된 시선 등 다변화된 인식이 전반적인 통일 지지 여부와 통일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할 의향 등 통일에 대한 입장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효과는 다양한 인구통계적, 정치적 성향을 통제하더라도 유효하며, 남북관계에서 외집단의 인식을 조사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나. 국제정치에서 이미지와 인식

국제정치학의 심리학적 이론의 중심 요소 중 하나는 행위자의 인식(perception)을 강조하는 것이다.¹¹⁵⁾ 물질적인 것보다 관념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심리학적 이론은 국제사회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각각의 인식보다 시스템 전체의 구조에 주목하는 현실주의 이론과 대비된다.¹¹⁶⁾ 인식을 강조하는 국제정치학 이론은 국가의 행위(엘리트 층위) 또는 정책 선호도(대중 층위)가 항상 힘의 균형과 같은 구조적 요소에서 연역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행위자는 상황을 여러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 행위자의 인식이 단순히 그가 처한 환경에 한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개인의 인식이 각각 다르다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에

115) Robert Jervis, Richard Ned Lebow and Janice Gross Stein, *Psychology and Deterrence*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Keren Yarhi-Milo, *Knowing the Adversary: Leaders, Intelligence, and Assessment of Inten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Joshua D. Kertzer, *Resolve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참조.

116)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cGraw-Hill, 1979) 참조.

는 어려운 주제이다. 그러나 이미지 이론은 행위자 인식의 구체적 내용은 다양하더라도 인식의 구조(structure)는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비록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인식과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몇 가지 공통적 차원에 따라 카테고리화하여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총체적 판단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지 이론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국제정치학에서 행위자가 타인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일차원적으로, 즉 “대상의 의도가 적대적으로 이해되는지 친화적으로 이해되는지, 따라서 위협이 되는지 기회가 되는지”라는 단순한 차원으로 축소된다고 주장했다.¹¹⁷⁾

보다 최근의 이론들은 적과 동지를 단순 구분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타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세 차원으로 구조화하였다. 첫째, 우리는 상대가 제기하는 위협과 기회의 정도에 대한 인식, 즉 상대방이 위협이 되는지, 상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주는지, 또는 착취의 기회가 되는지에 따라 상대를 분석한다. 이것은 이미지에 관한 초기 연구의 중심요소인 정서적 차원(valence dimension)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적 권력(relative power)과 인식된 지위(perceived status)라는 두 차원을 추가해 대상을 카테고리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상대적 권력의 차원에서 대상은 관찰자보다 힘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인식된 지위 차원에 따라서는 더 낮은 지위, 같은 지위, 높은 지위로 평가될 수 있다.¹¹⁸⁾ 따라서, 예컨대 적(enemy)의 이미지는 나와 힘은 비슷하

117) Kenneth E. Boulding,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 no. 2 (1959), pp. 120~131.

118) Richard K. Herrmann and Michael P. Fischerkeller,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Richard K. Herrmann, "Perceptions and Image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2nd Ed.*, ed. Leonie

고, 의도는 위협적이고, 지위는 동등한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한편, 나보다 약하고, 지위가 낮고, 착취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자에게는 식민지(colony) 이미지를 부여하게 된다.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행위의 경향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집단을 적이라고 생각할 때(예를 들어 20세기 후반 미국인이 소련인에게 그랬듯)와 식민지라고 생각할 때(20세기 초반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그랬듯) 상대방을 다루는 방식은 대단히 다르다. 즉, 이미지는 상대방이 어떻게 취급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생각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 도식의 기능도 수행한다.¹¹⁹⁾ 이미지는 정서적인 요소 또한 내포한다. 행위는 이미지가 생성하는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 고정관념: 따뜻함과 능력

이 점에서 볼 때 국제정치학에서 우리가 타인의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고정관념을 이해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¹²⁰⁾ 인간의 인식에 대한 이전의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이미지가 단일한 차원에 따라 형성된다고 주장했던 반면, 최근의 고정관념 구조에 대한 연구, 특히 Fiske 등의 고정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334~363.

119) Richard K. Herrmann *et al.*,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3 (1997), pp. 403~433; Emanuele Castano, Alain Bonacossa and Peter Gries, "National Images as Integrated Schemas: Subliminal Primes of Image Attributes Shape Foreign Policy Preferences," *Political Psychology*, vol. 37, no. 3 (2016), pp. 351~366.

120) Gordon W.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Addison-Wesley, 1954) 참조; Susan T. Fiske, Amy J. C. Cuddy and Peter Glick,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perception: Warmth and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 11 (2007), pp. 77~83.

관념 내용 모형은 타 행위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두 차원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차원이란 따뜻함에 대한 인식(인식된 의도의 기능을 하며, 상대가 기회 또는 위협이 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이미지 이론의 관심 분야와 상응함)과 능력에 대한 인식(인식된 능력으로서, 상대가 나보다 약한지 강한지에 대한 이미지 이론의 관심 분야에 대응됨)을 말한다.¹²¹⁾ 따라서 타 국가에 대해 생각하는 인지적 프로세스는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프로세스와 유사하다.¹²²⁾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인들은 북한주민을 어떻게 인식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래 분석에서는 응답자에게 북한주민을 얼마나 따뜻하게, 또 얼마나 유능하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함으로써 고정관념 내용 모형의 활용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인들이 가진 북한주민 이미지의 두 차원을 연구한다. 비교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한다. 이 이론적 모형은 Cuddy 등에 의한 대규모 국가 간 연구의 일환으로서 한국에서 이미 시험된 바 있으나, 여기서의 접근 방식은 국가적으로 대표적 표본을 사용한다는 점, 사회 내부집단이 아닌 타 국가의 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¹²³⁾

121) Solomon E. Asch,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1946), pp. 1230~1240; Susan T. Fiske et al.,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참조.

122) Kathleen M. McGraw and Thomas M. Dolan, "Personifying the state: Consequences for attitude formation," *Political Psychology*, vol. 28, no. 3 (2007), pp. 299~327.

123) Amy J. C. Cuddy, "Stereotype content model across cultures: Towards universal similarities and some differenc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8, no. 1 (2009), pp. 1~33.

라. 비인간화: 인간의 고유성과 인간의 본성

집단 간 관계의 핵심적 연관구조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 즉 개인이 타 집단 일원들의 인간적 특성을 부정하는 경향이다.¹²⁴⁾ 비인간화는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나뉜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노골적 비인간화는 외부집단의 일원들을 말 그대로 동물이나 곤충에 비교함으로써 상대의 인간성을 부정하여 폭력을 방지하는 도덕적 한계를 약화시킨다.¹²⁵⁾ 보다 은근한 형태의 비인간화는 인간성과 연관되는 특성들을 상대적으로 외부집단의 일원에게 덜 부여하는 경향을 수반한다.¹²⁶⁾ 비인간화의 이중 모형은 우리가 인간성의 정수와 연관시키는 특성이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주장하는데,¹²⁷⁾ 첫째는 인간의 고유성(human uniqueness)이다. 이것은 지능, 자기통제, 도덕적 민감성, 이차적 정서 등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특성으로 인식되는 덕목들을 말한다.¹²⁸⁾ 두 번째인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은 인간을 기계, 로봇, 기타 무생물체와 구분하여 인식할 때 쓰이는 덕목들로서, 따뜻함, 독자성, 개별성, 인지적 개방성 및 정서성 등이 포함된다. 외부집단의 인간적 고유성을 부정하는 것은 동물적 비인간화, 즉 타인을 인간 이하의 존재(subhuman)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집단의 인간적 본성을 부정하는 것은

124) Nick Haslam, "Dehumanization: An Integrative Review" 참조.

125) Nour Kteilye *et al.*, "The ascent of man: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for blatant dehuman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9, no. 5 (2015), p. 901.

126) Jacques-Philippe Leyens, "Psychological essentialism and the differential attribution of uniquely human emotions to ingroups and out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1, no. 4 (2001), pp. 395~411.

127) Nick Haslam and Steve Loughnan, "Dehumanization and Infrahumaniz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5, no. 1 (2014), pp. 399~423.

128) 분노와 불안 같은 일차적 정서는 인간과 비인간인 동물에 모두 부여되는 반면, 부끄러움이나 후회와 같은 이차적 정서는 인간에게만 부여되는 경향이 있다.

기계적 형태의 비인간화, 즉 타인을 인간이 아닌(nonhuman)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외부집단의 인간 고유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인을 능력치가 낮은 존재로 인식한다는 뜻이 되고, 인간의 본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타인을 따뜻함이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는 행위를 수반하므로, 비인간화와 고정관념 내용 모형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¹²⁹⁾ 비인간화는 이미 지 이론에서의 상대적 지위 차원과도 연결된다. 제국주의 세력은 식민지 주민을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는 뒤쳐진 존재로 바라보면서 비인간화적 수사를 활용해 자신들이 식민지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다.¹³⁰⁾

한국인들은 북한주민을 비인간화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비인간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부정인가 아니면 인간 고유성의 부정인가? 아래 분석에서는 비인간화의 이중 모형을 활용한 공식을 포함하여 이 질문을 다룬다.¹³¹⁾ 응답자는 인간 본성과 고유성(그리고 유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성에 대해서도 포함)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여덟 가지 항목의 목록을 보고 각 항목이 한국, 북한, 일본을 어느 정도로 잘 설명하는지 답하는 질문을 받는다. 내부집단과 두 외부집단의 특성 항목별 순위의 응답자별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인간 고유성에 가까운 쪽과 인간 본성에 가까운 쪽으로 평균을 뺀으로써 우리는 두 외부집단 각각에 대한 두 차원의 비인간화 수준의 측정값을 얻는다.

129) Lasana T. Harris and Susan T. Fiske, "Dehumanizing the lowest of the low: neuroimaging responses to extreme out-groups," *Psychological Science*, vol. 17, no. 10 (2006), pp. 847~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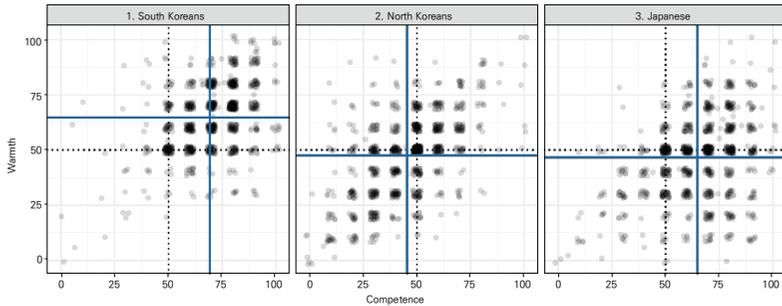
130) Richard K. Herrmann and Michael P. Fischerkeller, "Beyond the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참조.

131) Nick Haslam and Paul Bain, "Humanizing the Self: Moderators of the Attribution of Lesser Humanness to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3, no. 1 (2007), pp. 57~68.

마. 결과

(1) 한국인은 북한주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림 III-6〉 남한국민의 각국 주민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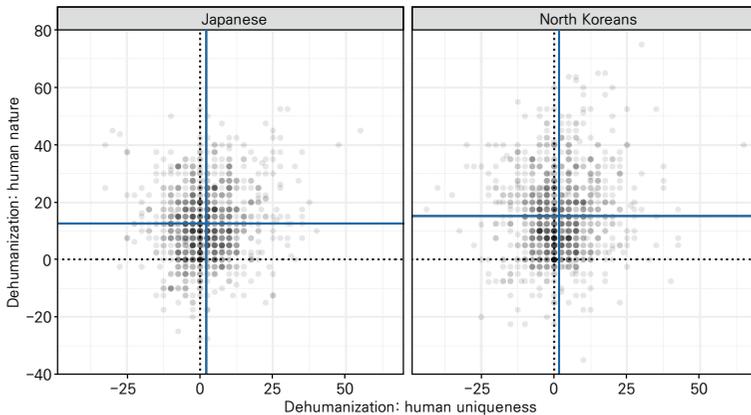
우선 〈그림 III-6〉을 통해 북한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구조를 살펴보자. 비교를 위해 왼쪽 패널은 한국인의 한국인 전체에 대한 인식을 표시하고, 오른쪽 패널은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각 그래프의 y축은 고정관념 대상의 인식된 따뜻함, x축은 인식된 능력을 표시한다. 회색 점은 개별 조사 응답자의 응답을 나타내며, 청색 실선은 차원별로 주어진 대상에 부여된 값의 평균을 나타낸다. 왼쪽 패널은 한국인 대부분이 자국 국민에 대해 따뜻함과 능력 두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이 자신의 내부집단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예상할 수 있는 대로이다. 고정관념 내용 모형에 따르면 이 정도의 따뜻함과 능력의 조합에서 유도되는 감정은 찬양이다.¹³²⁾ 이와 대조적으로 다른 두 패널은 한국인이 일본인

132) Susan T. Fiske *et al.*, "A Model of(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참조.

과 북한주민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훨씬 다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른쪽 패널을 보면 한국인들은 일본인에 대해 한국인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능하다고 인식하지만 확연히 덜 따뜻하게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정관념 내용 모형에서 이와 같은 조합은 높은 지위의 외부집단과의 경쟁으로 인한 질투와 연관된다. 가운데 패널은 한국인이 북한주민에 대해 일본인만큼 차가우면서도 확연히 무능하게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낮은 지위로 인식한다는 뜻이다. 이 조합에 연관되는 감정은 멸시이다. 전체적으로 각 차원의 평균값은 각 계열의 중간지점 값에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특별히 극단적이지는 않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응답의 분포도가 다른 고정관념 대상에 대해서보다 넓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북한주민에 대한 이미지가 응답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불일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어떤 유형의 한국인 응답자들(나이의 연소, 빈부, 진보성향 또는 보수성향에 따라)이 어떤 유형의 고정관념을 옹호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은 다음 절에서 다시 다룬다.

〈그림 III-7〉 비인간화 점수분포



〈그림 III-7〉은 비인간화 측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측정 수치가 모두 내부집단에 대비한 상대적 값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패널이 두 개 있다. 왼쪽은 한국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비인간화 점수, 오른쪽은 한국인들의 북한주민에 대한 비인간화 점수를 보여준다.

x축은 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비인간화, 즉 해당 외부집단에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덜 부여되었는지를 표시한다. 반면 y축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비인간화, 즉 해당 외부집단에 인간을 기계와 구분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덜 부여되었는지를 표시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점은 각 응답자의 점수를 나타낸다. 흥미롭게도 두 외부집단에 대해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한국인 응답자들은 북한주민과 일본인을 모두 동물적으로 비인간화하지 않고, 성실성이나 예의와 같은 인간 고유성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국민인 한국인에 대해서와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로 이들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인간 본성에 해당하는 항목, 즉 인간을 기계나 로봇과 구분하는 호기심이나 친밀함과 같은 측면에서는 북한주민과 일본인 모두 비인간화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림 III-6〉에서 얻은 고정관념 내용 모형의 결과값과 마찬가지로 〈그림 III-7〉의 비인간화 점수에도 상당한 변동폭이 존재한다. 일부 한국인은 북한주민을 비인간화하는 정도가 다른 한국인에 비해 크게 높다. 다음에서 그 변동폭의 유형을 설명한다.

(2) 한국인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분석은 한국인이 북한주민에 대해 한국인이나 일본인보다 확연히 무능하고, 한국인보다 확연히 차갑게 인식하며 상대적으로 중간적(neutral)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인은 북한주민에 대해 인간의 본성과 연관된 특징을 부정

하는 등 기계적 비인간화를 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또한 응답자에 따라 고정관념과 비인간화 점수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표 III-21〉은 북한주민의 따뜻함과 유능함에 대한 응답자의 점수를 일련의 인구변수와 정치적 성향에 따른 함수로써 일련의 선형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이러한 다변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모형 1~3은 따뜻함 점수에 대한 결과, 모형 4~6은 유능함 점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비교를 위해 연령(1단위가 1세에 대응)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0에서 1 사이로 표시되었다. 첫 3개의 모형은 남성 응답자가 여성보다 북한주민을 훨씬 차갑게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 내 다른 공변인에 따라 응답자 성별의 영향은 $-1.9\sim-2.2\%$ 로 나타난다. 반면 다음 세 모형은 유능함의 인식에 관해서는 응답자 성별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연령은 따뜻함과 유능함에 대한 인식 모두에 확연히 연관되어 있다. 잠재적 세대 간 영향이 비선형적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연령의 영향에 비모수적 평활 스플라인을 적용한 일반화가법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을 추정함으로써 잠재적 비선형성을 테스트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III-8〉에 표시되었다.¹³³⁾ 연령의 영향을 보다 유연하게 모델링하더라도 명백히 선형적 영향이 나타난다. 젊은 응답자는 나이 든 응답자보다 북한주민을 상대적으로 차갑고 무능하게 인식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 III-7〉에서 나타난 비교적 중간적인 고정관념 평균값이 부분적으로는 젊은 응답자가 나이 든 응답자보다 북한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더 많이 나타냄으로써 얻어진 세대차이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133) Luke Keele, *Semiparametric Regression for the Social Sciences* (Chichester: John Wiley&Sons, 2008) 참조.

〈표 III -21〉 고정관념 내용의 예측변수

| | (1) | 따뜻함 (2) | (3) | (4) | 능력 (5) | (6) |
|---------|--------------------------------|--------------------------------|--------------------------------|--------------------------------|--------------------|--------------------------------|
| 남성 | -2.168 ⁺ (1.132) | -1.948 ⁺ (1.136) | -1.890 ⁺ (1.135) | -0.919 (1.106) | -0.766 (1.111) | -0.788 (1.112) |
| 연령 | 0.088* (0.041) | 0.090* (0.041) | 0.075 ⁺ (0.042) | 0.110** (0.040) | 0.109** (0.040) | 0.110** (0.041) |
| 교육수준 | -0.963 (3.623) | -0.424 (3.643) | -0.292 (3.624) | 0.172 (3.539) | 0.687 (3.562) | 0.219 (3.552) |
| 소득 | 28.897* (14.524) | 28.533* (14.510) | 29.236* (14.495) | 11.915 (14.185) | 11.740 (14.186) | 12.041 (14.208) |
| 사상 | -8.140** (2.981) | -8.132** (2.979) | -8.385** (2.976) | -5.701 ⁺ (2.911) | -5.755* (2.913) | -5.675 ⁺ (2.917) |
| 계층 | 0.912 (3.147) | 1.587 (3.163) | 0.687 (3.178) | 4.387 (3.074) | 4.861 (3.092) | 4.563 (3.115) |
| 서울 거주 | 3.752** (1.417) | 3.772** (1.416) | 3.405* (1.426) | 4.030** (1.384) | 4.021** (1.384) | 3.996** (1.398) |
| 사회지배 경향 | | -6.292 ⁺ (3.240) | -4.769 (3.318) | | -3.466 (3.167) | -3.678 (3.252) |
| 우의 권위주의 | | 2.293 (3.752) | | | 3.389 (3.668) | |

| | (1) | 미듯함 (2) | (3) | (4) | 능력 (5) | (6) |
|----------------|---------------------|---------------------|---------------------|---------------------|---------------------|---------------------|
| 국기에 대한 애착 | | | 6.577* (3,154) | | | -0.845 (3,091) |
| 행복적 애국심(소비니즘) | | | 0.691 (2,845) | | | 1.961 (2,788) |
| 절판값 | 48.374** (4,013) | 48,943** (4,676) | 46,706** (4,449) | 41,246** (3,919) | 40,313** (4,571) | 41,975** (4,361) |
| N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 R ² | 0.025 | 0.029 | 0.034 | 0.023 | 0.025 | 0.025 |

주: *p < 0.1; *p < 0.05; **p < 0.01. 모든 계수 및 기준 오류는 OLS 모형에서 전달됨.

흥미롭게도 교육수준은 북한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뚜렷한 연관이 없으나 소득은 연관이 있다. 응답자 중 가장 부유한 그룹은 북한주민을 한국인보다 따뜻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연하다. 응답자 중 가장 낮은 소득수준의 그룹에 비해 가장 높은 소득수준의 그룹은 따뜻함에 대한 인식이 29%p 높다. 정치사상도 북한주민에 대한 고정관념(따뜻함과 유능함 모두)과 연관성이 뚜렷하다. 보수성향의 응답자는 진보성향의 응답자보다 북한주민에 대해 확연히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유능함에 대한 인식(약 5.7%p 격차)보다 따뜻함에 대한 인식(약 8.0%p 격차)에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소득 차이를 배제하면 사회적 계층은 북한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뚜렷한 연관이 없으나, 서울 거주 응답자는 따뜻함과 유능함에 대한 인식이 3.7~4.0%p 높게 나타나는 등 긍정적 고정관념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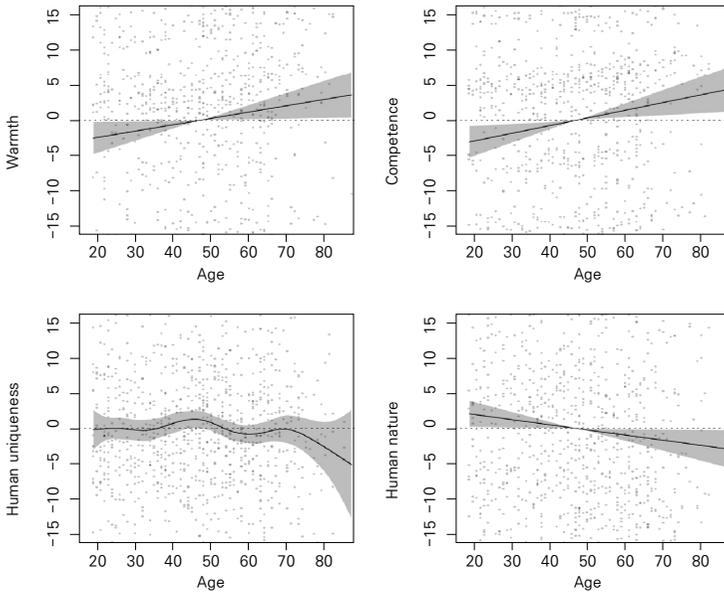
다음 예측변수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영향을 추정한다. 사회지배 경향이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심리학적 지표로서,¹³⁴⁾ 사회지배 경향이 강한 사람은 위계질서의 존재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가 불가피하다고 믿고,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이며 사회복지제도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¹³⁵⁾ 예상할 수 있듯 사회지배 경향이 강한 응답자는 북한주민에 대해, 특히 따뜻함에 대한 인식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드러낸다. 반면 우파권위주의 - 권위, 전통, 사회적 통제에 대한 믿음을 측정하는 심리학적 지

134) Felicia Pratto *et al.*,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94), pp. 741~763; Jim Sidanius and Felicia Pratto,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참조.

135) John Duckitt and Chris G. Sibley, "A Dual-Process Motivational Model of Ideology, Politics, and Prejudice," *Psychological Inquiry*, vol. 20 (2009), pp. 98~109.

표 - 는 응답자의 고정관념과 뚜렷한 연관이 없다.¹³⁶⁾ 마지막 두 공변인은 국가정체성의 두 측면을 나타낸다. 국가에 대한 애착은 응답자가 국가에 대해 느끼는 동질감의 정도이며, 국가적 우월감 또는 소비니즘은 응답자가 자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 우월하게 느끼는지를 뜻한다.¹³⁷⁾ 흥미롭게도, 국가적 우월감은 북한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뚜렷한 관련이 전혀 없으나 국가에 대한 애착은 관련이 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응답자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수록, 응답자는 북한주민을 덜 따뜻하게 인식한다.

〈그림 III-8〉 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연령의 효과



136) Bob Altemeyer,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1981) 참조.

137) Richard K. Herrmann, Pierangelo Isernia and Paolo Segatti, "Attachment to the N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obing the Dimensions of Identity and their Relationship to War and Peace," *Political Psychology*, vol. 30, no. 5 (2009), pp. 721~754.

〈표 III-22〉는 〈표 III-21〉과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되 인구변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비인간화 점수를 회귀분석한다. 모형 1~3은 인간의 고유성 판단에 대한 공변인의 영향에 주목하고, 모형 4~6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비인간화에 주목한다. 그 결과 고정관념 내용과 비인간화가 연관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두 개념과 공변인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형 1~3에서 인간의 고유성 관련 비인간화의 예측변수 중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사회지배 경향과 국가에 대한 애착이다. 사회지배 경향이 가장 강한 응답자들은 가장 낮은 응답자들에 비해 인간의 고유성 관련 비인간화 점수가 4.0~5.5점 높다. 또한, 국가에 대한 애착이 높은 응답자는 인간의 고유성 측면에서의 비인간화 정도가 확연히 낮다.

〈표 III -22〉 비인간화 예측변수

| | (1) | 인간의 고유성 (2) | (3) | (4) | 인간의 보성 (5) | (6) |
|---------|--------------------|--------------------|--------------------|----------------------|----------------------|---------------------|
| 남성 | 0.865 (0.711) | 0.752 (0.712) | 0.669 (0.709) | 0.935 (0.934) | 0.930 (0.938) | 1.072 (0.936) |
| 연령 | -0.008 (0.026) | -0.014 (0.026) | -0.001 (0.026) | -0.077* (0.034) | -0.073* (0.034) | -0.092** (0.034) |
| 교육수준 | 2.552 (2.276) | 2.611 (2.283) | 1.833 (2.266) | -10.422** (2.988) | -10.673** (3.008) | -9.995** (2.990) |
| 소득 | -12.795 (9.124) | -12.414 (9.092) | -12.581 (9.064) | -3.984 (1.976) | -4.113 (1.981) | -3.343 (1.961) |
| 사상 | -2.538 (1.872) | -2.687 (1.867) | -2.365 (1.861) | -0.588 (2.458) | -0.486 (2.460) | -0.883 (2.455) |
| 계층 | 2.208 (1.977) | 1.865 (1.982) | 2.163 (1.987) | -1.698 (2.595) | -1.717 (2.612) | -2.348 (2.622) |
| 서울 거주 | 0.558 (0.890) | 0.490 (0.887) | 0.754 (0.892) | -3.155** (1.168) | -3.115** (1.169) | -3.531** (1.177) |
| 사회지배 경향 | | 5.521** (2.030) | 4.027* (2.075) | | -1.465 (2.675) | 0.006 (2.738) |
| 우익 권위주의 | | 3.169 (2.351) | | | -3.136 (3.098) | |

| | (1) | 인간의 고유성 (2) | (3) | (4) | 인간의 보성 (5) | (6) |
|----------------|------------------|-------------------|---------------------|---------------------|---------------------|---------------------|
| 국가에 대한 애착 | | | -6.364** (1.972) | | | 6.439* (2.602) |
| 쇼비니즘 | | | 2.048 (1.779) | | | 0.766 (2.347) |
| 질문 | 0.304 (2.521) | -3.232 (2.930) | 1.050 (2.782) | 24.606** (3.309) | 26.890** (3.861) | 21.517** (3.671) |
| N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1,001 |
| R ² | 0.009 | 0.018 | 0.027 | 0.029 | 0.030 | 0.036 |

주: *p < 0.1; **p < 0.05; ***p < 0.01. 모든 계수 및 기준 오류는 OLS 모형에서 전달됨

반면 인간의 본성 관련 비인간화를 검토한 모형 4~6에서는 보다 뚜렷한 결과가 도출된다. <그림 III-7>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비인간화를 보인 차원이다. 여기에서는 나이 든 응답자가 젊은 응답자에 비해 북한주민을 덜 비인간화한다. 비선형적 세대 영향을 시험하기 위해 <그림 III-9>에서는 비모수적 평활 스플라인을 적용하여 연령의 영향을 유연하게 추정해 보는데, 그 결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뚜렷한 선형성이 관찰된다. 흥미롭게도 여기서의 패턴은 따뜻함에 대한 인식에서 연령의 영향과 상응한다. 젊은 응답자는 인간의 본성, 즉 따뜻함과 전형적으로 연결되는 호기심, 정서, 독자성 등의 특성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을 비인간화한다. 따라서 젊은 한국인은 북한주민을 같은 인류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고, 그보다는 기계나 로봇과 같은 존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크다. 교육수준 관련, <표 III-22>의 모형 4~6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한국인들은 가장 낮은 한국인 응답자들보다 인간의 본성 관련 특성을 10~10.5점 정도 북한주민에게 덜 부여하고, 서울 거주자는 북한주민을 3.2~3.5점 덜 비인간화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대한 애착이 큰 응답자는 애국심이 크지 않은 응답자보다 북한주민을 비인간화하는 정도가 확연히 컸다.

(3) 북한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어떻게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형성하는가?

북한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국인들의 정책 선호도에 이러한 고정관념이 영향을 끼친다면 특히 더 중요하다. <표 III-23>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대한 정책적 입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통일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는 12개의 항목("나는 남북한

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또는 “살아있는 동안 통일을 직접 볼 수 없더라도 우리는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인내해야 한다” 등의 문장이 포함됨)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다. 배리맥스(Varimax) 회전을 활용한 평행축 요인 추출법을 적용한 결과 12개 중 10개 항목이 2요인 솔루션에 해당되었다. 2요인 중 하나는 응답자의 통일에 대한 전반적 지지도(예: “통일보다 분단된 채로 지내는 것이 낫다”에 동의하지 않음)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응답자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개인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의지 표현의 척도(예: “나는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에 동의함)를 나타낸다.¹³⁸⁾

138) 2요인 솔루션은 표준 모형적합도에 따르면 평균제곱근오차(RMSEA)=0.042, 터커 루이스지수(TLI)=0.976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 교차적재로 인해 두 항목은 생략되었다; Kristopher J. Preacher *et al.*, “Choosing the Optimal Number of Factor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Model Selection Perspective,”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48, no. 1 (2013), pp. 28~56.

〈표 III-23〉 동일일에 대한 입장 예측변수

| | 동일일에 대한 지지 | | | 동일일을 위한 개인적 희생 | | |
|-------|---------------------|---------------------|---------------------|---------------------|---------------------|---------------------|
| | (1) | (2) | (3) | (4) | (5) | (6) |
| 남성 | -0.023* (0.011) | -0.022* (0.011) | -0.023* (0.011) | -0.047** (0.011) | -0.044** (0.011) | -0.046** (0.011) |
| 연령 | 0.002** (0.0004) | 0.002** (0.0004) | 0.002** (0.0004) | 0.004** (0.0004) | 0.003** (0.0004) | 0.003** (0.0004) |
| 교육수준 | 0.080* (0.035) | 0.081* (0.035) | 0.070* (0.035) | 0.078* (0.036) | 0.079* (0.035) | 0.072* (0.036) |
| 소득 | 0.151 (0.140) | 0.130 (0.140) | 0.151 (0.140) | 0.339* (0.144) | 0.296* (0.142) | 0.327* (0.144) |
| 사상 | -0.068* (0.029) | -0.061* (0.029) | -0.068* (0.029) | -0.125** (0.030) | -0.111** (0.029) | -0.127** (0.030) |
| 계층 | -0.056+ (0.030) | -0.057+ (0.030) | -0.058+ (0.030) | 0.005 (0.031) | 0.001 (0.031) | 0.005 (0.031) |
| 서울 거주 | 0.007 (0.014) | 0.004 (0.014) | 0.004 (0.014) | -0.010 (0.014) | -0.017 (0.014) | -0.012 (0.014) |
| 미맞춤 | | 0.075* (0.037) | | | 0.130** (0.038) | |

| | 통일에 대한 지지 | | 통일을 위한 개인적 희생 | | | |
|----------------|--------------------|--------------------|--------------------|--------------------|--------------------|--------------------|
| | (1) | (2) | (3) | (4) | (5) | (6) |
| 유능함 | | 0.0003 (0.038) | | | 0.058 (0.038) | |
| 인간의 고유성 | | | 0.015 (0.053) | | | -0.080 (0.055) |
| 인간의 보성 | | | -0.104* (0.041) | | | -0.089* (0.042) |
| 절면값 | 0.422** (0.039) | 0.386** (0.042) | 0.472** (0.049) | 0.368** (0.040) | 0.281** (0.042) | 0.448** (0.050) |
| N | 995 | 995 | 995 | 995 | 995 | 995 |
| R ² | 0.046 | 0.052 | 0.052 | 0.094 | 0.121 | 0.101 |

주: *p < 0.1; *p < 0.05; **p < 0.01. 모든 계수와 기준 오류는 OLS 모형에서 전달됨.

이로써 <표 III-23>은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고정관념과 비인간화가 통일에 대한 전반적 지지와 개인적 희생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 요인점수를 활용해 조정).¹³⁹⁾ 모형 1~3은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지지도에 주목하고, 모형 4~6은 통일을 위해 개인적으로 희생할 의지를 살펴본다.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연령을 제외한 모든 공변인은 0~1 사이의 숫자로 재계산하였다. 모형 1은 기본적인 인구통계적 공변인이 통일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그 결과 남성 응답자, 젊은 응답자, 낮은 교육수준, 상류 계층, 보수성향의 응답자일수록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2는 여기에 우리가 살펴본 두 고정관념 내용에 대한 공변인을 추가하여 계산하는데, 북한주민에 대해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한국인 응답자일수록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 주요한 발견이다. 앞에서 제시된 다른 모든 인구통계학적 공변인을 통제하고도 북한주민에 대해 가장 따뜻하게 인식하는 응답자는 가장 차갑게 인식하는 응답자보다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7.5%p 높다. 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일 지지도에 뚜렷한 영향이 없다. 모형 3은 고정관념 내용 대신 비인간화에 대한 측정치를 적용하였는데, 인간의 본성 관련 비인간화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특징을 부정하는 응답자는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확연히 낮다. 다변량 회귀분석 측면에서 볼 때 비인간화 정도가 가장 높은 응답자는 가장 낮은 응답자에 비해 통일 지지도가 10.4%p 낮다.

모형 4는 모형 1의 반복이나, 통일지지도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개인적 희생 의지에 인구통계적 공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139) Joshua D. Kertzer *et al.*, "Moral Support: How Moral Values Shape Foreign Policy Attitudes," *Journal of Politics*, vol. 76, no. 3 (2014), pp. 825~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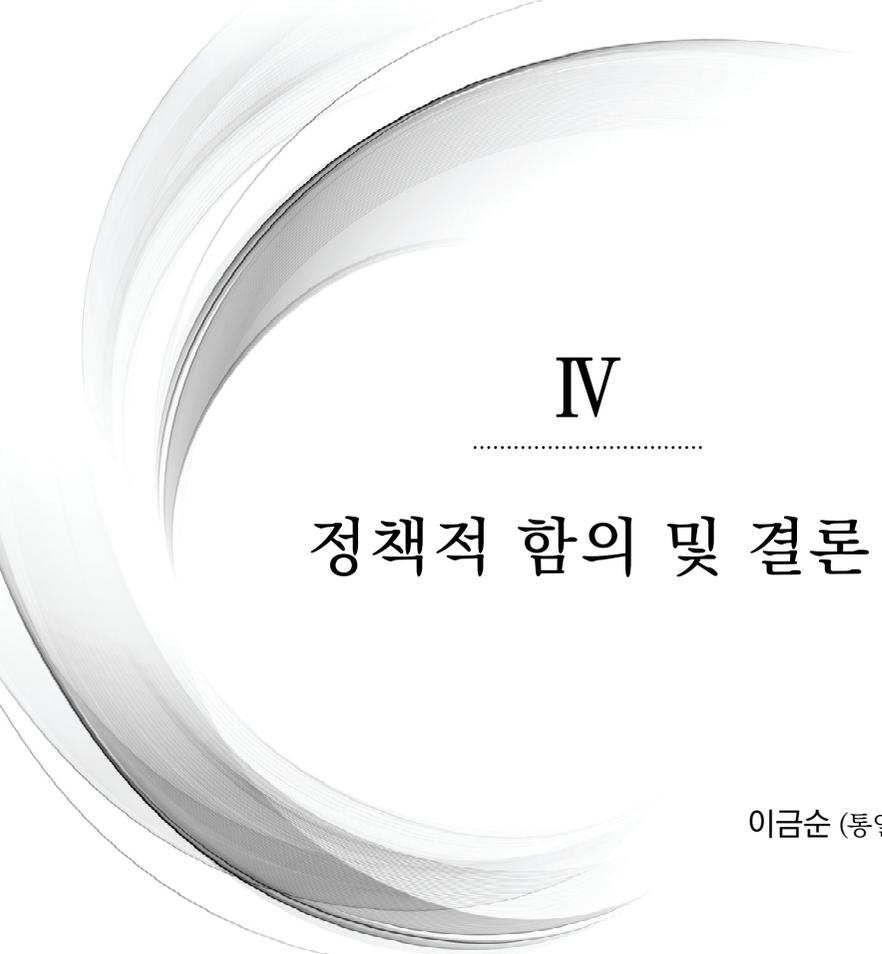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 응답자, 젊은 응답자, 낮은 교육수준, 저소득, 보수성향에 가까울수록 통일을 위해 희생할 의지가 적다. 고정관념 공변인을 추가한 모형 5에서는 모형 2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진폭이 더 크다. 북한주민을 따뜻하게 인식하는 응답자는 통일을 위해 희생할 의지가 확연히 더 크게 나타난다. 기타 인구통계적 공변인을 통제하고 볼 때 북한주민에 대해 가장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응답자는 가장 차가운 이미지를 가진 응답자보다 통일을 위해 희생할 의지가 13%p 높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능력에 대한 이미지는 통일을 위한 희생 의지 표현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 비인간화를 적용한 모형 6을 보면 인간의 본성 관련 비인간화의 뚜렷한 부정적 영향이 입증된다. 응답자를 기계적으로 비인간화하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을 위해 희생할 의지는 적다. 북한주민을 가장 많이 비인간화하는 응답자는 가장 적게 비인간화한 응답자보다 통일을 위해 희생할 의지가 8.9%p 낮다.

바. 소결

본고는 정치심리학의 여러 이론체계(이미지 이론, 고정관념, 비인간화 등)를 차용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의 성격, 근원, 결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주민에 대해 한국인이 가진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중간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보였으나 자국민인 한국인에 비해 확연히 덜 따뜻하고 확연히 무능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해 자국민과 비슷하게 유능하면서 덜 따뜻하게 인식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다. 반면 북한주민과 일본인에 대한 비인간화는 유사한 양상으로, 주로 인간의 고유성보다는 인간의 본성 관련 특징을 부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즉, 동물적 비인간화보다는 기계적 비인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정관념과 비인간화 분야 모두 응답자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상당하여 이 변동폭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분석에서는 인구통계와 성향 등이 응답자의 인식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고, 젊은 한국인이 나이 든 한국인에 비해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비인간화를 하는 등 세대 간 격차가 뚜렷함을 입증하였다. 고정관념의 측면에서도 남성 응답자, 보수성향의 응답자, 서울 외 거주자가 유사한 패턴을 드러냈으며, 인간의 본성 관련 비인간화 정도는 서울 외 거주자와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분석은 이러한 패턴이 정치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다양한 인구통계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북한주민을 덜 따뜻하게 인식하거나 그들의 인간의 본성 관련 특성을 부정하는 비인간화를 하는 한국인은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확연히 낮고 통일을 위한 개인적 희생 의지도 확연히 적었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결과는 이들 이론체계의 남북관계 연구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보다 폭넓은 국제관계에서 인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IV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이금순 (통일연구원)

1. 연구 결과

본 연구는 2018년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북·통일 정책이 국민들의 공감대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통일 및 북한 관련 세부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중 하나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5일부터 25일까지 남북정상회담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이전에 비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결과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핵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남북관계 단절로 인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경계·협력대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남북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 관련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 관련 인식은 통일인식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대한 대화와 타협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나, 반면 경계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경계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58.2%)이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52.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 관련 사

안에 대해 세대별, 지역별, 성별 인식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세대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만 19세 및 20대)의 통일 및 북한 관련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젊은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 관련 긍정적 인식이 전체 평균(70.7%)보다 낮은 55.4%로 응답하였다.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을 보인 60대 이상의 81%와는 큰 차이를 보이나, 30대의 59.6%와는 차이가 크지 않다. ‘통일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강한 부정적 인식은 전체 4.1%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6.9%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이 필요 없다’는 질문에 대해 젊은 세대들은 전체 48.5%보다 높은 58.3%를 보이고 있다. 다른 연령대가 거의 유사한 응답을 하고 있으나, 만 19세 및 20대는 평화공존론에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전체 평균 45.2%보다 현저하게 낮은 29.1%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통일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점에 대한 동의 비율도 젊은 세대는 전체 평균(33.9%)보다 크게 낮은 18.3%를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도 전체 평균 44.7%보다 높은 57.7%를 보이고 있다. 만 19세 및 20대는 분단손해가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50.9%)이 30대(47.4%)나 40대(49.3%)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통일보다 현재 분단 상태를 선호한다는 질문에는 만 19세와 20대(38.3%)가 30대(29.2%)나 40대(23.9%)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남북한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이 전체 평균(34.1%)보다 낮은 23.4%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희생하는 것에 대한 동의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

그리고 북한주민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는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달리, 젊은 세대는 통일 후 계층갈등에 대해서는 다른 세대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는 다른 세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세대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이후 지역갈등의 심화 가능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응답은 전체 평균 정도이다.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은 통일방식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은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이며, 이는 세대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는 통일한국이 우선시해야 할 목표에 대해 다른 세대와 동일하게 경제성장, 사회 안정, 안보, 국민통합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지역균형발전보다는 복지를 우선시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는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변화 전망에 대해서도 다른 세대보다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북한을 경계대상 혹은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크게 낮다.

둘째, 성별 인식조사 결과 여성이 전반적으로 통일 및 북한 관련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여성은 남성 75.1%보다 낮은 66.3%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통일을 위해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단피해가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여성의 동의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이유 관련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해 남성은 긍정적 비율(55.6%)이 부정적 비율(44.2%)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부정적 비율(60.3%)이 긍정적 비율(39.7%)보다 현저하게 높다. 통일·북한 관련 정보 이용매체도 여성은 남성보다 지상파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 비율이 남성(20.3%)보다 낮은 비율(13.5%)을 보이고 있다.

셋째, 지역별 인식조사 결과, 대구·경북 지역의 통일 관련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부정적 의견은 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은 전체 평균(70.7%)보다 크게 낮은 57.8%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통일에 대한 희생 감내 및 통일을 당면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을 나의 진정한 소망’으로 인식하는 것과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원·제주 지역이 대구·경북 지역보다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분단의 손해가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동의 비율(46.1%)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대체로 낮으나, 인천·경기 지역(44.2%) 및 강원·제주 지역(38.1%)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일이 대한민국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대구·경북 지역은 전체 평균(73.9%)보다 낮으나(59.8%), 강원·제주 지역(50.0%)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은 통일로 인한 자신의 이익 정도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통일을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전쟁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평균(37.4%)보다 매우 높은 비율(52.0%)을 보이

고 있다. 반면 강원·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61.9%)이 전쟁위협 해소(28.6%)보다 크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통일 후 계층갈등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지역(78.4%)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강원·제주 지역(83.3%)의 부정적 인식보다는 다소 낮다. 통일 후 이념갈등에 대해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83.8%)이 가장 심각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 후 세대갈등 및 지역갈등의 경우에는 대구·경북 지역이 가장 심각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은 통일방식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도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비율이 가장 높으나, 돌발 상황에 의한 급진적 통일의 가능성(17.6%)이 전체 평균(7.4%)보다 현저하게 높다. 통일한국이 우선시해야 할 목표와 관련, 대구·경북 지역은 안보보다 국민화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은 향후 남북관계 변화 전망에 대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낮게 나타난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북한에 대한 관심도 전체 평균(47.6%)보다 낮은 42.2%를 보이지만, 인천·경기 지역(42.9%) 및 강원·제주 지역(42.9%)과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통일 정보 관련 이용매체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인터넷 이용비율이 전체 평균(16.9%)보다 높은 비율(18.6%)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북한을 지원대상(35.3%) 혹은 협력대상(37.3%)으로 보기보다는 경계대상(75.5%) 혹은 적대대상(61.8%)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지원대상이라고 동의하는 비율은 대구·경북 지역(35.3%)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31.8%)과 강원·제주 지역(33.3%)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은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타협 당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대구·경북 지역의 응답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 이후 사회갈등 등 거의 모든 통일인식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20.6%)라는 이유보다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52.0%)를 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가 37.4%로 ‘같은 민족이니까’의 31.2%보다 다소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대구·경북 지역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은 통일방식에서도 ‘돌발 상황에 의한 급진적 통일’에 대한 응답이 전체 7.4%보다 높은 17.6%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은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변화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대구·경북 지역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위협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북 전단 활용, 제재강화 등 일부 대북정책 관련 항목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이 부산·울산·경남 지역보다 찬성 비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자가이념성향이 통일 및 북한인식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해 필요가 있다.

자가평가 이념에 따른 정치적 성향별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여겨졌던 이념적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통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온 것으

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 통일 이후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가 계층
갈등 및 이념갈등 모두 크게 상승하였고 북한 이주에 대한 의견에는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정책적 함의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인식 관련 인식조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우리 국민이 북한을 적대대
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군사력과 공정한 사회
적 대우 항목을 제외하고는 국민 대다수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애국심과 한국
인이라는 자긍심이 높을수록 북한을 ‘경계 혹은 적대대상’으로 생각
하기보다는 ‘지원 및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애국심은 통일을 추상적으로 선호하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통
일정책에 대한 선호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애국심이 남
북한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게 할 수 있는 긍정
적 의미를 담고 있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
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젊은 세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50%를 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통일보다는 분단을 선호한다는 설문에 대해 20대 이하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이하의 경우에도 분단에 대한 선호(38.3%)와 통일에 대
한 선호(36.6%)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통일을 민족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우선적인 통일의 이유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과 북한이 동일한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적대적 타국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인 통일인식 형성을 위해서 중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비인간화’ 인식을 확인하였다.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인간의 본성 관련 특징을 부정하는 ‘기계적 비인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북한주민을 덜 따뜻하게 인식하거나 비인간화하는 경우 통일에 대한 지지도 및 통일을 위한 개인의 희생 의지도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본 인식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주요 경로가 지상파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이 지상파와 동일한 비율(38.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로 평가한 경우가 중도나 보수와 비교하여 인터넷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통일교육의 주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북한 관련 정보 및 교육이 정치체제 위주가 아닌 ‘인간으로서 북한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에는 사회주의 체제가 획일화시킨 ‘비인간화된 북한주민’의 모습이 강조되어 왔다. 이는 이제까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인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미흡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 언론매체에서 여전히 남북한의 ‘다름’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본 연구는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사회지배 경향이 강할수록 ‘통일편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통일편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으나, 개인적 차원의 통일편익에 대한 인식은 국가적 차원의 편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한국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일을 위한 개인적 부담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이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이 북한주민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 및 협력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경제적 이익 등 구체적인 편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화하여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서 가장 높은 응답이 ‘전쟁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이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 차원의 편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가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여성과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통일인식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요인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 및 청년세대의 통일 및 북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도가 다른 분야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 결의안 제132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별국가들은 분쟁해결 및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통일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여성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북·통일 정책을 여성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도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현실도 여성들의 대북·통일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의 경우에도 취업 및 진로 고민 등으로 인해 통일을 기성세대의 과제로 인식하고 상당한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분적으로 통일을 청년세대의 관심과 연계하여 체험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대북·통일 정책이 당위적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남북교류 및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청소년 및 대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여전히 당위적인 차원에서 기성세대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교육도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 북한주민들의 삶을 인간적 차원에서 조명하려는 노력들은 매우 미흡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세대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부터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 실시되었던 연례적인 학교 통일교육도 매우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젊은 세대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정보 접근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및 통일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참여를 통해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강정인·김수자·문지영·정승현·하상복.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9.

김병로·김병조·박영규·서호철·은기수·정은미. 『2007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2007.

류현숙·권혁빈·이건·권세영. 『국민의 대북 안보의식 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013.

정영호·고숙자.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조대엽. 『갈등사회의 도전과 미시민주주의의 시대: 새로운 사회갈등과 공공성 재구성에 관한 사회학적 성찰』. 파주: 나남출판, 2014.

Allport, Gordon W.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Addison-Wesley, 1954.

Altemeyer, Bob.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1981.

_____. *The Authoritarian Spec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Bar-Tal, Daniel and Ervin Staub. *Patriotism i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Nations*.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 1997.
- Brubaker, Rogers.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Citrin, Jack and David O. Sears. *American Identity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Deutsch, Karl W.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cation*. Cambridge: MIT Press, 1953.
- Gellner, Ernest.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Grimm, Jürgen, Leonie Huddy, Peter Schmidt, and Josef Seethaler. *Dynamics of National Identity: Media and Societal Factors of What We Are*.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6.
- Herrmann, Richard K. "Perceptions and Image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2nd edition. Edited by Leonie Huddy, David O. Sears, and Jack S. Levy.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Herrmann, Richard K. *Perceptions and Behavior in Soviet Foreign Polic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5.
- Jervis, Robert.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Jervis, Robert, Richard Ned Lebow, and Janice Gross Stein. *Psychology and Deterrence*.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 Keele, Luke. *Semiparametric Regression for the Social Sciences*. Chichester: John Wiley&Sons, 2008.

- Kertzer, Joshua D. *Resolve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 Kinder, Donald R. and Cindy D. Kam. *Us Against Them: Ethnocentric Foundations of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9.
- Lipset, Seymour Martin.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1960.
- Miller, David. *On Nationality*. New York: Clarendon Press, 1995.
- Nathanson, Stephen. *Patriotism, Morality, and Peace*. Lanham: Rowman & Littlefield, 1993.
- Norris, Pippa, Joni Lovenduski, and Rosie Campbell. *Gende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London: The Electoral Commission, 2004.
- Sibley, Chris G. and Fiona Kate Barlow.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Prejud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Sidanius, Jim.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86.
- _____. *National Identity*. Reno: University of Nevada Press, 1991.
- Sidanius, Jim and Felicia Pratto. *Social Dominance: An Intergroup Theory of Social Hierarchy and Oppres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Smith, Anthony D. *Ethno-Symbolism and Nationalism: A Cultural Approach*. New York: Routledge, 2009.
- _____.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86.
- Theiss-Morse, Elizabeth. *Who Counts as an American?: The*

- Boundaries of National Ident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Verdugo, Richard R. and Andrew Milne. *National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Charlotte: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16.
- Viroli, Maurizio. *For Love of Country: An Essay on Patriotism and Nationalism/Maurizio Viroli*. Oxford: Clarendon Pres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cGraw-Hill, 1979.
- Yarhi-Milo, Keren. *Knowing the Adversary: Leaders, Intelligence, and Assessment of Inten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2. 논문

- 강원택. “사회계층과 정치적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서울: 21세기북스, 2014.
- _____.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의정연구』. 제36권, 2012.
- _____.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룩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3호, 2011.
- _____. “한국 정치의 이념적 특성.” 『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1호, 2003.
- 강정인. “보수주의: 비동시성의 동시성 그리고 모호한 정상화.” 강정인·김수자·문지영·정승현·하상복 편. 『한국 정치의 이념과 사상: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9.
- 구본상. “ARS 조사방식과 젊은 연령대 여성 표집의 실패: 정치적 의견이

- 강한 유권자 비율에서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조사연구』. 제 18권 1호, 2017.
- _____. “서베이 기반 정치 엘리트 이념 측정방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회의원 이념지수 측정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4호, 2016.
- 권숙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의 이해.” 『사회과학연구』. 제28권 1호, 2012.
- 권영승·이수정.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의식: N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권 2호, 2011.
- 김갑식.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23권 2호, 2007.
-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제7권 2호, 2015.
- 박종희. “진보와 보수, 그리고 통일: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통일에 대한 인식과 국내정치의 이념적 대립구도의 관계.” 운영관 편. 『한반도 통일』.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3.
- 백대현·이재완.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편익과 비용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2호, 2015.
- 변중현.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 21권 1호, 2012.
- 윤광일. “균열구조와 19대 대선: 완전한 균열로서 지역균열.” 『한국정치연구』. 제27권 1호, 2018.
- _____.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기본 심리특성의 영향: 가치와 정치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제8권, 2017.
- _____. “한 주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25권 2호, 2013.
- _____. “한국인 국가정체성의 정치심리학.” 『문화와 정치』. 제4권 4호, 2017.

윤인진. “한국인의 갈등의식 현황과 변화: 제1~3차 한국인의 갈등의식 조사 결과 분석.” 『한국사회』. 제16권 1호, 2015.

은기수.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통일과 평화』. 제2권 2호, 2010.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제22권 1호, 2014.

이상신. “북한 이미지 결정요인 연구 :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남갈등.”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3호, 2014.

_____. “정치심리학: 역사와 현황.” 『현상과 인식』. 제33권 4호, 2009.

정동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시민들의 통일의식 변화—이념적 양극화인가, 당파적 편향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50권 5호, 2016.

조진만·한정택.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6권 1호, 2014.

주봉호. “남한사회 남남갈등의 양상과 해소방안 모색.” 『한국동북아논총』. 제17권 3호, 2012.

최우선·황태희·최영준·주형민. “통일인식 차이의 원인: 합리주의적 설명.”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최준영.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Asch, Solomon 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1946.

Blank, Thomas and Peter Schmidt. “National Identity in a United Germany: Nationalism or Patriotism? An Empirical Test with Representative Data.” *Political Psychology*, vol. 24, no. 2, 2003.

- Blank, Thomas. "Determinants of National Identity in East and West Germany: An Empirical Comparison of Theories on the Significance of Authoritarianism, Anomie, and General Self-Esteem." *Political Psychology*, vol. 24, no. 2, 2003.
- Bonikowski, Bart. "Nationalism in Settled Tim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42, no. 1, 2006.
- Boulding, Kenneth E.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 no. 2, 1959.
- Brewer, Marilynn. "Social Identity and Citizenship in a Pluralistic Society." In *The Political Psychology of Democratic Citizenship*. Edited by Eugene Borgida, Christopher M. Federico, and John L. Sullivan.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Brewer, Marilynn B. "Intergroup Discrimination: Ingroup Love or Outgroup Hate?"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Prejudice*. Edited by Chris G. Sibley and Fiona Kate Barl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_____. "The Importance of Being We: Human Nature and Intergroup Relations." *American Psychologist*, vol. 62, no. 8, 2007.
- _____.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and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5, no. 3, 1999.
- _____.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17, no. 5, 1991.
- Brown, Rupert. "Social Identity Theory: Past Achievements,

- Current Problems and Future Challeng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0, no. 6. 2000.
- Brubaker, Rogers. “In the Name of the Nation: Reflections on Nationalism and Patriotism.” *Citizenship Studies*. vol. 8, no. 2. 2004.
- Bruneau, Emile and Nour Kteily, “The enemy as animal: Symmetric dehumanization during asymmetric warfare.” *PLOS ONE*. vol. 12, no. 7. 2017.
- Castano, Emanuele, Alain Bonacossa, and Peter Gries. “National Images as Integrated Schemas: Subliminal Primes of Image Attributes Shape Foreign Policy Preferences.” *Political Psychology*. vol. 37, no. 3. 2016.
- Cuddy, Amy J. C. “Stereotype content model across cultures: Towards universal similarities and some differenc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48, no. 1. 2009.
- Davidov, Eldad. “Measurement Equivalence of Nationalism and Constructive Patriotism in the Issp: 34 Countrie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olitical Analysis*, vol. 17, no. 1. 2009.
- _____. “Nationalism and Constructive Patriotism: A Longitudinal Test of Comparability in 22 Countries with the Issp.”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vol. 23, no. 1. 2010.
- De Figueiredo, Rui J. P. and Zachary Elkins. “Are Patriots Bigots? An Inquiry into the Vices of in-Group Prid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1. 2003.
- Druckman, Daniel. “Nationalism, Patriotism, and Group Loyalty: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ershon International*

- Studies Review*, vol. 38, no. 1, 1994.
- Duckitt, John and Chris G. Sibley. "A Dual-Process Motivational Model of Ideology, Politics, and Prejudice." *Psychological Inquiry*, vol. 20, 2009.
- Fiske, Susan T. "A Model of(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no. 6, 2002.
- Fiske, Susan T., Amy J. C. Cuddy, and Peter Glick. "Universal dimensions of social perception: Warmth and compete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 11, 2007.
- Guibernau, Montserrat. "Anthony D. Smith on Nations and National Identity: A Critical Assessment." *Nations and Nationalism*, vol. 10, no. 1/2, 2004.
- Haslam, Nick. "Dehumanization: An Integrative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vol. 10, no. 3, 2006.
- Haslam, Nick and Paul Bain. "Humanizing the Self: Moderators of the Attribution of Lesser Humanness to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3, no. 1, 2007.
- Haslam, Nick and Steve Loughnan. "Dehumanization and Infrahumaniz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5, no. 1, 2014.
- Harris, Lasana T. and Susan T. Fiske. "Dehumanizing the lowest of the low: neuroimaging responses to extreme out-groups." *Psychological Science*, vol. 17, no. 10, 2006.
- Herrmann, Richard K, and Michael P. Fischerkeller. "Beyond the

- Enemy Image and Spiral Model: Cognitive–Strategic Research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9, no. 3, 1995.
- Herrmann, Richard K., James F. Voss, Tonya Y. E. Schooler, and Joseph Ciarrochi. “Ima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 Experimental Test of Cognitive Schemat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1, no. 3, 1997.
- Herrmann Richard K., Pierangelo Isernia, and Paolo Segatti. “Attachment to the N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robing the Dimensions of Identity and their Relationship to War and Peace.” *Political Psychology*, vol. 30, no. 5, 2009.
- Hjerm, Mikael. “National Identities, National Pride and Xenophobia: A Comparison of Four Western Countries.” *Acta Sociologica*, vol. 41, no. 4, 1998.
- Huddy, Leonie and Nadia Khatib. “American Patriotism,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1, no. 1, 2007.
- Huddy, Leonie. “From Social to Political Identity: A Critical Examination of Social Identity Theory.” *Political Psychology*, vol. 22, no. 1, 2001.
- _____. “Unifying National Identity Researc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In *Dynamics of National Identity: Media and Societal Factors of What We Are*. Edited by J. Grimm, L. Huddy, P. Schmidt, and J. Seethaler.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16.
- Inglehart, Ronald and Pippa Norris. “The Developmental Theory of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 vol. 21, no. 4. 2000.
- Jost, John T. "Working Class Conservatism: A System Justification Perspectiv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vol. 18, 2017.
- Kertzer, Joshua D., Kathleen E. Powers, Brian C. Rathbun, and Ravi Iyer. "Moral Support: How Moral Values Shape Foreign Policy Attitudes." *Journal of Politics*. vol. 76, no. 3. 2014.
- Koo, Bon Sang. "Traditional Gender Gap in the Modernized Society: Dynamics of the Gender Gap in Voter Turnout in Korea." *Unpublished Manuscript*. Seoul: Yonsei Institute for North Korean Studies, 2018.
- Kosterman, Rick and Seymour Feshbach. "Toward a Measure of Patriotic and Nationalistic Attitudes." *Political Psychology*. vol. 10, no. 2. 1989.
- Kteily, Nour Kteily, Emile Bruneau, Adam Waytz, and Sarah Cotterill. "The ascent of man: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 for blatant dehuman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9, no. 5. 2015.
- Kunovich, Robert M. "Th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4, no. 4. 2009.
- Levinson, Daniel J. "The Study of Ethnocentric Ideology." In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Edited by T. W. Adorno, E. Frenkel-Brunswik, D. J. Levinson, and N. R. Sanford. New York: Harper, 1950.
- Leyens, Jacques-Philippe. "Psychological essentialism and the differential attribution of uniquely human emotions to ingroups and out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1, no. 4. 2001.

- Leyens, Jacques-Philippe, Brezo Cortes, Stephanie Demoulin, and John F. Dovidio. "Emotional prejudice, essentialism, and nationalism: The 2002 Tajfel Lectu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3, no. 6. 2003.
- Leyens, Jacques-Philippe, Brezo Cortes, Stephanie Demoulin, John F. Dovidio, Susan T. Fiske, Ruth Gaunt, Maria Paola Paladino, Armando Rodriguez-Perez, Ramon Rodriguez-Torres, and Jeroen Vaes. "Emotional Prejudice, Essentialism, and Nationalism the 2002 Tajfel Lectur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33, no. 6. 2003.
- Li, Qiong and Marilyn B. Brewer. "What Does It Mean to Be an American? Patriotism, Nationalism, and American Identity after 9/11." *Political Psychology*. vol. 25, no. 5. 2004.
- Maoz, Ifat and Clark McCauley. "Threat, dehumanization, and support for retaliatory aggressive policies in asymmetric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2, no. 1. 2008.
- McGraw, Kathleen M. and Thomas M. Dolan. "Personifying the state: Consequences for attitude formation." *Political Psychology*. vol. 28, no. 3. 2007.
- Monroe, Kristen Renwick, James Hankin, and Renée Bukovchik Van Vechten.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dentity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3, no. 1. 2000.
- Mummendey, Amélie, Andreas Klink, and Rupert Brown. "Nationalism and Patriotism: National Identification and out-Group Rejec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 vol. 40, no. 2. 2001.
- Parker, Christopher S. "Symbolic Versus Blind Patriotism: Distinction without Differen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63, no. 1. 2010.
- Pettigrew, Thomas F.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9, 1998.
- Piaget, Jean and Anne Marie Weil. "The Development in Children of the Idea of the Homeland and of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vol. 3, 1951.
- Postmes, Tom, Alexander S. Haslam, and Lise Jans. "A Single-Item Measure of Social Identification: Reliability, Validity, and Util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2, no. 4. 2013.
- Pratto, Felicia, Jim Sidanius, Lisa M. Stallworth, and Bertram F. Malle.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7, no. 4. 1994.
- Pratto, Felicia, Jim Sidanius, and Shana Levin. "Social Dominance Theory and the Dynamics of Intergroup Relations: Taking Stock and Looking Forward."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7, 2006.
- Preacher, Kristopher J., Guangjian Zhang, Cheongtag Kim, and Gerhard Mels. "Choosing the Optimal Number of Factor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Model Selection Perspective."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48, no. 1. 2013.

- Reeskens, Tim and Matthew Wright. "Nationalism and the Cohesive Society: A Multilevel Analysis of the Interplay among Diversity, National Identity, and Social Capital across 27 European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6, no. 2, 2013.
- Roccas, Sonia and Andrey Elster. "Group Identitie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Edited by L. R. Tropp.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 Schatz, Robert T., Ervin Staub, and Howard Lavine. "On the Varieties of National Attachment: Blind Versus Constructive Patriotism." *Political Psychology*, vol. 20, no. 1, 1999.
- Schildkraut, Deborah J. "Boundaries of American Identity: Evolving Understandings of "U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 17, no. 1, 2014.
- Sidanius, Jim. "The Psychology of Group Conflict and the Dynamics of Oppression: A Social Dominance Perspective." In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 Edited by Shanto Iyengar and William McGuir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3.
- Staub, Ervin. "Blind Versus Constructive Patriotism: Moving from Embeddedness in the group to Critical loyalty and Action." In *Patriotism i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Nations*. Edited by D. Bar-Tal and E. Staub. Chicago: Nelson-Hall, 1997.
- Tajfel, Henri and John C. Turner.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ited by William G Austin and S. Worchel.

Chicago: Nelson-Hall Publishers, 1986.

Tajfel, Henri. "The Formation of National Attitudes: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Interdisciplinary Relationships in the Social Sciences*. Edited by Muzafer Sherif and C. W. Sherif Chicago: Aldine, 1969.

Wagner, Ulrich, Julia C. Becker, Oliver Christ, Thomas F. Pettigrew, and Peter Schmidt. "A Longitudinal Test of the Relation between German Nationalism, Patriotism, and Outgroup Derog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8, no. 3. 2012.

3. 기타자료

『리얼미터』.

『중앙일보』.

『주간조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e-나라지표 <www.index.go.kr>.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plato.stanford.edu>.

박 준. "한국 사회 갈등 현 주소."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2013.8.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 | |
|---------|--|-------|
| 2016-01 |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 통일연구원 |
| 2016-02 |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 통일연구원 |
| 2016-03 |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

통일나침반

| | | |
|---------|----------------------------|-----------------|
| 2016-01 |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합의 | 이 석 |
| 2016-02 |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 김갑식 외 |
| 2016-03 |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 2016-04 |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 2016-05 |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
| 2016-06 |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 2017-01 |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 통일연구원 |
| 2017-02 |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 홍 민 외 |

KINU Insight

| | | |
|---------|--|-------|
| 2017-01 |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 홍 민 |
| 2017-02 |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 전병근 |
| 2017-03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 박영자 |
| 2018-01 |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 홍 민 외 |

북한인권백서

| | |
|---|---------------|
| 북한인권백서 2016 | 도경옥 외 18,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 도경옥 외 22,5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7 | 도경옥 외 2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 도경옥 외 24,5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8 | 한동호 외 20,000원 |
|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 도경옥 외 24,000원 |

연구보고서

2016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 | | |
|---------|---|------------|---------|
| 2016-01 |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 정성윤 외 | 14,000원 |
| 2016-02 |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 이기태, 김두승 | 6,500원 |
| 2016-04 |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 정구연, 이기태 | 6,000원 |
| 2016-05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 오경섭, 이경화 | 8,000원 |
| 2016-06 |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 이규창 | 8,000원 |
| 2016-07 |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박주화 외 | 12,000원 |
| 2016-08 |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홍우택 외 | 7,000원 |
| 2016-09 |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 김석진, 홍제환 | 8,000원 |
| 2016-10 |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 박영자 외 | 13,000원 |
| 2016-11 |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조한범 외 | 9,500원 |
| 2016-12 |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 임예준 외 | 8,500원 |
| 2016-13 |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 김진하 외 | 7,000원 |
| 2016-14 |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 조한범 외 | 7,000원 |
| 2016-15 |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 도경욱 외 | 14,000원 |
| 2016-16 |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 이기현 외 | 8,000원 |
| 2016-17 |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 김수암 외 | 8,500원 |
| 2016-18 |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 김수암 외 | 15,000원 |
| 2016-19 |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 신종호 외 | 16,500원 |
| 2016-20 |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 12,000원 |
| 2016-21 | 2016년 통일예측시계 | 홍우택 외 | 7,000원 |
| 2016-22 |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 박종철 외 | 19,000원 |
| 2016-23 |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 홍민 외 | 12,000원 |
| 2016-24 | 북한 전국 시장 정보 | 홍민 외 | 13,000원 |
| 2016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 7,500원 |
| 2016 |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 홍석훈 외 | 9,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16-01 |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 정구연, 민태은 |
| 2016-02 |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 신종호 외 |
| 2016-03 |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 임강택, 이강우 |
| 2016-04 |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Study Series〉

| | | |
|---------|--|--------------------------|
| 2016-01 |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 Park, Hyeong Jung et al. |
| 2016-02 |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 Lee, Ki-Hyun et al. |
| 2016-03 |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 Cho, Han-Bum et al. |
| 2016-04 |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 Kim, Jin-Ha |
| 2016-05 |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 Kim, Soo-Am et al. |

2017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 | |
|---------|---------------------------------------|-----------------|
| 2017-01 |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 이규창 외 11,500원 |
| 2017-03 |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박주화 외 12,000원 |
| 2017-04 |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 통일담론의 모색 | 이상신 외 8,500원 |
| 2017-05 |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 민태은 외 9,500원 |
| 2017-06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 민태은 외 13,000원 |
| 2017-07 |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 조한범 외 7,500원 |
| 2017-08 |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 홍민 외 7,000원 |
| 2017-09 |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 임강택 8,000원 |
| 2017-10 | 한반도 평화체제 구성과 대북정책 | 정성윤 외 8,000원 |
| 2017-11 |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 조영아, 최은영 9,500원 |
| 2017-12 |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 임강택 외 12,000원 |
| 2017-13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 김상기 외 11,000원 |
| 2017-14 |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 정구연 외 7,000원 |
| 2017-15 |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 한동호 외 7,500원 |
| 2017-16 |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 임예준, 이규창 9,000원 |
| 2017-17 |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 박영자 13,000원 |
| 2017-18 |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 홍제환 7,500원 |

| | | | |
|------------|---------------------------------|------------|---------|
| 2017-19 |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 홍민 | 6,000원 |
| 2017-20 |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 정성윤 | 6,500원 |
| 2017-21-01 |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 전병곤 외 | 9,500원 |
| 2017-21-02 |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 전병곤 외 | 9,500원 |
| 2017-22-01 |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 현승수 외 | 10,000원 |
| 2017-22-02 |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 현승수 외 | 9,500원 |
| 2017 |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 13,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17-01 |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 이규창 외 |
| 2017-02 |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 조한범, 이우태 |
| 2017-03 |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 이상신 외 |
| 2017-04 |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 임강택, 홍제환 |
| 2017-05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 이규창 외 |

〈Study Series〉

| | | |
|---------|--|----------------------------|
| 2017-01 |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 Chung, Sung-Yoon et al. |
| 2017-02 |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 Rim, Ye Joon et al. |
| 2017-03 |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 Chung, Kuyoun · Lee, Kitae |
| 2017-04 |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 Kim, Soo-Am et al. |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 | | | |
|---------|-------------------------------------|-------|---------|
| 2018-01 |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 박주화 외 | 19,000원 |
| 2018-02 |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 이규창 외 | 14,000원 |
| 2018-03 |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 성기영 외 | 10,500원 |
| 2018-04 |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 이기태 외 | 9,000원 |
| 2018-05 |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 이기태 외 | 8,000원 |
| 2018-06 |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 현상백 외 | 12,000원 |
| 2018-07 |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인식 | 이상신 외 | 11,000원 |
| 2018-08 |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 조한범 외 | 8,000원 |
| 2018-09 |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 박영자 외 | 11,500원 |

| | | | |
|---------|------------------------------------|-------|---------|
| 2018-10 |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 임강택 외 | 9,500원 |
| 2018-11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 김진하 외 | 9,500원 |
| 2018-12 |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 홍제환 외 | 9,000원 |
| 2018-13 |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 이우태 외 | 11,000원 |
| 2018-14 | 북한의 핵전략 분석 | 홍우택 외 | 6,500원 |
| 2018-15 |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 도경옥 외 | 10,000원 |
| 2018-16 |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총괄보고서) | 김상기 외 | 5,500원 |
| 2018-17 |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 정성윤 외 | 21,000원 |
| 2018-18 |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 이기태 외 | 12,000원 |
| 2018-19 |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 홍민 외 | 20,500원 |
| 2018-20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 김상기 외 | 10,000원 |
| 2018-21 |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 한동호 외 | 14,000원 |
| 2018-22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 박영자 외 | 13,500원 |
| 2018-23 |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 오경섭 외 | 12,000원 |
| 2018-24 |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 정은이 외 | 9,500원 |
| 2018-25 |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 신종호 | 8,500원 |
| 2018-26 |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 신종호 외 | 12,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 | |
|---------|----------------------------------|-------|
| 2018-01 |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 박영자 외 |
| 2018-02 |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 민태은 외 |
| 2018-03 |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 서보혁 외 |

〈Study Series〉

| | | |
|---------|---|---|
| 2018-01 |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
| 2018-02 |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
| 2018-03 |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 Hong, Jea Hwan |
| 2018-04 |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
| 2018-05 |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 Park, Young-Ja et al.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2016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 통일연구원 |
|------|----------------------------|-------|

| | | |
|------|----------------------------|-------|
| 2017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 통일연구원 |
| 2018 |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 통일연구원 |

논총

| | |
|--|---------|
|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 10,000원 |

기타

| | | |
|------|---|----------------------|
| 2016 |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 한동호 외 |
| 2016 |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 Han, Dong-ho et al. |
| 2016 |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 도경옥 외 |
| 2016 |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 Do, Kyung-ok et al. |
| 2016 |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 이애리아 외 |
| 2017 | 북한 내 이동의 자유 | 한동호 외 |
| 2017 |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 Han, Dong-ho et al. |
| 2017 |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 이애리아 외 |
| 2018 |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
| 2018 | 북한의 건강권 | 이금순 외 |
| 2018 |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 Lee, Keumsoon et al. |
| 2018 |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 김진하 외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